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실패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실패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학 기획총서

- 1_ 언론에 비친 민선 5~7기
사람 중심 도시 수원시 만들기 12년의 발자취
- 2_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수원 청개구리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행정
- 3_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실패기’를 쓰고 싶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006 [여는 글] '염태영의 실패기'를 쓰고 싶었다

I. 휴먼·시민참여

- 013 휴먼시티 수원,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 022 휴먼주택, 복지 사각지대에 현미경을!
- 031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경제
- 043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문, 거버넌스

II. 건축

- 063 수원시립미술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 072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 산업의 중심!
- 079 미래도시의 조건! 공연장과 도서관
- 087 근대문화거리의 중심, 부국원과 오주석의 서재
- 095 도시의 역사를 살리는 뉴트로 사업
- 104 수원의 심장, 팔달구를 살리자!

III. 교육·건강

- 117 신흥초등학교는 왜 광고로 이사했을까?
- 124 학교 사회복지사,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은 뭘까?
- 131 한국의 복지 정책을 바꾼 무상급식
- 143 감염병 사태의 교훈

IV. 환경·통합

- 159 환경수도를 만드는 몇 가지 조건
- 166 환경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탄소중립
- 174 수원천 살리기의 목표는 자연하천
- 184 시민농장, 당수동에서 왜 탑동으로 옮겼을까?
- 192 산수화, 끝내 이루어야 할 큰 꿈!

V. 교통

- 205 생태교통, 자동차가 사라지면 동네가 살아난다!
- 213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기능을 모으면 벌어지는 일
- 222 사통팔달 수원의 교통정리
- 231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트램, 그리고 아쉬움

VI. 문화·스포츠

- 241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잇다
- 250 시민들이 즐기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순 없을까?
- 261 프로야구 10구단의 위대한 탄생, 그 숨은 이야기
- 270 4대 스포츠 종목을 갖춘 프로 스포츠의 도시
- 282 국제자매도시, 진정한 교류를 꿈꾸다!

- 290 [닫는 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
민선 5~7기 수원시정에 대한 단상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실패기'를 쓰고 싶었다

어느새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0년 7월 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취임식을 했던 벽찬 순간이 생각난다. 지난 1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정책만 정리해 봐도 20개 분야에 걸쳐 259개 사업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업이 있었다.

민선 5~7기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정책은 무려 57개 사업이 있었다. 또, 2011~2021년 동안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수상한 내역만도 75회나 되었다. 참 엄청난 성과이다.

민선 5~7기를 거치며 나는 매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세웠다. 민선 5기에는 수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았다. 내가 부임할 당시 수원시는 전국 기초 지방정부들 중에 청렴도 꼴찌, 부채는 1위로 2류 도시로 전락해 있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없고, 당연히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도 없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육교와 고가도로는 많이 만들었지만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수원역 주위에는 정작 제대로 된 투자나 개선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도시, 2류 도시에서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하고 도시의 품격을 살려야 한다는 중심 목표를 세웠다.

우선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는 수원, 오산, 화성 통합(줄여서 산수화)이고, 두 번째가 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공항 이전을 계획했다. 산수

화 통합은 결국 실패했지만 두 가지는 성공했다. 2014년에 우리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권을 받았다. 또, 2014년에 수원고법 유치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민선 5기의 큰 성공이었다. 그리고 처음 출범할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도 성공했다.

민선 6기 때는 회복된 자존심에 제대로 된 채색을 해야 했다.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생태 교통사업 성과를 모아서 환경수도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확대했고,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복원은 우리 도시에 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큰 기폭제가 되었다. 또, 광역행정에 준하는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새로 만들었다. 수원 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등을 설립해서 보다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민선 7기에는 수원시를 자치분권의 선도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모든 지방정부들의 숙원인 자치분권의 과제들을 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통과, 재정분권 진전, 복지대타협 같은 일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했던 수원특례시를 민선 7기가 되어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한 것도 큰 성과였다. 그러나 민선 7기에 꼭 해야 될 일 중에 무가선 저장 트램 도입이 있었는데, 시범 도시 선정에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되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선 8기에서 도시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꼭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난 1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 책은 자랑이나 홍보 같은 자화자찬을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내가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을 기록한 '염태영의 실패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업의 출발점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았고, 수원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한 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 아쉬운 점 등을 정리하고 싶었다.

나의 실패기가 그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시의 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 늘 응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시민들이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 사업은 왜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휴먼시티는

바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모델이 없었는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꽤 많다.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휴먼 · 시민참여

휴먼시티 수원,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휴먼주택, 복지 사각지대에 현미경을!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경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문, 거버넌스



원천동 어린이집 개원(2011.10.06.)

휴먼시티 수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우리 도시 곳곳에 있는 공공건물과 공사현장 가림막, 안내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원시의 슬로건(slogan, 어떤 단체의 주의나 주장 등을 간결하게 나타낸 말)이다. 2010년 민선 5기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먼시티 수원’은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첫 번째 현장은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관행과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취임 후 나는 이런 행정의 관점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행정서비스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러 갈 때 외에는 주민들이 잘 이용하질 않는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즐겁다기보다는 오래 기다려야 해서 지루하거나 어쩐지 근엄하게 느껴지는 행정기관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을 받곤 한다.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것인데,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동주민센터를 친근하고 즐거운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상상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오는 부모들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어린이집을 찾게 되니 이곳을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것이고, 아이를 맡기면서 동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도 받고 북카페에서 쉴 수 있다면 어떨까?

2010년 수원시장의 첫 임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원천동주민센터는 막 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것을 잠깐 멈추고 이 건물에 어린이집을 넣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 무렵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많은 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이 만나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건축설계를 바꾸게 되니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예산이 더 들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대개 동주민센터는 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으니 당연히 어린이집은 2층에 입주해야 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 2층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기로 했다. 1층엔 어린이집을, 2층은 동주민센터를 배치했다.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이제 2층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민원서류는 어쩌다가 발급받는 것이지만 어린이집은 날마다 이용하는 시설이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접근하기 쉬운 1층에 자리 잡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국 최초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원천동주민센터가 탄생했다. 이것은 취임 초기 제일 처음에 한 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되었고 그 후에도 광교1·2동주민센터, 금곡동주민센터 등 세 곳이 더 생겼다. 지금은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후에도 동주민센터를 어떻게 기획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계속 되었다. 모든 관공서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위치에 북카페를 꾸미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며 얘기하거나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엄하고 딱딱한 관공서의 분위기를 바꿔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동주민센터 1층에는 북카페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원1동주민센터를 건축할 때는 책만 있던 새마을문고를 북카페로 확장시켰고 1층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의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처럼 현장에선 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저의 원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복지센터의 개념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쩐지 들어서기 부담스럽고 딱딱한 느낌의 행정기관을 극복하고 싶었다.

인권청사와 건강돌봄공간의 동거

두 번째 ‘휴먼시티 수원’의 현장은 지동 인권청사이다. 우리 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 영향평가가 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한 이 인권영향평가를 건축물에 최초로 반영한 것이 바로 지동 인권청사이다.

휴먼시티와 관련되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수원인권센터이다. 우리는 휴먼시티를 표방하고 있으니 인권 측면에서 보다 앞선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 제안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준비기구를 만들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의원, 행정 공무원, 전문가 그룹까지 함께 모여서 인권문제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 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전담기구가 생겼다. 이렇게 만든 수원인권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가 됐다. 인권센터는 다른 도시 어디에도 없었던 여러 가지 선도적인 일을 했고, 우리 시가 제안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전국 도시로 확산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를 만들게 됐다.

인권청사를 설계할 때 한쪽에는 민원실이 들어서고, 위층의 한쪽 전체에는 새마을문고가 배치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문고는 주민센터 청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들어섰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좋은 도서관이 곳곳에 생겼다. 공공건물의 가장 좋은 공간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문고를 만들어도 정작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우 적었다.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고 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동주민센터가 신축될 때마다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속앓이를 하고 있어서 지동 인권청사를 지을 때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바꿔 보자고 생각했다. 당연히 새마을문고에 관련된 분들이 반발을 했다. 개혁은 언제나 힘든 법이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의를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공공기관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시는 일 년 전에 이미 전국 최초로 영통구보건소에서 치매예방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우리 시를 방문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약속 사업이고, 그 모델이 수원에서 시작됐으니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직접 시연하셨다.



지동 인권청사 개청
(2021.11.29.)

그렇게 우리 시의 4개구 보건소에 치매예방센터가 있는데, 정작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멀리서 찾아오는 길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 치매예방을 위한 공간도 동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동은 접근성이 제일 좋고 인권청사는 신축으로 세워졌으니 이용률이 낮은 새마을문고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돌봄공간’이 들어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보건소가 앞장서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열고,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섬세한 관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어져 온 관행을 깨는 건 역시나 참 어려운 일이다. 새마을문고는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지동에 있는 창릉마을창작센터 1층으로 옮기기로 협의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복지센터의 개념이 아닐까? 행정 서비스는 점점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스한 햇별이 잘 들어오는 공공건물의 넓은 1층 공간 좋은 곳에 어르신들이 와서 차 한 잔 하다가 건강돌봄공간에서 여는 프로그램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참여자의 수도 늘어나는 여러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휴먼시티의 핵심 관점이라고 생각했다.

YES! 생활민원처리반

세 번째 휴먼시티 수원의 현장은 바로 ‘맥가이버 차량’ 출동이다. 살다 보면 살

림살이가 점점 고장나서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고,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며칠 내내 불편을 겪기도 한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이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고장도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나오질 않아 큰 불편을 겪고, 변기의 밸브 하나 잘못되어도 수리하지 못해서 심한 냄새가 나고, 겨울에 문풍지 하나 잘못 붙이면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한다. 전문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치면 되지만 출장 한 번에 5천 원, 만 원씩 받는데 그 돈이 없거나 두려워서 고치질 못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수리기사 부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름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예스!’ 하고 달려가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출동하는 것이다. 일명 ‘맥가이버 차’라고 이름 붙인 수리차량에는 다양한 공구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출동해서 깔끔하게 고쳐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 계층과 네 자녀 이상 가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수원시 휴먼콜센터로 전화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기술자가 출동한다. 전기와 전자제품, 배관, 소규모 집 수리, 보일러 수리, 도배 등 각 분야 전문기술자들이 수리 요청한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수리와 가전제품 점검 등을 해 주고, 창문틀과 타일 보수, 도배 등 온갖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방충망 설치, 에어컨 냉매 충전, 해충 방제 등을 하고, 겨울철에는 보일러 점검, 단열 작업 등 계절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사홈서비스’는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3만 7,289가구(2021년 12월 기준)가 도움을 받았다. 꽤 많은 일을 해결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한다. 가까운 동네에 철물점이 있고 수리기술을 가진 전문가도 있지만 여러 사정상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생활민원처리반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형광등이 나가면 그걸 못 고쳐서 몇 날 며칠을 어두운 곳에서 불편해 하는 분들에게 등을 교체해 주고, 낡은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도배와 장판을 깔끔하게 해 주기도 했다. 혼자 살면서 거동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행정에서 찾아와 무료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니 얼마나 고맙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행정이 움직여야 하는 휴먼시티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런 모델이 없었는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반짝 주목받으면서 전국으로 홍보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했는데 지금은 이런 복지가 일상화됐다.

이런 정책은 사람 중심 관점에서 생각해 본 내 생각을 반영한 것인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늘 반대에 부딪혔다. “이전 사례가 없다.”거나 “이렇게 바꾸면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든다.” 등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늘 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그런 저항이 생겼던 것이다.

그런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시하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끝까지 쟁기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았다. 그렇게 2~3년이 지나면 비로소 새로운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휴먼시티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복지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YES! 생활민원처리반 출동차량시연
(2012.04.17.)

휴먼주택, 복지 사각지대에 현미경을!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종합 출산율이 전국은 0.84이고 수원은 0.80이다. 우리 시는 인구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TF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구 관련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개 우리는 출산율이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출산을 많이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계자료는 그 반대였다. 2019년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을 보니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9명,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는 0.77명,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가 0.70명, 1억 원 이상은 0.58명이었다. 이렇게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자녀 출생률이 더 낮았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정반대였다.

그 까닭은 직업이 전문직화되면서 거의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젊은 층에게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수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료를 쫓 찾아보니 놀라운 통계가 있었다. 당시에 자녀 8명을 가진 집이 한 집 있고, 일곱 명 자녀를 가진 집이 세 집이었다. 이 자녀 7명이 있는 세 가정 중에서 다시 임신을 한 경우가 두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 7명이 있고 다시 임신을 한 집을 먼저 조사를 한 뒤 그 두 곳 중 한 가정을 내가 직접 찾아갔다. 그 집은 반지하에 방 두 개이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며 살고 있었다.

아이들의 부모는 4대이고 내가 찾아갔을 무렵에는 임신한 아이를 낳아서 여덟 자녀가 있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부터 어린 아기까지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고 아이들은 밝게 자라고 있고 우애도 정말 좋았다. 아이들의 엄마는 스무 살 무렵에 첫 아이를 낳고 사십 대까지 아이들을 차례차례 낳은 것이다.

이 집에서 참 재미있는 시스템을 발견했다. 벽에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걸어 놔는데, 아이들이 내일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이나 물품 같은 것을 각자 적으면 부모가 그것을 보고 일괄적으로 사거나 구매 준다고 했다. 그리고 큰아이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다시 더 어린 동생을 챙기는 것이 마치 시스템처럼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반지하라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리 좋지는 못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건강하고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면서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넉넉하진 않았다. 아이들이 여덟 명이나 되니 생활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수입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아니었다.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져 보면 해당되는 게 없는 가정이었다.



다자녀 가구 방문
(2018.04.11.)

우리 시가 복지 혜택을 넓혀서 열심히 지원을 해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많아서 다복한 가정이지만 삶의 질과 인간 생존 조건으로 보면 너무 열악했다. 국가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우리 시가 이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했다. 아이들이 여덟 명이나 되는 가정은 적어도 방이 세 개는 필요하다. 엄마와 아빠의 방이 있고, 남자 아이들의 방과 여자 아이들의 방으로 나눠야 한다. 각 방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책상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두 개는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성인들이 사는 집이라면 이렇게 좁은 집에 열 명이 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가능한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20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소득이 낮고 무주택자이고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덟 자녀의 따뜻한 새 보금자리 찾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으로 정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부모와 상의하면서 새 집의 조건을 몇 가지로 정해 봤다. ‘첫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이 많아서 층간소음이 걱정되니 1층으로 구한다. 셋째, 집이 크진 않더라도 방이 3개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 27평가량은 되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을 부모들과 우리 시의 담당자가 함께 찾아보면서 정한 뒤

에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줬다. 내가 방문했던 8자녀의 집뿐 아니라 8자녀를 둔 다른 집들까지 모두 이렇게 지원해 줬다. 한 집당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3,300만 원가량씩 지원해서 말끔하게 수리했다. 이처럼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은 40가구를 지원했고, 8자녀가 있는 가정부터 지원해서 현재 5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지원을 마쳤고 4자녀가 있는 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도 7가구가 추가로 입주했는데, 이처럼 우리 시는 다자녀 가정이 편안히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우리 시의 정책에 따라서 2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지금은 우리 시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같이 협업해서 다자녀 출산 가구에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휴먼주택은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안으로서 꽤 괜찮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시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LH가 보유한 자원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최장 20년간 빌려서 쓰는 걸로 발전시켜 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 시의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약 200호이고,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하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200호를 목표로 하면 1년에 20호씩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LH 자원을 활용하면 3~4년 이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또, 4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쿠폰을 지급하여 학원비를 지원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도 하여 다자녀 가구는 우리 사회가 책임진다는 본보기를 만들려고 했다. 말 그대로 휴먼주택이다. 이렇게 해야 보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긴급 비상주택을 마련하라!

우리 시에서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게 있다. 내가 시장이 된 후 이런 사례를 알게 되었다. 어느 가정의 형편이 괜찮았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는 아이들과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빚쟁이는 날마다 쫓아오고 살림살이는 거덜나고, 전세 사는 집도 다 뺏겨서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고 얼마 안 되는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모두 타버리는 일을 겪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가서 집을 구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 묵을 곳조차 구하질 못했다. 이처럼 실제 구호가 필요하지만 구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자2동에 있는 빌라를 시에서 매입하여 깨끗하게 수리하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분들이 살 수 있게 했다. 다가구 주택으로 된 이 빌라는 19가구가 살 수 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몇 년 동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했다.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큰일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준비기간 동안이라도 머물 수 있는 비상주택이자 긴급 비축주택 같은 개념이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수원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 역시 휴먼주택에 포함되었다. 이 조례에는 휴먼주택의 용어가 다자녀 주택과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구호용 주거로 구분되어 있다.

휴먼서비스센터의 맞춤형 통합 솔루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몇 가지 더 있다. 첫 민선 5기의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님 보세요'와 '칭찬합니다' 방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글을 내가 직접 읽고서 일일이 답을 했다. 매일 그렇게 하니 잠을 못 잤다.

어느 날 새벽에도 시민이 올린 글을 읽다가 펄펄 울고 말았다. 어떤 여성분이 쓴 절절한 사연이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탁소 겸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가 조기전역을 하고 집에 있는데 외출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아들 외에도 자녀는 둘이 더 있었다.

내가 찾아가 보니 세탁소를 하다 말아서 벌이도 못하고, 짐이 잔뜩 쌓여 문도 잘 열리지 않는 집에는 난로의 석유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족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고 한눈에 보기에 생활이 매우 어려워 보였다. 세탁소의 안쪽에 조그만 안채가 있는데, 그곳에 20대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저에게 보여 주질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취직도 못하고 어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들을 외부에 소개도 못하고 투병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이 여성은 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런 처지를 알게 된 나는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조용히 관련된 기관에 얘기해서 아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연결하고, 이 여성분에게 당장 최소한의 벌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분을 지원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생각한 것이 바로 휴먼서비스센터이다. 보건과 복지 업무가 부서별로 분화되어 있어서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먼서비스센터는 한 사람의 사례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휴먼서비스는 하나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나 접수가 들어오면 그 사례에 해당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전문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구호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사례를



수원휴먼서비스센터 개소식
(2011.11.10.)

놓고 솔루션위원회가 먼저 해결 방법을 찾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지 우리 시의 통합 사례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개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없어서 단발성으로 지원을 하는 식이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상황만 해결할 뿐,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휴먼서비스센터는 우리 도시를 휴먼시티의 개념으로 놓고 복지체계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는 휴먼서비스센터는 지금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더욱 발전되어 있다. 민·관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구성·운영,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관리 지원, 민·관 사례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5기 때 우리 시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은 일반화되었다. 이후에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사업이 생기면서 돌봄에 이런 사업을 모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사업이 옳다고 생각해서 휴먼서비스센터를 계속 유지했다.

이 휴먼서비스센터는 내가 민선 5기 때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가 처음 시도한 사업을 몇 년가량 준비해서 진행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로 곧 퍼져 나가고 국가사업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휴먼서비스센터가 더욱 촘촘한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따뜻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경제

경남 남해의 바람흔적미술관을 찾아간 적이 있다. 산 중턱의 저수지 근처에 있는 작은 미술관인데, 이곳은 조각가가 만들었다고 한다. 독특하게도 미술관 입구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걸려 있었다. 일 년 중 어느 한 달 동안에 작가가 이 미술관을 사용하고 싶다고 화이트보드에 기간을 기록하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매달 말일에 와서 이전에 미술관을 사용한 사람에게 열쇠를 인계받은 후 한 달 동안 자신의 작품을 걸어 놓고 전시하면서 미술관을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 누구나 와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방문객들은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미술관 옆에는 아주 예쁜 카페도 있다. 이곳에는 잔디밭이 있고 저 멀리 바라보면 저수지도 보였다. 이 카페에는 향이 좋은 커피와 커피머신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커피를 타서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다. 커피머신 옆에는 상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는 방식이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커피도 타서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남 남해의 바람흔적미술관

사진출처: 남해군 문화관광과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돈 상자도 인계해 주는 것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 보니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도 꽤 괜찮고, 밖에서 바람개비가 돌면서 나는 소리도 아주 경쾌한 음을 냈다. 누가 이런 미술관을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참신한 발상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니 미술관 위쪽에 예쁜 집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풀을 깔고 있었다. 여쭙 보니 그분이 바로 미술관을 지은 분이였다. 강원도에 먼저 지은 미술관도 있어서 남해는 두 번째로 꾸민 미술관이고, 이곳 남해에 조각공원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발상이 참 놀라웠다. 이처럼 미술관도 공유하는데 우리도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공공청사 시민 공유 아이디어를 냈다. 행정복지센터는 모임을 할 수 있는 회의실 등 좋은 공간이 있지만 저녁 6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일제히 문을 닫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터에서 돌아와서 지역사회의 일과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6시 이후가 된다. 정작 퇴근 후에 크고 작은 모임을 하려는 시민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저에게 얘기하였다. 이런 활동을 공공청사에서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정복지센터를 적어도 밤 10시까지의 개방하고, 그 외 공공청사 개방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하면 문을 열어 주자고 했더니 직원들의 반발이 컸다. 심야시간까지 누가 지키고 관리하며, 거기에 드는 부수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과근무는 직원들에 대한 수탈이다 등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6시 이후에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해서 청사를 지키게 하고 밤 10시 끝나고 시민들이 돌아가면 시건장치(금고 등에 설치하여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청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얘

기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생각으로 좀처럼 추진하질 않았다.

우리 시의 건물 중에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다.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도서관, 교육관, 청소년 시설 등 106개 기관에 강당 및 회의실 156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건물과 예산 등은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시민들에게 공공청사 공유에 대해 얘기하면 곧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작 사무실을 빌리려고 하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시장이 공공청사 공유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현재 공무원 체계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모든 공공의 회의실과 공연장, 동아리실 등을 사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스스로 신청서를 쓰게 하고, 사용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최소한의 금액이겠지만 책임성 부여를 하게 하는 것이다. 또, 행정복지센터 한 곳만 개방하는 것보다 전체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어떤 사람은 넓은 시청 대강당을 원할 것이고 구청 회의실이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 모임이나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할 텐데 이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결정했다.

그러나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책임성의 문제와 초과근무의 문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해도 공무원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시행할 방법이 없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공공건물을 개방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곧바로 이전상태로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공공건물은 시민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참 어려웠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어 공공청사 공유는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달려라, 공유자전거

이런 실패도 있었지만 잘 추진된 공유경제 사업도 있다. 내가 처음 시장이 되어 시작한 공유경제 사업은 KT와 추진한 카셰어링(car sharing, 자동차를 빌려서 함께 타기) 사업이다. 초기에는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개념을 생소하게 여겼지만 나는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일 먼저 수원시청부터 카셰어링 자동차를 비치하고 이어서 구청에서도 시작했고, 수원역도 거점이 되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려면 이곳으로 가야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사업이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가 먼저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더욱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 카셰어링은 기차역이나 주요 관광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셰어링 사업에 이어서 공유경제를 추진했다. 민선 5기 때 다른 지자체에서 공유경제가 주목받으면서 여러 가지 성패가 있었다. 장난감도서관도 공유경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지동에 있는 창릉마을창작센터에서 하는 공구 대여도 있죠.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공유냉장고 사업도 있다.

이 중 공유자전거 사업은 꽤 성과가 있었다. 창원과 안산, 서울 등에서 스테이션(station,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공유자전거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공유자전거는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스테이션을 수천 군데에 만들어야 하고 계속 운영하려면 관리비가 들고, 계속 자전거 수리도 해야 하고 자전거도 그 시스템에 맞게 제작을 해야 했다. 창원시는 처음에 몇백 억 원이 들고 일 년에 몇십 억씩 계속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환경도시로 만들려면 공유자전거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김미경 시의원이 찾아와서는 화서동에 사는 분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더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 우리 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을 중국으로 출장 보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는 무선통신 서비스 및 GPS(위치 파악 시스템), 자동 잠금 해제,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IOT(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를 탑재하여 별도의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자전거는 돈이 적게 들지만 문제도 있더라고 직원들이 보고했다. 스테이션이 없으니 자전거가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나는 전국 최초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으니까. 자전거를 함부로 방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는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곳곳에 방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문제가 불편해지면 시민들과 자율적

으로 해결할 방법도 찾게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하기로 했다.

수십 억 예산이 필요한 ‘스테이션이 있는 공유자전거’는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하기 직전에 중단시키고, 예산이 보다 적게 드는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로 사업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사업에는 모바이크(Mobike)와 오바이크(Obike) 2가지가 들어왔는데, 오바이크는 금세 이용률이 떨어졌고 모바이크만 살아남았다.

모바이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타보니 힘이 좀 들었다. 우리나라 지형은 둔턱이 있어서 자전거로 올라가려면 기어가 있어야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모바이크는 이런 것 없이 단순했다. 그리고 공기를 넣은 타이어가 아니라 생타이어라서 탄력을 흡수하는 것이 부족했다. 어쨌든 단순한 구조지만 어디서나 빌려 타고 반납하는 편리성 때문에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용한 이동수단이 됐다.

처음에는 시민의식을 믿고 추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급하나 걱정스러웠는데, 차츰차츰 퍼져 가입자 32만 7,251명, 누적이용 횟수 544만 2,096회에 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역시나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하천변에 그냥 버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오산까지 타고 가기도 하고, 평택까지 가져다 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잘 지켜 줬다.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도 위치추적기가 있어서 찾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다시 타고 우리 시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이 자전거는 우리 시에서는 수지가 맞았다고 한다.

나중에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준 김미경 시의원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다. 스테이션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면 수십, 수백억 예산이 필요한데, 의원님 덕분에 예산을 아끼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그러자 김미경 시의원은 자

전거에 어울리는 헬멧 디자인까지 고민하면서 ‘이 형태가 좋다., 저 형태가 좋다.’ 등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계속 냈다. 그중 괜찮은 디자인도 나왔고 수원청개구리 모양의 헬멧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모바이크 본사에서 자전거를 결국 철수해 버렸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전거를 모두 되가져가게 되었다. 중국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꽤 골치가 아팠다고 했다. 모바이크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KT를 설득해서 공유자전거 타조(TAZO,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를 시행했다.

그런데 모바이크 사업이 중지되고 새로운 타조가 들어오기까지 2년간 공유 자전거 사업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 사이에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 들어왔고, 청년들은 이것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 PM은 몇 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하는데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타조 이용률이 떨어지겠다고 걱정했는데, 타조 이용률도 제법 높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주위에서 누가 타고 다니나 싶었는데 타조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우리 시에서는 PM도 성공하고 있고 다행히 타조도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둘 다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행궁광장에 무인대여 자전거가 진열된 모습

좌절된 사회적 경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벤처산업을 많이 육성했다. 그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이웃을 돕고 이익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시에서도 용역사업 형태 등으로 발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사회적 기업을 하나하나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직원도 퇴직하면 퇴직기업을 만들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상당기간 안착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활용하라고 열심히 안내했다. 시청의 과별로 한두 개씩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할 정도로 적극 밀었다.

2010년도 첫 취임한 뒤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예전 민노당 등 진보정당 계열의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이분들이 사회적 이슈를 계속 제기했고 열의와 전문성도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진보진영 사람들을 책임자로 임명했고, 다들 각자 자리에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시가 폭탄을 맞았다. 2013년 RO(지하혁명 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이 터졌다. 두 센터에서 각각 활동하던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는 엄청난 시련을 받았다. 매일같이 신문에는 수원시가 이 적단체에게 68억 원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신문 헤드라인이 나왔고, 수원시장은 곧 구속될 것처럼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안부

를 물어왔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너무 기가 막혔다. 나는 이 사건으로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68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RO사건으로 잠적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돈을 쓰진 않았다. 업무추진비도 있었지만 일 년에 몇만 원도 쓰지 않았을 정도였다. 이 사람들은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털어 봐도 이 센터들과 우리 시 사이의 비리는 없었다. 수원시장이 이적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조사해 보니 공식적인 절차로 집행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014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로 이 기구들은 더 이상 정상 운영을 하질 못했다. 그렇게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 사업도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 다들 검찰조사를 받고 위축되어서 사회적 경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해야 되니 그나마 기능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었다. 지금은 동남보건대학교에서 그 일을 맡고 있고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 경제 사업은 우리 시의 중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사업이었는데 전국을 뒤흔든 RO사건의 여파가 너무나 컸다. 예기치 못한 일로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다.

년 수원의 길을 묻는다

민의 시대, 시민의정부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문, 거버넌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 중심이었다. 정책기획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일을 실행하는 조직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정부는 없었다. 지자체는 중앙에서 ‘떨구는’ 일을 하는 곳이고 그 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예산도 내려주면 적절히 쓰고 그걸 보고하는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정부가 꾸려지는 1948년부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까지 40년 가까이 그렇게 해 왔다. 일종의 거버먼트(government)라고 하는 행정의 영역은 통치라는 개념이었다. 시민은 관리와 계도의 대상이었다. 이때는 시민이라는 의식이 없었고 동네 주민이라고 했고, 국민이라는 개념만 있었다. 1980~1990년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도 이때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민중이냐, 부르주아냐 그런 개념으로 있었다. 의식의 주체인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다.

1990년 초 나는 시민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80년 대학을 입학한 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학생, 엘리트 운동가 등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때 화이트컬러이자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집회와 거리 시위에 적극 나서면 넥타이 부대들이 박수를 쳐준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지와 응원에도 모두들 깜짝 놀랐다. 직장인들은 대개 늘 수세적이고 보수적이고 집단의식에 안주되어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라는 낙인이 찍히면 굉장히 큰 고초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일이지 직장인들은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하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구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자신들도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었다. 택시기사들도 경적을 뽕뽕 울리며 경적 시위에 참여해서 모두가 감동하기도 했었다. 이런 참여가 기폭제가 되어 1987년 6월 항쟁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놀랐다. 그전에는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할 때 몇몇 사람들끼리 숨어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처럼 거리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처럼 고난과 고문을 각오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것이 시민의식의 첫 출현이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안정된 계층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우리와 생각이

같고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공감대와 동지에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공해추방연합(현재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시민운동사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주요 사회이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전에 정치권에서 주고받던 발언들과는 사뭇 다른 색깔이었고, 정경유착 같은 경제 비리나 노동자들의 권리와 소외된 사람들, 환경오염 문제 등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으로 부각될 수 있고, 나와 같은 생각들이 많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자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전유물 같은 것이었다. 지방자치라고 이름 붙였지만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되는 사람은 우리와는 먼 사람이었다. 간혹 진보적인 단체에서 후보를 추대해서 당선시켜 보자는 운동도 있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1990년대 초반에 마을만들기 운동이 새로운 갈래로 등장했다.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살려서 우리 손으로 직접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초기에는 일본의 마치츠클리(町作り), 일본 지방도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했다. 마치츠클리는 일본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바꿔낸 것인데,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모아서 행동하고 실천하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고 마을만들기 좋은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도 시민사회에 들어왔는데, 이 주제로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주체가 필요했다. 이 주체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비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지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문구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였다. 우리는 권력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장해야 했다. 행정과 제도에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반영시켜야 하니까. 이것이 1990년대 중반까지 거버넌스(governance)의 초창기 형태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적인 가치를 놓고 주장하면 행정이 일부라도 바뀔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나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대표적으로 내가 한 것이 환경교사모임이었다. 보통 환경단체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가르치곤 하는데, 학교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사

를 먼저 만들고 교사들이 환경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범사례가 없어서 일본의 환경교사 모임과 같이 연수를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전국환경교사모임을 처음으로 수원에서 만들었다. 첫 번째 교사모임 회장이 김형인 선생이고 그다음에 임종길 선생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진행한 그룹들이 매뉴얼과 질서의식 등으로 결과물이 착착 쌓이는데, 우리나라는 열정도 있고 다이나믹한데 늘 좌충우돌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르네상스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시작되면서 거버넌스의 제일 처음 형태로 로컬 아젠다(local agenda, 지역의제)가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처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주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것의 삼자 주체는 행정과 기업과 시민사회라고 정한 것이다. 그 운동을 나는 처음부터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담당했다.

1994~1995년에 지방의제21을 만들어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1999년 무렵에는 경기도 의제를 만들고 2000년에는 전국 조직인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만들었다. 그전에는 행정조직과 시민사회가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없었다. 행정이 지시하면 시민사회

가 그걸 받아서 진행했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초보적 거버넌스를 이룬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엔 그 예산이 너무나 적었다. 동네 안에 생태연못을 만든다거나 주민들과 함께 생태교육을 진행한다거나, 우리 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지키는 운동, 하천살리기 운동, 멸종위기종 보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했다. 그것을 행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참여의 경험이 있는 나는 행정을 할 때 그 분야에 가장 열의가 있는 시민사회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2006년 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고, 2010년 첫 당선이 되자마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을르네상스'로 이름지어서 곧바로 시작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를 만들고 마을만들기 교육을 하고, 사업예산도 배정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모여서 기획하고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진행하래.”

이 마을사업 중에서 마을에 정원을 만들고 함께 꾸미는 사업이 가장 인기 있었는데, 꽃 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니 가장 반응이 좋았다. 또, 자투리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행궁동 금빛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와 지동의 노을빛음악회 등 개성 있는 사업들도 등



마을르네상스센터 개소식
(2011.06.14.)

장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수원에서 참 재미있게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너무 재미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사업이 잘 되면 전국에 금세 짝 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을만들기 조직을 만들고 시민들의 교육도 열심히 하고, 마을운동 전문가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창안대회, 현장시장실 같은 사업도 있었지만 이것은 이전에 시민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도입한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민운동 할 때부터 활동했던 것이라 나에게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공무원들은 왜 반발했을까?

예전에 해외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을 봤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고 각 분야의 시민대표들을 모아 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설득하게 한 다음, 평결의견을 받아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장면이었다. 바로 시민배심원제였던 것이다. 시민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영화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거버넌스 운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할 때도 경계선이 있거나 그 당시의 가치를 가지고 판사가 혼자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하다가 서양에서 하던 시민배심원제를 우리 시의

행정에서 반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우선 지역사회 의 포편적 상식을 가진 분들의 인력풀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갈등이나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과 함께 시민배심원제를 시행해 보기로 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시민배심원으로 추천된 분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충분히 말하게 하고,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면 양쪽 사람들이 따르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장이 결정해서 추진하자고 하면 이해당사자들 중에는 그 결정에 따를 수 없다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면 그때는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보통의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판단하는 데 분명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찬반 갈등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처럼 거버넌스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보다 더 마음을 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거버넌스 행정은 상당부분 더 넓고 깊이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늘 보수적이고 자기방어적이다. 2010년 내가 수원시장 당선자 신분일 때 ‘좋은시장준비위원회’라는 시장취임 준비기구이자 인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위원장으로 현대자동차 대표였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계안 선생을 모셨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끈 경험이 있고 좋은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이어서 초청했다. 수원시정을 어떻게 끌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도 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인수위원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드렸다. 그리고 시장에 취임한 후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4년 시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때 인수위원회를 맡았던 분들이 동석하자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서 반발했다. “아니, 저 사람들을 왜 참여시키느냐?”는 것이었다.



좋은시장취임준비위원회 활동백서 전달.
이계안 준비위원장(2010.07.07.)

공무원들에게 시민이란 중요하게 결정한 사업을 외부에 알려져 집행하는 대상 일 뿐이었다.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미리 상의를 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러면 통제도 안 되고 행정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반대를 했고 이제까지 없었던 일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지금은 여러 사업에 시민참여가 매우 많이 늘어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거버넌스라는 걸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다들 불편해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 기사가 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민참여를 강행했다. 처음 정책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보통의 생각을 가진 시민의식으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에서 적극 초청해서 의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기구가 좋은시정위원회였다. 좋은시정위원회는 내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검증기구이다. 일정한 시점마다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해 달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책과 생각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창안대회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거버넌스 사업도 추진했다.

거버넌스의 어려움

시민참여를 활짝 열어 둔 거버넌스는 좋은 의미의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효율

적이진 않았다. 왜냐하면 시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재권 자한테 보고한 후 곧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뭔가 또 한 번 걸려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불만족한 의견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다른 주장이 나오면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피곤했다. 그러니 지금 공무원들은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해도 민선 8기에 그렇지 않은 시장이 오면 예전의 행정 소통 방식으로 곧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많이 성숙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될 테니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더구나 수원은 10년 이상 시민참여 방식이 자리를 잡았으니 말이다.

2010년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경연이 펼쳐졌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단체장들이 20여 명가량 대거 당선되면서 이전까진 없었던 참신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단체장들은 이전의 시장이나 군수보다 10년 가까이 젊었고 기득권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돈 없이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만들어 준 공이 컸다. 이전에는 공천 과정에서 공천 현금을 주는 관례가 있었고 선거에 많은 돈이 들었는데, 이런 비리를 없애고 정치혁신을 만들어 준 덕분이다.

이때 혁신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에서 참신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우리 시를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공유경제와 카셰어링 사업, YES! 생활민원처리반 같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금세 다

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또, 나는 복원된 수원천을 청계천 형태가 아니라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일을 했고, 당시 이재준 제2부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과 500인 원탁토론 같은 거버넌스 사업도 추진했다.

한편,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의미 있게 추진한 사업으로 손꼽고 싶은 것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민 주체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를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했고, 시민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의미를 확고히 했다. 이전에는 시민참여 방식이라고 해도 시에서 큰 틀을 다 짜놓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의사봉만 두드리면 마무리되는 형식이었다.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이 만든 틀에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기획해서 제안하라고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시민참여의 수준이 달라졌다.

우리 식 거버넌스란 뭘까?

거버넌스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같이 민주주의가 오래되고 성숙한 사회라고 해서 거버넌스가 매우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이 얼마만큼 시정에 비중있게 검토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이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합리적 의견수렴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스위스의 일부 주(州)에서 행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2016.09.09.)

직접 민주정치 의결기구),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디지털 정치 참여 플랫폼) 같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도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시각도 가지고 있지만, 공청회에서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 의견을 취합해 가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 조율을 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공청회를 일상적으로 연다. 어떤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이해당사자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듣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를 만들 때 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공청회 전용 공간을 만들자고 했다. 의회가 하는 일이 늘 공청회를 여는 것이니까. 시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펼쳐 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공청회이다. 그래서 다수 의견을 들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청회의 여러 모델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가장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겠다. 그 지역의 공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의사 프로세스에 시민들의 10%만 참여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의 참여도 되질 않는다. 아이들의 학습에 관심 있는 학부모 모임과 종교모임,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 모임 등은 관심이 뜨겁고 모임과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시정참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우리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해져야 시민참여도 활발해지고 지자체의 정책도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와 지역에서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한국사회의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고, 국가 단위의 큰 시민주체 형성에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민선 8기에 새로운 시장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거버넌스 사업에서 중요한 좋은시정위원회와 협치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그 도시의 역할이고, 도시의 책임자인 내가
기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건축

수원시립미술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 산업의 중심!

미래도시의 조건! 공연장과 도서관

근대화거리의 중심, 부곡원과 오주석의 서재

도시의 역사를 살리는 뉴트로 사업

수원의 심장, 팔달구를 살리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내부모습

수원시립미술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건물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같은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박물관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은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이다. 대영박물관처럼 한 국가의 수도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은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화성행궁 앞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순 없다.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규모가 큰 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으니까. 행궁광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재덕 시장 시절에는 우리 시에서 수원화성을 중심에 두고 일관성 있는 시정을 폈다.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괜찮아서 행궁복원 사업을 시작하여 수원행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다음 김용서 시장 시절에는 행궁광장을 확보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우리 시의 가장 중심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010년 내가 수원시장이 되

고 보니 행궁광장 옆에 있는 땅을 사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큰 음식점과 건물도 몇 채 남아 있었고 이것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나는 뉴트로(New-tro,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말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 방식을 좋아해서 처음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구상하려고 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같은 건물이라도 1억~2억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지만, 시에서 진행하려고 건물평가를 했더니 소방법에 따라 안전시설도 갖추어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서 10억~20억 원까지 몇 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했다. 그렇게 할 순 없어서 결국 이 건물을 헐기로 했다.

이렇게 행궁광장 옆에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지으려고 구상해 보니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되었다. 시의 예산을 투자하면 미술관을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제일 우려하는 공공건축이 나올 것 같았다. 시에서 발주하면 폼나는 건축 도면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가는 마치 자신의 전매특허 같은 건축설계를 하고 시공하게 될 것이다. 또, 시공할 때마다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례대로 공사를 하면 건물 외관은 폼나게 근사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혼 없는 건물이 되고 부실한 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대기업에서 맡아서 미술관을 세우면 아주 독특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향토기업을 포함한 여러 곳에 제안을 했고,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미술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권선아이파크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얻은 이익금을 우리 시에 환원하는 형식으로 미술관을 짓고, 이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하기로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설계도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우리 시에 맞는 상징적 건물을 짓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건축설계 회사를 지목해서 설계 공모를 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설계도 3개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채택한 설계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계였다.

수원행궁은 곡선 형태의 한국의 선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각으로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현대건축물이 도저히 조화를 이루어지질 않아서 선뜻 동의를 할 수 없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으니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채택되지 않은 다른 설계도도 보자고 했더니 나는 차라리 나머지 두 개가 최종 설계도보다 나아 보였다.

좀처럼 의견을 좁힐 수 없어서 나와 최종 설계도를 만든 건축설계사,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와 함께 스페인 출장을 떠났다. 스페인 빌바오부터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미술관까지 여러 건축물을 직접 보면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된 건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에서 토론했다.

당시 출장을 함께 갔던 건축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처음 피라미드 삼각형의 입구를 세웠을 때 다들 뒤집어졌다고 했다. 도대체 이게 루브르박물관에 어울리는 모습이냐고 반대가 매우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성공적인 건축물로 유명해졌다고 한다. 에펠탑을 세울 때도 파리시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고 한다. 도심 한가운데에 해괴한 모양의 철골을 세우냐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의표(意表, 전혀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를 찢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주목받는 건축물이 되어 살아난다는 것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역시 이렇게 말했다. “시장님, 잘 납득이 안 되시죠? 그러면 내가 받은 성공한 겁니다.”라고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많은 건축물을 지은 저분(정 회장)의 감각을 믿고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 그 무렵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의 감각을 믿어 주자.’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였다.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미술관 건물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꼭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문화재청 심의에서 몇 가지 조건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을 설계도에 다 반영하니 건축물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었다.

3단계로 설계된 본래 설계도보다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행궁 쪽으로부터 50m 가까이가 줄면서 훨씬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두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곳에 ‘미술관 옆 화장실’을 만들었다. 이 화장실은 미술관과 같은 모양에 축소 사이즈로 지었는데, 화장실 뒤쪽에 청소하는 분들의 전용 공간도 만들었다. 식사도 하고 씻고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을 지을 때 처음부터 환경관리원의 심터를 같이 만드는 경우는 매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전시회
(2015.10.08.)

드물었다.

또 한 가지, 문화재청 심의에서 지적한 것은 행궁과 유사한 건축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심재덕 시장 시절에 수원화성 잇기 행사를 하면서 성곽의 끊어진 곳을 이어 주는 다리를 만들었다. 장안문 옆에 철 기둥을 세워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세울 때 성곽의 원자재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수원화성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놓은 구조물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하자면 모조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행궁 앞에 들어서는 미술관 역시 수원행궁과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건

그렇게 최종 설계도를 결정하고 그 대신 나도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옛날에 화서문부터 행궁광장까지 시내로 오는 옛길이 있었다. 그 옛길의 선을 살리기 위해서 미술관 건물을 마치 세 동으로 나눈 것처럼 하여 건물 내부에 옛길을 살렸다. 행궁광장에 마을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시내로 오고 가는 옛길이 있었는데 그 위치 그대로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단으로 나누어 길을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행궁광장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지금 미술관 앞쪽 로비가 있는 곳에 건물 전면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본래는 뒤쪽에만 설계되어 있던 유리벽을 전면에도 똑같이 투명유리로 통일시켜 달라고 했다. 건축은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에 대한 제 감각이니 나를 믿어 달라고 건축

설계사에게 요구했다.

건물의 옆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옥상을 개방하면 시민들이 이곳에서 탁 트인 행궁광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옥상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건축설계사와 같이 스페인 출장을 다니면서 친해지는 바람에 다행히 내 의견을 잘 반영해 주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와 생각할 거리는 꽤 많았다. 건축물은 노출 콘크리트로 결정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을 시공해서 직접 보고 여러 번 확인한 뒤에 결정했다. 건축 현장에도 여러 차례 나가서 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르게 찾아가서 보고 또 보면서 고민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송판 무늬에 몇 가지 타입 중 하나를 결정했고, 지금의 노출 콘크리트 송판 무늬가 된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자신의 일처럼 공사의 하자 하나 없이 일을 해 주었고,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작은 흠조차 공사장 밖으로 묻어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써 줘서 정말 감동받았다.

건축 공사를 마친 후에 내가 제안한 것도 있다. 미술관의 로비를 만들 때 이곳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기증하는 건축물이니 당신들이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포니정(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을 기념하는 공간이 생겼고, 포니자동차 모형 틀을 이곳에 기증하여 전시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퇴거가져가서 없다. 영창피아노도 기증하여 설치하고 나혜석 미술품도 구입해서 전시했다.

어느 해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직원들이 연말 기금을 1억 원 넘게 모아서 이곳에 기부하기도 했다. 기업 브랜드가 들어가니 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미술관에

애착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시도 개관을 준비할 때부터 전담팀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관을 의미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미술관 이름에 대한 논쟁

미술관 개관 무렵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시민들은 왜 시립미술관에 기업의 이름을 넣느냐고 항의했다. 미술관을 개관하는 날, 시민단체에서 참 재미난 이벤트도 벌였다. 미술관을 기업에 판다는 의미로 판다곰을 그려 놓고 ‘판다’라는 슬로건을 썼다. 정말 기발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재미난 이벤트를 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당연히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우리 시의 소중한 미술관인 만큼 그렇게 지적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 시에는 수원SK아트리움, SK청솔노인복지관 같이 기업명을 넣은 앞선 사례가 여럿 있다. SK의 전신인 선경에서 지은 선경도서관이 있고 중앙일보가 지은 중앙도서관도 있다. 나는 이런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서울대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관정관(도서관 신축기금을 기부한 관정 이종환 회장의 호를 딴 명칭)이라고 한다. 역시 서울대에 있는 호암교수회관도 있고 이화여대에도 포스코관이 있고, 이런 사례는 꽤 많이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도 이런 사례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기업에 대한 정서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걸 문제 삼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술관에 대한 이름은 내가 현대산업개발에 제안했다. 기업이 큰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우리 시에 흔쾌히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기업의 상징이 되는 이름을 붙여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로 결정했다. 그래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된 것이다. 기업의 이름이든,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 이름이든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미술관을 지어 준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미술관이 완공되었고, 지금은 미술관을 자주 보니 건축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처음의 생각은 사라지고 이젠 익숙해졌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아쉬움이 있다. 외국 출장 때 세계적인 미술관을 많이 둘러봤는데 그에 비해 우리 미술관은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맞게 충실히 지은 것이라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시에서 미술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공공 발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건축 관련 책자에도 많이 소개될 정도로 디자인 가치가 뛰어난 현대건축물이고 상당히 유명한 건물이 되었다. 앞으로 수원시립미술관이 우리 시의 자부심이자 랜드마크가 되고,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면 좋겠다.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 산업의 중심!

우리 시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시의 규모에 비해 웬만한 크기의 회의장 하나가 없었다. 큰 규모의 도시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다. 또, 시민들이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을 넘어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려면 모두 서울로 가야 했다.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회의장이나 고등법원 같은 시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게 우리의 행정적 과제였던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그 도시의 역할이고, 도시의 책임자인 내가 기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선 5기 때부터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중에 마이스(MICE) 산업도 한 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수원컨벤션센터 외관전경

이다.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과 회의나 포상관광, 전시와 박람회 등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니스 관광이라고도 하는 이 마이스 산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규모 회의장인 컨벤션센터를 세워야 했다.

심재덕 시장 시절에 이미 컨벤션센터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임창렬 경기도지사와 갈등 때문에 고양시로 컨벤션센터가 결정되고 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광고신도시를 넓게 조성하면서 드디어 우리 시에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컨벤션센터와 수원전망탑, 미니어처랜드 같은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고 핵심지인 원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구상했다. 그리고 광고신도시에 대략 13만 평 규모로 계획하고 컨벤션센터 사업은 현대건설과 협약했다. 컨벤션센터는 돈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반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철저히 경제 관점으로만 이 사업을 보면서 수원시에 컨벤션센터를 특별히 세워 줄 생각이 없었다. 경기도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하고 공공개발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철저히 고단수처럼 우리 시를 완전 쥐락펴락했다. 나는 전체 13만 평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6만 평이고, 그 중 3만 평을 컨벤션센터 부지로 쓰려고 했다. 그런데 이 6만 평을 경기도가 우리 시에 무상제공해 줘야 하는데 주지 않겠다고 했다. 공적 개발에는 이렇게 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 경기도의 의도를 문서나 내용에 감춰 놔서 나중에 우리가 주장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놔다. 우리 시가 철저히 농단을 당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는 경기도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 소송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 없었다.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우리가 졌다. 우리 시에서 협약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 놔야 하는데, 광고신도시 사업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소송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은 2년 동안이나 길게 이어졌지만 우리가 지고 말았다.

본래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컨벤션센터

경기도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된 후 경기도 부지사와 내가 협약을 했다. 개발할 수 있는 땅 6만 평 중에서 3만 평은 경기도가 갖고, 3만 평은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애초 계획은 6만 평 중에서 지금 중흥에스클래스 있는 부지 3만 평을 팔고 3만 평 부지에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짓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3만 평은 경기도시공사가 파는 것으로 결정하고, 남은 3만 평 중에서 반을 팔고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을 하게 되니 컨벤션센터가 본래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결국 이것저것 다 빼고 정리하여 우리가 받은 게 2만 1,700평이었다. 이중에 8,700평을 한화에 매각해서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등을 유치했고, 이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었는데 부지가 너무 적어서 안타까웠다.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세울 때는 1만 1천 평 부지에 지었는데, 광장 2천 평까지 포함하면 총 1만 3천 평을 활용한 것이다.

부지가 넓지 않아서 건물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갔다. 더구나 중흥에스클래스 쪽의 땅은 이후에 노다지 땅이 되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매우 아

쉽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 덕분에 컨벤션센터는 온전히 수원시의 소유가 되었다. 경기도에서 컨벤션센터는 고양시 다음으로 수원시가 갖게 되었다. 고양시의 킨텍스(KINTEX)는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의 공동지분이지만 수원시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규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어서 무척 아쉬웠다. 킨텍스는 대규모 전시관이 되었지만 우리는 국제회의장 위주의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컨벤션센터를 세우는 일을 꼭 해야 했는데, 이처럼 경기도는 끝까지 비협조적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대규모 회의장을 갖는 게 중요했고, 앞으로 좀 더 확장시키려면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으로 호수를 끼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갖지 못하는 소중한 건물을 우리 힘으로 소유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국비와 도비를 받은 게 아니라 광고개발이익금으로 우리 시가 지은 것이다. 컨벤션센터의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최대한 파생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수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무튼 광고신도시는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그때 수원도시공사를 만들지 못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있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수원도시공사를 만들 수 없었다. 이미 다른 시에서는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경기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우리도 가능해져서 수원도시공사를 만들었다. 우리가 대규모 신도시 같은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펀드레이징(Fundraising, 자금 조달)을 상당 부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후에 수원도시공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추가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엔 군 공항 이전사업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미래를 위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사실 경기도시공사는 광고신도시 개발 사업 때문에 설립되어 지금은 규모가 커진 거라고 볼 수 있다.

미래도시를 구상하는 법

우리 시는 삼성전자와 협력회사들이 상당부분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도시이고, 대도시이자 거점도시라서 대학병원 같은 대규모 시설도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부(首府,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 또는 도청소재지) 도시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를 열 수 있는 컨벤션센터까지 갖게 되었다.

2019년 3월 개관 후 수원컨벤션센터를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수원컨벤션센터의 저력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컨벤션센터를 개관하자마자 코엑스에서 열었던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고, 2021년 10월에는 4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위해 2019년 7월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마이스 산업의 선두주자인 8개 도시와 경쟁을 벌였다.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심사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개관 6개월 만에 수원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 행사장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행사는 일 년 뒤로 미뤄져서 2021년 10월에서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감염 우려가 커서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병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엔이 주관하는 최초의 대면 방식 국제회의 개최'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교통도 편리해서 정말 좋다고 했다.

서울의 코엑스는 삼성역에서부터 지하로 연결된 지하 도시를 만든 것이 참 특색 있는 공간 활용이었다. 이곳처럼 광교중앙역에서부터 컨벤션센터까지 지하로 연결시키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 구상이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인근의 상업지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CBD(중심업무지구)와 융합타운을 만들 때 컨벤션센터까지 연결하는 것을 사업 안에 포함시켰다.

미래도시를 만들 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서로 잘 유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 미래 비전을 만들 때 컨벤션센터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세워진 수원컨벤션센터가 긴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 시가 마이스 산업의 중심도시로 떠오를 수 있게 그 중심 역할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미래도시의 조건! 공연장과 도서관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핵심은 그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처음 취임했을 때 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했다. 품격 있는 도시는 도서관 확충과 인문학 도시 사업과 관련 있고, 미래 먹거리가 갖춰지는 도시는 컨벤션센터로 시작되는 마이스 산업과 관련 있다. 또, 미래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SK아트리움은 SK케미칼 공장이 이전하면서 우리 시가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 주고 그 땅의 일부를 공원으로 만든 곳에 들어섰다. 이 공원 안에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옵션으로 들어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시장으로 취임했다. 내가 당선자 신분일 때 SK뷰아트 분양사무소에 들렀고, 시장 취임 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했다.

SK뷰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SKC 공장을 이전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신청자들에게 “아파트 옆에 SKC 공장이 있고 공장 이전은 할 수 없다.”는 약속을 받게 했다. 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신청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했고 분양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다. SKC 공장을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그리고 공원 안의 문화시설은 문화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다.

수원에는 공연장이 매우 적었는데 인구 125만 명이나 되는 우리 도시에 경기아트센터(옛 경기도문화의전당) 딱 하나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수준에 맞는 공연장이 꼭 필요한데 이 공원에 들어설 문화공연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우선 새로 들어설 이 공연장은 우리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본거지가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공연장의 형태와 음향 효과 등 실제 이곳을 이용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연장의 규모와 크기, 시설, 그 외 예민한 사항들까지 다 옵션으로 넣었다. 그래서 김대진 당시 교향악단 예술감독과 함께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직접 점검하게 했다.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SK아트리움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전문적으로 공연하기 가장 좋은 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1층과 2층 좌석을 합쳐서 950석 규모가 되는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이 두 개의 공연장을 건물 안에 설계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습실과 단원들의 방을 이 공간에 만들었고, 부모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시설까지 만들었다.

2011년 SK그룹에서 이미 그전에 약속했던 것과 우리가 새롭게 옵션으로 넣은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준공 후 기부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3월에 드디어 문화공연장을 개관했다. 이 무렵에 건물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공모했는데, 이때 당선된 것이 바로 ‘수원SK아트리움’이다.

SK아트리움은 아주 크진 않지만 의미 있고 알차게 만든 공연장였다. 우리 시의 규모에서는 950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는 것도 좋았다. 이 객석을 모두 채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라면 1,200~1,300명까지 들어가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을 쓰면 되니까 말이다.

초대형 공연장 오디토리움을 꿈꾸며

SK아트리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가 예민하게 신경썼던 곳은 SK뷰아파트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방문
(2014.03.01)

단지에서 정자문화공원으로 넘어오는 다리였다. 마치 평면을 걷는 것처럼 완만한 형태의 다리가 도로 위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게 설계했다. 낮과 밤 언제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계단이 없이 완만하고 높지도 않아서 자전거와 휠체어도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찾길을 건너지 않고 아파트에서 공원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게 육교 형태로 다리를 만들었다. 이 육교는 불과 4차선 도로를 건너는 것이지만 완만한 형태로 만들다 보니 굉장히 긴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 육교가 정자문화공원과 아파트의 상징이 되게끔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런 육교는 같은 정자동에 있는 대유평공원에도 있다. 예전에 전매청이 있던 부지를 새롭게 꾸민 대유평공원과 건너편 숙지산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만들었다. 이곳 역시 시민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대유평공원과 숙지산의 높이를 고려하여 육교를 만들었다.

우리 시에는 SK아트리움이나 경기아트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초대형 뮤지컬이나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신도시의 컨벤션센터 옆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오디토리움(Auditorium, 수백 명 이상이 모여 연예, 행사 등을 보고 듣는 옥내공간)이다. 오디토리움은 2,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면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2,0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광고 개발이익금으로 쓰려고 계획했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상징적인 건물을 구상한 것이다.

오디토리움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 우선 경기도가 광고에 있는 컨벤션센터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주지 않아서 긴 소송을 해야 했고, 결국 우리는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컨벤션센터 증축을 대비해서 앞쪽에 습지로 조성한 곳이 있다. 컨벤션센터에서 호수를 바라보면 좌측 앞쪽으로 호수를 끼고 좁 넓은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오디토리움 후보지이다. 컨벤션센터의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그 위치에 오디토리움을 지으려고 구상했다. 이 계획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것은 아니고 2단계 증축 계획에 제시만 되어 있을 뿐이다. 오디토리움은 내 임기에는 어렵지만 언젠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

미래도시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과 교통, 그리고 도서관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유유자적 산책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가까이 있다면 삶은 참 여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진다. 그만큼 도시공원은 도시 곳곳에 충실해야 한다. 또,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고 교통시설과 공공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누구나 선호하는 것은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나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우리 시에 공공도서관을 대폭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그 전에 우리 시의 도서관은 대여섯 개가 있었다. 어린이도서관까지 3개를 합쳐도 9개가량이었다. 내가 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20개로 부쩍 늘어났다. 처음엔 우리 시의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아서 여러 곳에 요청을 해야 했다.

호매실도서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해서 세웠는데, LH는 처음에 도서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해서 결국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했다. 한림도서관은 현대산업개발에 요청해서 지었다. 지금은 공공도서관이 꽤 늘어났지만 더 만들어져야 하고, 여

러 곳에 열심히 만들고 있다. 에듀타운 이목지구에도 도서관을 짓고 있고, 당수지구에도 도서관을 만들고, 금곡동 크레파스공원에도 도서관을 넣게 하고, 고색역에도 만들고 있다.

도서관은 인문학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도시의 품격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서관을 가장 쾌적한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카페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도서관마다 주제가 있는 특화사업도 만들었다. 태장마루도서관은 철학, 대추골도서관은 청소년, 한림도서관은 여행, 창릉도서관은 인권, 버드내도서관은 건강, 호매실도서관은 육아, 광고홍재도서관은 디자인, 일월도서관은 생태·환경, 화서다산도서관은 과학, 광고푸른숲도서관은 힐링, 매여울도서관은 그림책, 망포글빛도서관은 경제로 정해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 3~4년 동안 도서관을 열심히 짓고 개성 있게 꾸며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도서관 사업은 우리가 선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민선 6~7기에 들어 다른 도시에도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꽤 들어섰다. 도서관이 늘어나니 사서의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전보다 사서의 수가 3배나 필요한데, 사서직을 대폭 확충할 수 없으니 고민이었다. 그래서 도서관을 민간



광고푸른숲도서관 내부 모습(2018.04.12.)

위탁운영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때 사서들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를테면 도서관 한 곳에 여러 명의 사서가 근무한다면 이를 절반으로 줄일 테니 사서 인원은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고되겠지만 최소한의 직원으로 자신들이 나눠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서직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주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만 민간 위탁 운영으로 결정하여 수원문화재단 쪽으로 넘겼고, 일반 공공 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서관을 크게 늘리다 보니 사서를 최소한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고, 1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수는 많이 줄게 되었다.

경기도 융합타운에도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경기도 융합타운의 도서관 예산은 400억 원으로 잡혀 있었다. 이곳은 일종의 경기도 전체 도서관의 허브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텐데,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어서 경기도에 적어도 800억 원을 쓰자고 제안했다. 우리 시에서 도서관 하나를 지을 때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려 8배나 되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광고에 있는 융합타운에 경기도 대표 도서관을 만들면 누가 이용할까? 바로 수원 시민이다.

이곳은 경기도의 전체 도서관을 아우르는 곳이니 800억 원으로 예산을 높이자고 했더니 경기도의 도서관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1,100억 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다른 지역 의원들이 수원에만 이렇게 큰 도서관을 지으면 되겠냐고 문제 제기를 해서 200억 원 이상 예산이 깎였고, 또 다른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중 일부는 광고 개발이익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나는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수원시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대문화거리의 중심, 부국원과 오주석의 서재

예전에 종자를 판매하던 회사인 부국원(富國園)이 있었던 건물은 10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장소이다. 건물의 지붕 모양이 특이하게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독특한 타일이 건물 외벽 전체에 정교하게 박혀 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그리 크지 않지만 특색이 있고 디자인도 독특한 것이 꽤 오래된 고풍스런 건물이다. 그 아래 교동 쪽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와 수원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늘 보았던 건물이다. 그 앞을 지날 때면 이 건물에 뭔가 역사가 있을 거라고 짐작만 했는데, 매우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일제강점기에 종자와 종묘를 판매하던 회사인 부국원 건물은 농업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 1950년대 이후 수원법원 및 검찰청사, 수원교육청으로 썼다가 1960~1970년대에는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 1980년대에는 박내과의원으로, 2000년대에는 한솔문화사라는 인쇄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들으니 이 건물이 팔렸다고 한다. 어떤 분이 부국원 건물과 그 옆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 생각으로 샀다고 했다. 이 건물이 헐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제야 부랴부랴 알아보니 다행히 아직 헐린 상태는 아니었다. 저 건물을 어떻게 보존할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헐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밀려왔다.

일단 건물주에게 엄포를 놓았다. 만약에 이 건물을 헐었을 때 이곳에서 문화유적이 발굴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말로 유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땅과 건물을 우리 시에 팔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새 건물주는 7억 원에 산 건물을 11억 원에 다시 팔겠다고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건물주는 부국원과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허문 뒤 현대식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부국원 건물을 허물지 못하면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실현할 수가 없다. 부국원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만 활용해서는 개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론의 끝에 건물주는 11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정작 우리 시는 그 가격에 매입할 수가 없었다.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물건이나 건물 등을 사려면 감정가로 사야 한다. 건물주가 가격을 더 부른다고 높은 가격에 사면 배임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오랜 협상만 계속했다. 이 협상은 2년 동안 지난하게 계속되었다. 2015년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결국 9억 원 가까이로 낮춰서 우리 시가 사들이기로 했다.

드디어 부국원 건물의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건물 복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건물 매입가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이것을 줄이느라 또 애를 썼다. 그 무렵에 굉장히 훌륭하신 수원 지방법원 법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부국원 건물



수원 옛 부국원 건물

이 옛날에 법원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법원장께서 나중에 이 건물을 법원박물관이나 법원기념관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부국원 건물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비좁은데 이곳에서 법원과 검찰청이 함께 하고 재판장을 열고 판결도 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이다. 어쨌든 건물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알게 된 바람에 옛 건물을 그대로 지킨 것이다. 부국원 건물을 사들인 뒤 3년 동안 열심히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타일도 다시 붙이고 구석구석 꾸며서 아담하지만 꽤 쾌활한 공간이 되었고, 이 공간이 우리 수원 역사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2017년에는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11월에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이라는 긴 이름으로 개관했다. 지금은 이곳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대문화거리로 만들려면 의미 있는 근대 건물 여러 개가 꼭 이어지는 고풍스런 맛이 있어야 한다. 수원에서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옛날에 참 근사했던 한옥으로 지은 수원역 역사(驛舍)가 남아 있어야 그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게 너무나 안타깝다. 또, 우리 수원의 역사에서 핸디캡(불리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수원역 앞에 있었던 너른 광장이 지금은 사라진 것도 참 안타깝다.

수원역부터 팔달문까지 이어지는 구도심의 핵심 거리와 종로교회, 신평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근대문화거리이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근처에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있는데, 북수동성당과 수원장로교회, 대한성공회 건물 등이 있다. 또 하나, 숨겨진 보물은 남창동과 신평동 쪽에 옛날에 수원 갑부들이 살았던 양옥집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한 곳이 바로 수원 갑부 양성관이 살았던 집이다. 지금은 ‘열린문화공간 후소(後素)’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곳이다.

어쩌다가 발견한 ‘오주석의 서재’

행궁동에는 오래된 건물이 여러 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건축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거나 정원이 넓은 건물을 우리 시에서 좀 사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몇 곳을 눈여겨본 곳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인 이 집은 정원이 제법 넓지만 외부에서 보면 양옥집 자체가 뭐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얼마 후 그 집과 땅이 28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사야 할까 생각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 30억 원이 넘게 나왔다. 28억 원에 살 수 있는 매물을 30억 원 넘게 주고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싼 가격에 나왔을 때 당장 우리가 사면 좋은데 행정은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다. 그 건물과 땅을 시에서 사들이려면 문화지구 같은 용도로 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감정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밟은 뒤에 매입하려니 감정가가 무려 35억 원이나 나왔다. 돈을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 어떤 명목으로 이 건물을 살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 무렵에 이 건물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미술사를 정리한 미술사학자이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도 했던 오주석 선생이 있다. 오주석 선생은 수원시 세류동에서 태어났고, 남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는데, 미술과 관련된 책 중에 베스트셀러에 속하고 한국미술사를 정리한 《한국의 미(美) 특강》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이분이 수원 사람인 것을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다.

마침 그때 한신대 사학과 유봉학 교수께서 오주석 선생 자료 기증 건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 수원천 복개 반대운동을 벌이고 남수문 복원운동을 할 때 나는 시민운동 영역을 맡았고, 유 교수는 문화재 전문 영역을 담당했다. 이 운동은 내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했는데, 이분과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인연이 있다. 유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올곧게 주장을 펴는 분이다.

이분이 오주석 선생과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분의 생전 자료를 우리 시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의뢰해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오주석 선생의 부인인 김은혜 여사를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남편이 저술했던 책과 슬라이드, 각종 자료를 모두 기증하겠다고 하셨다. 나는 정말 고맙다며 모두 기증받겠다고 했다. 그 대신 우리가 오주석 선생의 뜻을 계속 이으며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행궁동에 새로 산 그 집에 선생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보관하기로 했다. 이곳의 이름은 오주석 선생의 호를 붙여

서 ‘열린문화공간 후소(後素)’라고 짓고,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꾸몄다. 알고 보니 그 집이 한국의 근대 건축가로 유명한 김석철 선생의 작품이었다. 김석철 선생은 예술의전당을 설계한 분인데 이분이 설계한 건물이 몇 개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고 추진했던 일이다. 나는 그저 그 건물의 너른 정원이 좋았다. 새로 산 그 집을 ‘오주석의 서재’로 만들기로 하면서 정말 서재처럼 꾸미고, 오주석 선생이 좋아했던 작품을 전시하고 교육도 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정원에서는 이벤트를 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행궁길과 어우러질 수 있게 담장을 허물어서 외부에서도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의미 있는 이 근대문화유산은 ‘어쩌다가 얻어질린 곳’이 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문학의 상징을 얻게 되었다. 부국원과 오주석의 서재, 이런 곳이 다행히 행궁동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공간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곳이 있어서 근대문화거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인문학 도시의 자산도 늘어나게 되었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만드는 꿈

구도심의 핵심인 행궁동과 수원역 사이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과 장소가 많이 있다. 특히 교동부터 장안문 사이에 오래된 건축물과 역사적인 장소를 7~8개가량이라도 되살리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면 대단히 히트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꼭 사들여야 되살려야 하는 곳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촬영지였던 한옥집이다. 그 집 근처에 있는 행궁우물 터 옆 주막을 먼저 사들였



는데, 그 건물은 안내소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북수동성당 경내에 있는 빨리화랑도 중요하다. 이곳은 순교자가 굉장히 많았고 숨겨진 중요한 역사가 있는 건물이라서 가톨릭에서는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성지이다.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수원에서 인문학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결한 코스를 만들려면 이 성당을 빼놓을 수 없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곳은 종로교회이고,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도 수원에서 가장 특이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현대적 건물 중에서 수원에서 제일 먼저 특이한 설계로 지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 지금은 그런 건물이 흔하지만 초가집이 많았던 시절에는 영국 성공회 형태로 지은 파격적인 유럽식 건물이었다. 그 지붕을 삼각형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성당이나 교회 같지 않은 건물이다. 내부 공간을 지금의 형태로 설계한 것도 파격이고, 계단을 입체적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디자인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건축이다. 건축은 도시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의미 있는 디자인 건축 10선, 50선, 이런 걸 정해 보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우리 시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이 더 이상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닐까?

도시의 역사를 살리는 뉴트로 사업

오랫동안 수원에 있었던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6곳이 전주와 완주로 이전하면서 이 공간이 남게 되었다. 그 빈터 대부분을 개발지로 허용하되 농촌진흥청안의 핵심 건물이 있는 공간만 농촌진흥청이 갖고, 그 외의 땅 3만 평을 우리 시가 소유하게 되었다. 우선 농촌진흥청 뒤에 있는 잔디광장과 농업도서관을 더함파크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곳의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지을 것을 제안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2021년 말에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2년 7월경 정식으로 개관하는데, 처음에 2,000억 원가량으로 크게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건축공사비가 856억 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규모가 대폭 줄었다.

이즈음 나는 몇 가지 일을 더 벌였다. 우리 수원은 영농과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국립농업박물관 옆에는 여기산이 있

는데 이곳에는 우장춘 박사의 묘소가 있다. 이 묘소를 같이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분의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 여기산의 산책로와 공원 조성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이곳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있다. 우장춘 박사 묘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초대 청장과 5대 청장의 묘소도 여기산에 있다. 이분들은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하고 한국의 녹색혁명을 일으킨 분들이다. 그래서 여기산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탐방 코스로 만들고, 영농과 학을 위해서 관계시설을 만들었던 정조대왕의 흔적인 축만제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려고 했다. 사람들마다 이견은 좀 있지만 이곳은 새마을운동 정신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국립농업박물관이 개방될 때 선사시대 농업 흔적,

우장춘 박사 묘 등 농업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탐방코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여기산 바로 앞자락에 서호를 바라보는 건물 몇 동이 있는데, 이 건물을 기획재정부가 우리 시와 협의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매각해 버렸다. 그 건물은 연수원으로 쓰기엔 매우 아까운데 이것을 놓친 게 너무 아쉬웠다. 국가기관끼리 서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정보가 우리 시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미리 알았으면 우리 시의 소유로 만들었을 텐데 나중에 조치하려고 보니 벌써 매각된 후였다. 어쨌든 그 건물을 제외한 3만 평을 우리 시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구 농촌진흥청 건물 일부가
선거연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기관이 이전된 후 건물과 부지가 어떻게 쓰이고 지금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이 없다. 결국 너무 생뚱맞게도 농업유적 가운데에 선거연수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편이지만 쌀 자급률은 높아졌다. 보릿고개를 이겨 보려고 녹색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그 중심지의 유적에 엉뚱하게도 선거연수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영농과학의 중심지, 그 역사를 기록하라!

황당한 일은 또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이전하면서 잔디광장 주변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전주와 완주로 뽑아서 가버린 것이다. 도중에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당장 중지하라고 했다. 단 한 그루도 못 가지고 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아주 잘 자라서 녹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잘 자란 큰 나무를 옮겨 가면 행하게 변해 버린 이곳도 문제지만 과연 새로운 땅에서 나무들이 잘 자랄까? 중간에 중단시켜서 그나마 풀밭 바깥쪽으로는 나무들이 남아 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풀밭 주위를 겹으로 나무를 심고 잔디광장도 만들었다. 이곳을 시민들이 둘레길을 따라 한 바퀴 산책할 수 있게 만들고 서호순환로 통로도 몇 개 열게 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문제지적을 하고 지시를 해야만 했다. 여러 담당자들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수원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화성이 있어서 세계문화유산 도시이

고, IT디지털 첨단 과학의 도시이고 영농과학의 중심지이다. 이 영농과학은 정조 임금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영농과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은 수원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비록 농촌진흥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더라도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곳에 자신들의 흔적과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농대를 졸업한 내가 시장이 되어서 국립농업박물관을 유치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부지 3만 평을 이전받을 때 그 안에 있는 건물 전체를 우리 시가 인수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허물어야 되지만 우리는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 건물 하나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쓰고, 다른 건물은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도시공사가 입주했다. 또, 서울대 수목원 옆에 무궁화 묘목을 재배하는 무궁화원이 있다. 이곳을 사서 무궁화 특화 동산을 만들고 공원녹지사업소를 만들면 좋겠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목조건물 형태로 특색있는 건물을 짓고 진입로도 새로 만들면 좋겠다. 내 임기에는 이런 계획만 잡을 뿐 개발은 하지 못한다. 지금은 공원녹지사업소가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더함파크에 입주해 있지만 안정된 새로운 곳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나는 이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원선경산업관, 근대화 시절을 남기다

수원역에서 과선교를 넘어서면 오른쪽에 넓은 농장 같은 땅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었는데, 이곳이 비어 있어서 땅의 소유권자인 선경과 협의해서 야구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한동안 사용했다. 왼쪽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만

든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은 옛날에 선경직물(현재 SK) 공장이었다. 이 건물은 유리가 깨져 있는데 선경에서 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할까 궁금했다.

어느 날 신문기사를 보니 선경직물에서 땅을 팔아서 옛 공장을 허물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세운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붉은 벽돌로 지은 옛날식 공장은 지붕이 사선 모양으로 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근대화 건물이다. 산업화 시절에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리면 '산업화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면서 산업역군의 모습과 함께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장면을 그리곤 했다. 전형적인 옛날 공장 외관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글자도 적혀 있고, 이런 굴뚝이 있는 공장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는데 이곳에는 남아 있었다.

이 건물이 공장 안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 그때까지 나는 모르고 있었다. 신문기사를 보니 옛 공장 건물은 이미 헐어 버렸다. 너무 놀라서 그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다.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붉은 벽돌건물인데 벌써 다 허물었다. 너무 아쉬워서 땅을 치는 심정이었다. 진작 알았으면 보존했을 텐데 말이다. 건물은 이미 허물었지만 붉은 벽돌이라도 잘 보존해서 언젠가는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 맨 처음 1호 방직기를 돌리던 작은 공장이 있었다. 다 허물어 저가는 슬레이트 지붕 건물로 제일 끝에 있어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엔 개발하면서 모두 허물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이것만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앞에 타일을 붙인 공장과 본관으로 쓰던 하얀 2층 건물도 남아 있었다. 이 일대를 모두 개발하면서 한꺼번에 허물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이 건물들을 지키는 방



수원선경산업관 내 전시장로

법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래서 SK와 협의한 것은 처음 1호 방적기가 있던 건물 자리에 선경직물 공장이 있던 역사의 흔적을 리모델링해서 남기기로 했다. 그렇게 수원선경산업관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은 SK가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 자리에서 최신원 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일본의 구라시키에는 방적공장을 그대로 남겨서 박물관과 시민체험장으로 만들었다. 이곳 창업자가 오히라라는 사람인데, 1900년대 초 방적사업으로 번 돈으로 유럽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들여서 가장 많은 인상파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분이 오히라 미술관을 짓고 기증해서 구라시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최 회장에게 이 사례를 보라고 말씀 드렸다. 수원의 향토기업이 어떻게 옛 역사를 남기지 않고 다 허물 수 있냐고 말이다. 결국 선경직물 공장 터는 개발하고 그 옆쪽에 역사관을 만들었다. 이 건물도 옛 모습을 느낄 수 있게 예전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그 모습 그대로 복원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역시나 아쉬움이 있다.

SK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니 섬유산업의 역사와 산업 노동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근대화 시절의 모습을 역사관에 전시하면 좋을 텐데 관리와 유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은 내 의도와는 다른 건물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톱니바퀴 공장을 쉽게 허물고 역사에서 흔적을 지워 버리는 일은 너무 안타깝다. 선경은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인데, 기업의 소중한 역사를 잘 지키고 함께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의 역사를 살린다는 것

수원은 매우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옛날의 역사와 흔적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버티고 버티는 벽돌공장도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자리를 허문다는 것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독일 호프만식 소성 벽돌을 만드는 영신연와라는 곳인데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고,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말해 주는 소중한 곳이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여러 조건을 살펴봐도 그것은 어렵다고 했다.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방안이 없는데, 건축주는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몇 년째 옥신각신만 하고 있다.

합법적인 개발과 허가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시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개발현장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중한 것은 너무나 많다. 나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모두 지키고 싶지만 정보가 없거나 시기를 놓쳐서 지키지 못한 것들도 제법 많다. 이처럼 도시의 역사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옛 문화와 흔적들이 지워지는 것은 너무나 아쉽다. 앞으로 민선 8기에서 내가 다하지 못한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살렸으면 좋겠다.

수원의 심장, 팔달구를 살리자!

내가 첫 취임했을 때 팔달구청은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물에 있었다. 건물의 환기가 잘 안 되어서 팔달구청에 근무하는 것은 감옥살이 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았다. 영통구청은 신도시에 가건물 형태라도 훨씬 더 나은 조건인데 팔달구는 그렇지 못했다. 팔달구는 수원의 핵심이라 나는 처음부터 팔달구는 새로 지어야 하고 위치를 옮긴다면 수원화성 안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조시대 화성을 건설하고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였기에 이 지역은 우리 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핵심인 화성 안에 있는 건물들은 점점 더 빈약해지고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었다. 젊은이들이 하나 둘 떠나 빈집이 생기면서 점점 흉흉해지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며 동네의 활기가 약해져 가고 있었다. 내가 이곳을 거점으로 도시를 살리기 위해 구상한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팔달구를 화성 안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일명 ‘별도 비밀팀’을 만들었다. 관련된 여러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팀에서 팔달구청 이전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세계 몇 개 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구청을 지을 만한 적합한 부지는 없었다. 당시 행궁광장 옆에 있는 부지는 비어 있었지만 관공서가 들어서기에는 너무 아깝고 적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남아 있는 부지 중에 여기만큼 위치가 좋고 너른 부지가 없었다.

나는 최종적으로 행궁광장에 행정기관을 세우고 싶지는 않았다.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하기 쉽고 탁 트인 행궁광장과 이어진 그곳은 시민들이 즐겨 이용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민가를 사서 허물고 팔달구를 지어야 했다.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수원화성박물관 터로 결정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전체 부지 중에서 반 정도만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절반은 남아 있었다. 그곳도 구청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좁은 면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수원화성박물관과 그나마 어울리는 구조로 팔달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팔달구청 이전 부지를 내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 전체 부지를 바라보면 수원화성박물관과 어울리면서 이곳을 크게 위압하지 않는 가운데 팔달구청이 들어섰다. 높이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도 했지만 구청 건물 중에서는 규모가 워낙 적어서 굉장히 웅색하게 세워졌다. 나중에 팔달구청의 별실을 다른 곳에 만들더라도 일단 화성 안인 이곳을 거점을 삼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팔달구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행정서비스를 받기에 편리한 곳이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범지역의 오명을 벗고 싶은 지동

2012년 팔달구 지동은 오원춘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동 전체가 우범지대가 되는 낙인 효과가 매우 컸다. 수원시에 오명(汚名)이 씌워진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는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한동안 계속 보도되면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서 안타까웠다. 오원춘 사건에 이어 박춘풍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수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지동에서 살다시피 했다. 골목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는 안전한 거리로 화단을 만들자, 여기는 등을 더 달자, 여기는 CCTV를 더 달자, 여기는 순찰을 며칠 더 하자 등 계속 현장을 살폈다. 당시만 해도 CCTV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등을 밝게 밝히는 보안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보안등이 밝아지니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빛이 너무 밝아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반발이 심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벌어졌다. 또,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니 가게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곳도 있었다. 손님들이 CCTV에 찍혀서 단속에 걸리는 걸 우려해서 제대로 주차도 못 하니 가게에 오질 않는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반발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CCTV는 범죄 예방이나 범죄 추적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통제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인권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나 또는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식하게 되고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시는 4개 구(區)가 있지만 경찰서는 3곳이 있어서 애매한 곳이 많이 생겼다. 광고신도시의 관할을 어느 경찰서로 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동 야간 순찰(2016.05.17.)

제일 좋은 것은 경찰서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만 팔달구는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어서 경찰서를 신축할 명분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강력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하니 팔달경찰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대표 공약 1호도 팔달경찰서 개청일 정도였다. 물론 나도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팔달경찰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팔달경찰서를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놓고 경찰서와 3년을 싸웠다. 결국 관철시킨 것은 내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지동이다.

우리 시를 쭉 지나가면서 살펴보면 도시 경관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다. 그중에 하나가 팔달구의 1번 국도가 지나가는 지동사거리에서부터 동문(창룡문) 사이이다. 매우 낙후되고 거의 폐허화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나는 이 블록 전체의 땅을 매입해서 팔달경찰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동의하질 않았다.

그 블록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필지만 해도 수백 개이고 주민들은 수백 명이 넘는데, 그 땅을 다 보상하려면 몇 년 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다투느라 사업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라는 이유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경찰서에 물으니, 한 필지로 딱 떨어지는 장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달라고 했다. 바로 인계동에 있는 KBS 드라마센터를 지목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은 팔달구 전체의 중심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 오원춘 사건으로 치안에 대한 치명상을 입고 불안한 곳이 되어 버린 시내 한가운데에 팔달경찰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그곳은 경기남부경찰청과 너무 가깝다며 거절했다. 나는 남부청이 행정청일 뿐 실제 현장을 살피는 곳은

아니니 우리 시와 관계없고, 우리는 지동 쪽으로 팔달경찰서를 세워야 한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3년을 싸웠다.

팔달경찰서, 꼭 지동이어야 하는 이유

결국은 주민 대표들을 모아서 지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 지역에 대한 가치와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범지대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곳에 팔달경찰서를 신축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자 주민 대표들은 동의한다고 했다. 팔달경찰서를 KBS 드라마센터에 세우면 행정 처리는 편하지만 나는 지동에 세우는 것이 지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대표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 뜻대로 같이 움직여 달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사는 모든 분들에게 보상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바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민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90% 넘게 동의를 받았는데 열댓 집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분들은 연세가 팔십이 넘어서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건물을 허물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옮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어떻게든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반대하면 한 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일이 관료사회에서는 흔하지만 나는 이런 상황과 자세를 늘 정면으로 거부해 왔다. 지동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강한 결정과 추진력이 필요했다. 결국 네다섯 집만 최종 협의하지 못하고

팔달경찰서 자리가 확정되었다.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경찰서가 들어서면 송수신하는 탑을 세워야 하는데 수원화성과 가까운 거리라서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도 필요했다. 그래서 앞과 뒷부분의 차이가 서로 다른 입체적인 건물로 설계했고, 경찰서 중에 제일 근사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 시에서는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사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팔달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해 우리 시가 들인 행정 비용과 부수비용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었다.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사고 도로를 닦는 예산에 90억 원이 넘게 들었고, 그 주변의 완충녹지에 해당되는 땅을 사면서 또 많은 예산이 들어서 총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전국의 경찰서 중에서 수백 필지를 한꺼번에 다 보상하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우리 시가 해냈다. 나에게는 팔달경찰서가 지동에 세워져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력사건의 오명을 뒤집어 쓴 지동을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 지동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말끔하게 바꾸고 치안문제도 해결하는 이중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력한 만큼 앞으로 지동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



팔달경찰서 예정부지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교육 자치를 행정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교육 · 건강



신풍초등학교는 왜 광교로 이사했을까?

학교 사회복지사,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은 뭘까?

한국의 복지 정책을 바꾼 무상급식

감염병 사태의 교훈



舊 신평초등학교 전경

신평초등학교는 왜 광고로 이사했을까?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우리 시의 핵심사업이자 숙원사업이고,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라 오랜 기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심재덕 시장 시절에는 지금의 행궁 모습을 갖추었고, 김용서 시장 때는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땅을 사냈다. 내 임기 때는 그 터에 복원 사업을 차례차례 진행하기 위해 발굴작업을 시작했다.

행궁동에 있던 신평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로 화성행궁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행궁을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도립병원과 경찰서, 소학교 등을 세웠다. 신평초등학교는 처음에 그 자리가 아닌 교동에서 개교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행궁 옆으로 이사를 했다. 화성행궁의 낙남헌과 우화관 건물을 교실로 썼는데,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화성행궁 바로 옆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터는 우화관(객사, 영빈관) 자리라서

함께 발굴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고민이 됐다. 이
전부터 우화관을 짓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인 국비를 받아왔
다. 몇 년 이내 복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
사업의 예산은 다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의 가장 오래된 역
사가 있는 학교를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의 자리는 종합적인 행정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무렵 신풍
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행궁 복원을 하려면 학교 건물을 철
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근처에 있는 남창초등학
교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했다.

팔달산 중턱과 남문 가까이에 남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신풍초등학교 아이들
을 이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게 좋은 시설로 만들자고 생각했다. 학교의 시설
투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시청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
토피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다. 우리 시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은 남창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이 학교에서
자연치유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예산 50억~60억 원가량을 들여
서 학교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신풍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주변 지역의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는
데,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풍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항
의하면서 들고 일어났다. 동네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공부시켰던 부모들은 더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결정이 당연히 반갑진 않았다.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는 만만찮았다. 우화관만이 수원의 역사가 아니라 신풍초등학교도 역사
인데, 왜 역사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학부모뿐 아니라 도시정책 전문

가도 합세하여 나를 공격하자 매우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가 없었다. 우리 수원은 일관되게 정조대왕의 유물인 화
성행궁을 옛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복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내 임기 동안에
복원사업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뀌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
념과 가치관이 옳더라도 한 도시의 행정은 그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고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광고에서 새 역사를 이어 가다

학부모들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을 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다가 현재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
의했다. 대신 신입생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했고 교육청과도 그렇게 협의했
다. 1학년들이 졸업하는 6년 동안은 발굴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풍초등학교가 6년 동안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하
고 있었다.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역시나 2~3년이 지나고 해마다 졸업생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고 신입생은 입학하질 않으니 학교가 썰렁해졌다. 운동장에는 풀이 자라고 마
치 흥가 같은 분위기가 되니 아이들이 학교를 무서워하고 위험한 구역처럼 변
했다. 학생 수가 열댓 명가량으로 줄어들자 학교의 단위를 맞출 수가 없게 되면
서 아이들이 받는 불이익도 커지게 되었다. 결국 3년이 지나니 학부모들이 스
스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했고 신풍초등학교는 계획보다 일찍 문을 닫기
로 했다.

학교의 문제는 재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졸업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신풍초등학교 차희상 동문회장과 내가 직접 협의를 했다. 화성행궁을 복원하려면 학교를 이전시킬 수밖에 없으니 이제 신풍초등학교의 역사는 광교로 옮겨서 이어 갈 거라고 설명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 역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명문의 이름을 가지고 이사를 한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학교가 명문이 될 것 같습니까? 신풍초등학교 역시 명문의 이름을 가지고 광교로 이사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광교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역사관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신풍의 오랜 역사는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가십시오. 시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자리는 화성행궁으로 복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문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동문회장과 동문들은 내 생각에 동의를 해줬다.

신풍초등학교 자리는 화성행궁의 우화관이 있던 자리이다. 이 건물은 조적조 적벽돌로 지은 일반 건물이고 지붕도 시멘트 기와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근대 문화유산 같은 건축적 가치는 적은 곳이었다. 그 이후 신풍초등학교는 광교로 이전을 하고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발굴작업이 시작되었다. 학교 자리를 파보니 옛 우화관의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가 다 나왔다. 복원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강당을 보존하라!

나도 신풍초등학교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학교

의 강당 건물이다. 신풍초등학교 본관은 우화관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철거해야 하지만 강당 자리는 조선시대 때 특별한 시설물이 없었으니 이 건축만이라도 살리고 싶었다. 이 건물은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강당은 허술한 목조건물이지만 지붕은 트러스트 구조이다. 잘 살리면 상당히 중요한 근대 건축물의 유형을 보존시킬 수가 있다. 이 건물을 보존하면 신풍초등학교의 역사도 전시할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위치라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강당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꾸미는 것은 내 임기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우화관을 먼저 복원한 후에 이 강당 건물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애초에 강당을 허물겠다는 것을 내가 허물지 못하게 했다. 유구를 발굴하다가 강당 건물까지 파야 한다면 그땐 어쩔 수 없지만 그전까지는 허물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

또 하나, 앞으로도 고민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옛날에는 경찰서 안에 있던 나무들이다. 화성행궁 앞에는 느티나무도 있다. 이 나무들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 은행나무의 전설에 얽힌 수원시민들의 정서가 있다. 수원사람들은 익히 아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를 뺏더니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후 은행나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운다고 했다. 그래서 나무를 벤 신풍초등학교에는 저주가 생겨서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시민들만의 정서가 담긴 그 은행나무의 전설을 꼭 지키고 싶다.

수원의 중심, 행궁동을 살려라!

수원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단일권으로 묶여 있어서 참 여건이 좋은 곳이다. 핵심지역인 원도심은 문화와 전통이 있고, 신도시는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수원은 핵심이 잘 지켜지는 곳이다. 우리 시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원도심 중앙에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곳으로 모든 것이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과 수원밖에 없다. 그래서 행궁동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원도심인 행궁동이 활기를 잃고 쇠락했다. 나에게 행궁동을 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신도시들은 부쩍 성장하지만 원도심인 행궁동은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나는 인문학 도시와 생태교통 사업을 하면서 행궁동을 살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정했다. 행궁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행궁동에 대한 저의 일방적 짝사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금은 행궁동이 신도시 부럽지 않은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곳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팔달구청을 성 안으로 옮기고, 핵심지역에 시립미술관을 만들었다. 인문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예절관과 전통식생활체험관, 한옥전시관 등을 만들었고, 정조테마 공연장도 만들고 한옥체험마을과 영상미디어센터, 팔달문화센터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3선을 연이어 하면서 12년 동안 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舊 新豊초등학교 교당 보존 모습

학교 사회복지사,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은 뭘까?

2010년 시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원 곳곳을 누비고 다닐 때 영통구에서 학부모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려 주셨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학교는 아이들이 이탈하기 참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사회복지 상담을 전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의 언니, 오빠 또는 누나, 형 같은 역할을 하면서 편하게 자기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필요로 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라면 지역의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시켜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좋은 발상이었다.

수원시장이 된 후 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기로 했다. 우리 시가 예산을 마련하고 일단 구(區)별로 한 학교씩 선정, 학교에서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

지사를 선발했다. 그리고 학교에 연락해서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하고, 그 성과를 한번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첫해에는 구별로 한 학교, 이어서 1~4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성과가 꽤 괜찮았다. 그다음엔 10개로 늘렸고, 그다음에는 점점 더 늘어나서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에 따라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한다면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 주는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있다. 보건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치료받는 것은 작은 상처 정도라고 한다. 만약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동네마다 크고 작은 병원들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다.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왕따와 체벌, 부모와 갈등, 성적 문제, 이성 문제 등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갈등들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있고, 아이들이 겪은 심리적 문제가 트라우마가 되어 계속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늘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별도로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돕기도 한다. 이렇게 하니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의하면서 한결 수월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너무 좋다고 환영했다.

청소년들 중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한창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을 수치스러워하면서 누구

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56개 학교로 늘었고, 사회복지사를 총괄하는 총괄디렉터 두 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경기도 지자체 몇 곳으로 퍼져 나갔는데,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많아야 10~20여 개 정도이고 현재는 우리 시가 가장 많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학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학교에서는 다들 좋아했지만 문제도 있었다. 이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니 교장선생님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일 년이 지나면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회복지사들은 무척 불안하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한 아이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학교를 설득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몇 해 지나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멈춰 달라고 연락이 왔고, 교육감이 더 이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은 걱정이 되어서 난리가 났다. 교육청에서 스톱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도 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육 지원하는 사업에

서 비정규직이 많다고 했다.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서 계속 고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교육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비슷한 이름의 다른 기능을 가진 비정규직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직책도 점점 없었다. 그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자원하고 연계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교육청에서는 중단을 권고했지만 우리 시는 성과가 좋은 사업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더 확대하지는 말자고 결정했다. 아쉽게도 더 확대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은 학교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어서 계속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내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법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감이 학교 사회복지사를 없앴다고 한 것을 내가 교육감을 만나서 답판을 짓고 교육청이 더 허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임기도 5년으로 더 연장시켰는데 앞으로는 정규직화되어야 한다. 성과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니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사회복지 대상을 취약계층만 생각하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평범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문제는 또 다른 케어(care, 돌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게 좋다. 학교 안의 영역이라서 우

리 시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저 좋은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면 계속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 2018년 학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학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도 모여서 다 같이 포럼도 하고 사례 발표도 했다. 이것을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면 청년 일자리가 몇만 개는 늘어날 것이다.

내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학교 사회복지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싶었다. 우리 지역에 있는 200여 개 학교에서 이분들을 모두 채용하면 2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고, 전국적으로 넓히면 몇 만 명이 고용되는 것이다. 이분들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도 필요하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관리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하니까. 규모에 따라서 한 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2~3명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만큼 매우 넓은 영역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한 일이 생기면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늘리고, 국비로 조직 안에 사람을 채워 놓는 일만 한다. 이런 방식보다는 가장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쓰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늘 이렇게 주장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무시됐다.

지역의 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법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제도화가 필요하고, 학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지역자원과 연계시켜 주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화라는 것은 결국 법제화도 필요하고 정규직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복지 자원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해서 교실의 수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정신과 치료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청소년 캠프와 연결시킬 수 있고, 유스호스텔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역의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다면 이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열어도 좋겠다. 부모와도 상담하는 캠프나 프로그램을 열 수도 있겠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목 위주로 수업을 하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는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 교사 한 명에게 필요한 예산이 연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생각하면 이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학교에서 섬세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 정말 안타깝다.



학교사회복지사 간담회
(2012.03.27)



한국의 복지 정책을 바꾼 무상급식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큰 변화의 분기점을 맞은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덕분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무상급식 의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밥은 자신이 사서 먹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예산을 쓴다는 것을 선뜻 동의하질 않았다. 그러나 매일 도시락을 싸야 하는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다. ‘제대로 된 식사가 나올까?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아이들의 영양상태에 맞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다수가 모여서 식사를 하다 보면 식품 안전사고는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의견도 있었다. 어쨌든 2009년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생뚱맞고, 이래도 되나? 과연 안전할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상이긴 한데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그래, 그거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후보들이 모두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대상이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구호이고 슬로건이었다. 상대방 후보 쪽에서는 “왜 그걸 퍼주기를 하느냐, 재벌가 아들에게도 공짜 밥을 왜 주냐.” 이런 식으로 공격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 공약이 굉장히 인기 있고 유권자들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다.

내가 수원시장이 되고 보니 학교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시작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실부터 만들고 2~3년에 걸쳐 몇 단계로 학년을 나눠서 무상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예산도 제법 들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작했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했다. 이때 지방 재정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가장 기본 논리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무상교육이 되는 것이고, 무상교육은 학교 안에서 밥 먹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라는 논리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중 ·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었고, 새로운 변화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이것에 준하는 정책들이 계속 등장했다. 교복도 마찬가지로 무상교복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들이 무상으로 가다가 실제로 ‘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이 주류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문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시 단위로 만들게 되었다.

우리 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로 이름지었다가 ‘무상’이라는 글자는 슬쩍 빠졌다. 무상은 이제 기본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기농과 친환경 급식 예산을 더 올렸다.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했다. 이를테면 콩은 유기농 콩을 써야 되고 GMO(유전자변형생물, DNA 재조합 기술 등으로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시켜 형질을 전환시킨 생물체)는 안 된다 등 이런 내용으로 계속 진화했다. 우리 사회가 복지로 나가기 시작하니 단계별로 수준과 내용이 점점 달라졌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미 다 그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적 분야에서도 그런 기능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 된 것이다.

대안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이제 신토불이, 로컬푸드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등장했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할 때 식재료를 조달하는 메커니즘이 농협이나, 또는 학교 단위로 묶어서 공동 구매를 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계속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게 되었다. 수원만 해도 초등학교 100개, 중 · 고등학교를 합쳐서 200개나 되는 학교가 있으니 안전한 먹거리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급 루트와 점검 루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으니 차츰차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친환경 급식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모두 추진했다.

그때 내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도권 밖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

을 줘야 한다는 거였다. 우리 지역에 대안학교인 ‘칠보산 자유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도 똑같이 처음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 수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칠보산 자유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내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교사들과 협의해서 대안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도 처음부터 제도권 안에 넣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누가 제안하거나 대안학교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안학교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안학교에 먼저 연락하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안학교에서 우리 시에 정식으로 제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았던 것이다. 이후에 그분들이 더 진전된 내용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대부분 수용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정책이 복지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은 얘기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된 것이다. 이 복지정책은 이제 여야의 손을 떠났다. 기초연금 같은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제 돈을 누가 더 많이 국민들에게 주느냐를 경쟁하듯 되어서 오히려 또 다른 복지병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때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제작)’라는 하는 영화를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보게 했다. 내가 그 영화를 추천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영국의 복지병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상황과 똑같았다. 자신이 혜택을 받을 복지대상자이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아무리 자신

의 상황을 설명해도 그것을 증명할 문서만을 가져오라고 했다. 하다 하다 안 되니 사무실에서 뛰쳐나와서 길거리 담벼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썼다. 내가 나인데 뭘 또 증명하라는 얘기냐 이런 시위의 의미로 쓰는 것이다.

복지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대상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영화 주인공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복지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일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지만 질환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게 이 주인공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호소하고 싸우다가 결국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희생되는 것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이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주는 과정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면서 행정 위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함정과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똑같이 겪는 과정이기도 하다. 복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추진했는데 이어서 무상교복도 등장했다.

우리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는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했고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 · 무상 산후조리 지원 · 무상교복)을 시리즈로 내놓기도 했다. 사실 이것은 재원구조가 튼튼한 성남이니까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지자체가 이런 독을 허물고 나가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

다. 이런 사업은 특별히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원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다. 무상교복도 처음에는 학교와 학년별로 단계를 두고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3학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무상급식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이처럼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무상 시리즈 정책이 속속 등장했지만 사실은 무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나는 또 다른 영화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여 줬다.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인데, ‘화씨 911’이라는 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아이들이 먹는 식사와 급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햄버거, 콜라 등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으면서 비만이 많은 미국인들과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프랑스의 아이들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미슐랭 셰프가 프랑스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한다.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식당을 가듯이 학교를 간다. 학교 가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인 것이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개별 맞춤형으로 귀빈처럼 대접받는 요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은 단지 음식을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예우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처럼 판박이로 같은 음식을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음식으로 주는 것이다.

우리 급식에도 이런 충격을 줘야 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요리학교가 많이 생겼고 일류 요리사들도 많이 배출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을 주는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영양 상태와 질병을 확인하면서 음식에 빠져야 할 것, 들어가야 할 것과 균형 맞춰야 할 것 등을 챙겨서 개별적으로 요리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거나 감기가 든 아이는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 등 이런 아이들의 체질과 현재 질병 상태 등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와 요리법이 다 정해져서 배분되었다. 20년 전 우리는 이런 복지정책이 생기기도 전에 호주의 현장을 보니 충격이었다. 호주 사회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대우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주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처럼 획일화된 사회에서 편의주의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지만 나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서는 행정이 말하는 통합을 자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혹시나 자신들의 교육 영역이 행정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계의 집단이익에 충실한 정책으로 가고 있고, 교육 수요자에게 충실한 것으로 방점이 찍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아쉬움의 간극에서 지금 지방자치 행정에서 교육 영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자치로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학교장은 초빙제로 해야 한다. 또, 지금 교육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인 것도 지방자치 행정과 통합을 이루어서 그 범주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에 경찰과 소방, 교육, 교통까지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도 행정의 큰 틀 안에 소속되어서 수원시 교통본부 같은 조직이 있고, 그 안

에 버스 기사들이 소속되게 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은 함께 써야 되는 부분이라 자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함께 써야 되는 것 속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단위에 선출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서장, 검찰청장까지도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대행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 쪽에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육 자치를 행정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우리 지역에는 중도입국(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귀화한 자녀)한 해외 외국인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꽤 많다. 이 아이들은 일반 학교로 바로 진학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학교를 다니더라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교육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주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다.



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개관식
(2016.05.10.)

생각이 괜찮아서 내가 늘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삼성전기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그룹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이 왔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거나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는데, 자신들에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수원시에서 공간을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라서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곳을 해당 부서에서 물색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찾아보다가 몇 군데 후보지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고는 낙담을 했다.

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고등동, 매산동, 시내 쪽의 지동, 매교동, 화서동, 이런 곳이다. 거기에 또 수원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다.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 영역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은 천주교였다. 화서동 천주교성당 옆에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여고 앞에서 화서문으로 오는 큰 길가의 땅을 보고 이 땅을 사자고 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시설을 고민할 때 그 시설에 합당한 위치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사업을 보면서 택시미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다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만 성공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장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만들 때 이곳을 주로 이용할 아이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어디일까를 고민했다. 아이들이 찾아오기 쉬워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시내 중심인 화서동에 들어선 드림센터는 성공했다. 이 센터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수탁했는데, 아주 잘 운영해서 전

국적인 모델이 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셔서 같이 테이프를 끊는 행사를 하고, 사례 발표도 여러 번 하고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분들이 건물 이름을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라고 짓겠다고 해서 나도 동의했다.

수원시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했다. 2~3일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디 멀리 나가는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곳, 그 조건에서 가장 자연과 가까이 있는 곳, 그러다 보니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 이전했던 연수원 부지에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땅을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아마도 유스호스텔이 우리처럼 시내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프로그램하기 좋은 곳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밀집 접촉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성과 접근성, 그 특성에 맞는 대상군에게 가장 프로그램하기 적합한 곳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해당사항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자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기 쉬운 장소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이 사업 성패의 과반수를 좌우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학교

우리가 보통 교육의 영역이라고 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포괄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 우리는 교육 잉여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며 영역을 넓혀 왔다. 나는 학교 공간이 남아도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 그러나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학교 공간을 개방하자고 제안하고 개방조건을 만들어서 학교 건물을 지어도 학교장이 바뀌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래도 개방한 곳 중에서 청개구리 연못 같은 것도 만들고, 우수 사례들이 퍼져나가니 조금 더 관심 갖게 되었고, 지금은 돌봄 교실을 하는 곳도 생겼다.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고, 평생학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방 자치와 교육은 딱 분리되어 있다.

내가 스위스를 갔을 때 유명한 건축가 페터 Zumthor(Peter Zumthor)가 설계한 산골의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 공간도 독특했는데 교실 안에서 아래층과 위층이 계단처럼 연결되어 있고, 아래층에서는 공동 수업을 하고 위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눠 쓰기도 했다. 교실의 가변성이 커서 음악수업을 하다가 다른 창작교실로 써도 되고, 그냥 편히 집에 와서 쉬듯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상 배치도 자유로웠다. 디자인도 획일적이지 않고 파격적이다.

체육관은 커뮤니티센터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학교의 지하에는 엄청난 병커가 있었다. 두꺼운 문을 몇 개 지나서 들어가는 그곳은 폭탄이 터져도 괜찮을 정도의 대피장소가 있고 몇 달을 대피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갖춰져 있었다. 병커에서는 가끔 대피 훈련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대피하는 예비적인 장소와 같은 곳이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학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감염병 사태의 교훈

해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다.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인플루엔자 등 임기 동안에 나타난 것만 해도 대여섯 개가 있었다. 최근 들어 1~2년 사이에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동이 통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가축의 살처분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명 경시 현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몇 km 이내의 닭과 오리 등을 모두 살처분시키는데, 이것은 대응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자 생명윤리에 반하는 일이다. 내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시를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풀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다.

2015년 평택에서 열이 많이 나고 콧물과 기침이 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다. 계절적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 환자는 검사를 받으려고 우리 시의 성빈센트병원에 왔다. 이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러는 사이 이분이 슈퍼 확진자가 되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메르스라고 명명이 되었다. 메르스는 증상이 아주 심하고 치명률도 아주 높았다. 아랍의 낙타가 숙주가 되었다고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다.

이 환자가 수원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상황이 되었다. 우왕좌왕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때는 국가 방역체계라는 시스템이 없었다. 통제는 하지만 통제의 방식과 내용조차 확립된 게 없는 상태였다. 의심 환자가 생기면 일단 격리를 하고, 우리 직원이 검체 샘플링을 가지고 밤늦게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까지 달려가서 접수를 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것을 배양시키고 검체검사를 한 뒤 이틀 후에 통보해 줬다. 그냥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전화를 수십 번 해야지 간신히 연결이 되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최소 2.5일 이상이 걸려야만 결과를 알 수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계속 생기고 다들 질병관리본부로 문의할 수밖에 없으니 일이 물리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여기저기에 환자가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제도 모르는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들 음압병실을 찾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 수원의 음압병실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3~4개를 가지고 있었다.

감염자 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 그 사람이 누구를 접촉했을까 하는 이동 동선을 찾아서 담당 공무원들은 밤 11~12시 늦은 시간이라도 서둘러 공개하는 일을 했다. 나도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해서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2시라도 메르스 발생 현황과 대응방법을 우리 시의 대표 SNS에 올렸다. 그럼 시민들이 이 정보를 보게 되는데 하루에 6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대응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시청에서 주는 정보 외에는 없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

이때 새로운 일이 터졌다. 속수무책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치명도도 높으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밤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국가통제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종합병원을 과감하게 폐쇄시켰다. 그전에 나는 벌써 우리 시의 몇 곳을 폐쇄시켰다. 수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백성병원을 비롯한 몇 곳을 2주 동안 문을 닫게 했다. 당시 중앙정부는 슈퍼 확진자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에도 큰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판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중앙정부가 이들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했다. 이 무렵 바이러스 검사를 왜 모두가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검사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때 내가 주장했던 게 몇 가지가 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그곳에서도 수용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바이러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도 검사실이 다 있고, 민간 제약회사의 연구실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검사시설은 3곳(SCL, 녹십자,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적으로 보면 36곳까지 늘어났다. 그러자 바이러스 검사에 이틀 반이 걸리던 것이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부의 방침을 기다릴 거 없이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직접 하겠다고 해서 확진자들을 병원에 격리시키는 일도 했다.

그런데 수원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 확진자는 음압병실에 입원시키고 가족들과 회사 동료 등 그 주변 분들도 걱정되니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담당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동네 가운데에 있다. 이 문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메르스 확진자가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속속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수원에 있고 음압병실도 여기에 있으니 이럴 때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다. 그 대표들을 모아서 설명했다. “여기 병원에서 메르스를 치료하는데 절대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방역할 테니 여러분들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치료를 받을 곳은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되어야 해요. 병원이 도심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날 내가 의료원과 바로 붙어 있는 장안고등학교에 가서 같이 소독을 하고 정자시장도 소독하러 다니고 주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병

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그 병원 둘레에 줄을 걸고 의료인들과 환자들을 격려하는 연두색 리본 달기를 했다. 그전까지 우리 동네에 환자들이 오면 큰일 난다고 결사반대했던 분위기에서 도리어 격려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 동네 주위에 병원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근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꺼리는 분위기도 생겼다. 내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수원호스텔 영업을 중지시키고 의료인들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 음압병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방진복을 입고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지는 못하니 말이다. 의료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들 불안해하니 다른 대처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원호스텔이 있는 행궁동 주민들은 이곳 로비에 음식과 간식을 전해주면서 ‘힘내세요, 의료인들’이라고 응원을 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켰다. 메르스는 69일 만에 종식이 되었다. 그 과정을 《메르스 일성록》이라는 책에 담았다.

메르스의 교훈

그때 내가 주장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관을 왜 광역 단위로 2명 밖에 배정하질 않느냐, 기초자치단체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학조사관을 쓸 수 있는 권한만 달라고 제안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동선 추적을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들이 참석한 일자리위원회에서



메르스관련 경기도의료원인근주민
간담회(2015.06.12.)

도 주장했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허용하질 않았다.

그 후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감염법 3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을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역학조사관을 배정하는 일명 ‘염태영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역학조사관을 제때 배치하지 못했다. 공무원의 월급 체계로는 감염병 전문의를 쓸 수 있는 급여를 맞출 수가 없다.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지자체에 들어온 사람도 역학조사관이 갖추 수 있는 훈련을 다 받고 근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지금 역학조사는 공중보건의가 몇 시간 교육받고 투입되어 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메르스가 준 교훈이다. 이런 경험과 내용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를 예측할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있다. 우리 시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의 가족과 밀접 접촉자를 집에 머물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임시 생활시설을 수원 유스호스텔로 제일 먼저 지정했다.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오늘날 한 명이라도 발생했느냐 아니냐를 날마다 확인하고, 2~3명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감염자의 동선을 확인하는데, 개인신상 공개 문제로 나중에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계속 기준이 변했다. 처음에는 모든 동선을 공개하다가 다음에는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와 접촉여부를 확인하고, 접촉이 없으면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제외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해외 입국자를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

이 무렵 내게 중요한 힌트를 준 일이 있었다. 2020년 3월 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 있었다. 이때는 외국에서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날마다 발생했는데, 수원 확진자의 반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였다. 그중 한 명인 이 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입국했는데 집에서 머물다가 확진 결과를 받았다. 이 학생은 입국하자마자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 결과가 나와서 병원으로 갔는데, 동선을 조사해 보니 대처방식이 새로웠다.

귀국할 때 부모님이 절대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못하게 했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택시 기사에게 “내가 입국하는 사람인데 오늘 검사를 받을 것이다. 내일 결과 나오면 알려 드리겠다.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으니 내가 차에서 내리면 소독하시라. 관련된 비용은 내가 내겠다.”라고 설명하고 기사 분의 전화번호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부모님은 결과 나올 때까지 호텔에 가 있으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듣고 나는 ‘이거다!’라고 머릿속에서 번쩍 뭔가 떠올랐다.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생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에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 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공항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국자 중 수원 사람을 확인하고 그날 몇 시에 입국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후, 단체로 계약해 놓은 택시를 이용하여 입국자를 격리된 상태로 곧바로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입소시켰다. 여기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 머물게 하면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집으로 귀가시켰다. 그동안 가족들은 2주간 호텔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었고, 방역회사를 섭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음성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면 2주간 격리하는 동안에도 실제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초기 바이러스 확산 때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 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지 못하니 입국자가 선거연수원에서 묵으면서 사용했던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침대 시트도 바꾸고 소독도 꼼꼼하게 해야 했다. 한 사람이 묵고 간 방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데 30만 원씩 들었다. 그래도 방역회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 때는 1인당 80만 원이나 들었다. 초기에 바이러스 검사 비용은 16만 원이고 그 후에는 낮아졌다. 공항에서 오는 택시비 8만 원, 연수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는 수원도시공사에 있는 콜밴을 활용했다. 이렇게 검사 비용과 교통비, 식사비, 소독비까지 필요한데, 입국자가 공항에서 선거연수원으로 이동하여 하룻밤 묵은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발생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리고 입국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은 호텔로 이동하는데 호텔 비용을 30% 낮춰서 이용하게 했다. 그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호텔이 다 비어 있을 때라서 우리 시에서 미리 협의를 한 것이다.

그러자 이 '해외 입국자 안심 귀가 서비스'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해외 입국자를 위해 가족을 호텔에서 묵게 하는 이 시스템을 여러 곳에서 배워 갔다. 이것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언론에는 다른 도시 사례가 등장해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온 그 학생의 모델을 우리 시가 차용하여 선도적 사례를 만든 것이다. 해외 입국자 중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본 사람이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평소에 수원시민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모습

살았는데, 입국 과정에서 수원시의 세심한 서비스를 정말 체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물학과 수학, 그리고 통계학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이 감염병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 감염병은 처음에 생물학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수학으로 진전된 후 통계학으로 끝난다. 처음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냐, 어떻게 전염되었고 특성은 무엇이고, 변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탐지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드는 게 최대 과제가 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대응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감염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집합의 문제가 생겼다. 이젠 수학이다. 감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이를테면 모든 과정이 수학처럼 논리적 귀결로 이르게 된다. 그 이후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통계이다. 이 통계라는 건 정책 결정을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산되면 감염자를 무조건 음압병실에 놓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다. 열이 내리고 나온 것 같으면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음성인 사람이 나와야 집으로 보내는데, 음성이 나오고도 2주를 더 격리시킨다. 일단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증세가 있든 없든 한 달 이상 걸려서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그 데이터가 계속 쌓였다. 지금은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중증 환자가 아니면 감기 앓듯이 앓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열제를 먹거나 감기약을 먹고 치료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중증 환자는 병원에 가거나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2년이 지난 지금은 열흘 만에 퇴원이나 퇴소를 한다. 양성인 사람도 퇴소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3~4일 심하게 앓다가 며칠 지나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대부분 항체가 형성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쌓이고 확률도 알게 된 것이다.

확진자는 열흘 만에 생활치료시설에서 나오는데, 가족은 2주간을 무조건 격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확진자 본인은 돌아다니고 가족은 4일이나 더 격리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확률이고 통계가 된다. 처음에는 의료인들이 방역대책의 기준을 만들지만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젠 정책의 문제이다. 그다음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아서 확진자가 사망하지 않게 치료해야 했는데, 지금은 백신을 많이 접종했고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독감 때문에 영업금지하고 이동 제한하는 일은 없다. 독감 예방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심하면 마스크를 쓰고 열이 나면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 정책 결정은 이제 정치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마 토착화될 것이다. 전 세계로 다 퍼졌고 이제는 또 다른 독감이 된 것이다. 독감이 되면 없어지지 않고 매년 그 계절이 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메르스와 코로나의 대응법을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원 시민들은 어디에서 이동하든지
걸어서 6분 이내에 공원녹지에 닿을 수 있게
만들려고 계획했다.
우리 집 가까이
숲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IV

환경 · 통합

환경수도를 만드는 몇 가지 조건

환경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탄소중립

수원천살리기의 목표는 자연하천

시민농장, 당수동에서 왜 탑동으로 옮겼을까?

산수화, 끝내 이루어야 할 큰 꿈!





수원천 현장투어(2013.05.14)

환경수도를 만드는 몇 가지 조건

예전에는 환경이슈를 매체가 주도했다. 환경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어서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졌다. 도시의 수질은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 상수도에서 얼마만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가? 사용한 물은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대기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로 환경 기준치보다도 더 엄격한 대기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재사용과 재활용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 정책을 잘 펴고 있는가? 소각이나 매립은 안정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이 주목받곤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화학

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고, 생태계 자원을 얼마나 잘 보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해졌다. 이것을 도시 정책에서 잘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져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로 인식되는 분야가 있다. 깨끗한 물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공기 역시 당연히 마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헌법에서도 환경권이 생기면서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가 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조건을 환경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숲이 울창하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소음도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텅달아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도 맑은 공기와 소음 문제, 숲이나 공원은 가까이 있는가 등을 점점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목이다. 우리 집 주변에 울창한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이사를 앞둔 시민들의 핵심 관심사이자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환경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숲과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투리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녹지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 가장 먼저 공원녹지사업소를 새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공원녹지 정책을 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더했다. 수원천 복개 반대 시민운동을 통해서 살려낸 하천 살리기 운동이 있었는데, 이곳에 하천변 생태건강성을 느낄 수 있는 하천 코리도(corridor)를 형성했다. 하천 코리도는 물길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물길 옆에 수초가 자라고 그 옆 고수부지에 나무가 자라고,

제방 쪽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천 주변의 무성한 숲은 광교산에서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바람길이자 이동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이 이어지면 생태 축이자 생태계 이동통로가 될 뿐 아니라 물길이 흘러가면서 자연 생태계의 연결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천변에 나무를 가꾸고 단절된 구간에 녹지를 형성하게 했다.

걸어서 6분 이내에 달을 수 있는 공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 나무를 심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심을 때는 관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할 때는 심은 사람을 탓하고 이런 방식의 일처리가 문제였다. 녹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청에 하나의 과로 있었던 녹지 업무를 국 단위인 공원녹지사업소로 규모를 키웠다. 공원녹지의 사업을 더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과를 하나씩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서 공원녹지란 이미 잘 가꾸어진 공원과도 있고 하천도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 시 공원녹지의 심각한 문제는 공원의 나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점이다. 공원의 나무를 좀 더 풍성하게 가꿔야 하고 더불어 하천변 곳곳에도 나무를 심고, 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택지 단지에서 완충 숲 녹지를 만들 때도 최대한 충실하게 가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독특한 방법으로 공원을 가꾼 좋은 사례는 장안구 정자동 SK뷰아파트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숲으로 가꿨는데 실제 가보면 좋은 느낌이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를 조성할 때부터 특별하게 꾸밈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는 건물을 다 짓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을 만들지만 SK뷰아파트는 단지 설계를 해 놓고 나무부터 심어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3년가량이 지나서 뿌리가 착근(着根)되어 있었다.

이처럼 녹지 충실도가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매우 다르고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숲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도 있다. 이렇게 공원녹지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여 단지 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 아파트의 숲길을 한 바퀴 돌면 만석공원하고 비슷할 정도로 길어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고 그 안에는 특색 있는 숲을 다양하게 품고 있다. 또, 정자문화공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녹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은 수목원이었다. 수목원은 시민들이 숲을 즐기는 시설이자 녹지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물자원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도 하고 있다. 지금 수목원은 동서축으로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시민들은 어디에서 이동하든지 걸어서 6분 이내에 공원녹지에 닿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 집 가까이에 숲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장안구 정자동 SK뷰아파트

유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유일한 도시

우리 수원의 가장 좋은 자원은 시내 한가운데 팔달산이 있고, 머릿산인 광교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특색 있는 자연 조건이 대기환경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되었다. 왜냐하면 수원은 분지형 도시라서 대기 확산이 잘 되질 않는다. 광교산이 북쪽에 솟아 있고 칠보산, 청명산이 시내를 둘러싸면서 우리 시의 지형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듯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시의 경계와 하천의 유역이 일치하는 전국 유일한 도시라고 표현했다.

유역(流域, 강물이 흐르는 언저리)이라는 것은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강이나 수계로 흘러드는 지표수의 범위를 말하는데, 우리는 안성천 수계에 속해 있다. 수원은 다른 지역에 떨어진 빗물이 수원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지만 말이다. 지지대고개를 기점으로 남쪽은 우리 수원이고 안성천 수계에 속하고, 지지대고개의 북쪽은 의왕이고 한강 수계에 속해 있다. 수도권에 있어도 우리 시는 한강 수계가 아니다.

유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건 예전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농경사회에서는 유역이 하나의 문화권이고 공동체였다.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도 넓게 펼쳐져 있던 논농사는 수리권(하천이나 호소 등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의 공동체였다. 윗논이 물꼬를 트면 아랫논이 물을 같이 쓰는 것이다. 우리 수원은 다른 지역의 물을 받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물을 우리 지역에서 잘 모아서 우리끼리 잘 나눠 써야 했다. 그리고 이 물은 안성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정조대왕께서는 이런 수원의 지형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

역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우리 지역은 하천의 최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 않고 비가 오면 바로 빠져나간다. 한양은 한강이 있어 저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수원화성을 만들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려면 최소한의 용수가 필요하니 저수지를 만들어야 했다. 평상시에 다량의 물을 확보할 방법은 저수지밖에 없었다. 황구지천부터 진위천, 안성천으로 가는 큰 하천에는 물이 항상 가득 있어서 평택에는 저수지가 필요 없다. 우리 시와 인근의 물이 모두 그곳으로 흘러가니 말이다.

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이런 지리적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수원은 유역과 경계가 일치하는 도시이고 분지형 도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연환경이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런 특성에 맞는 환경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가장 좋은 자원인 수원화성을 시내의 또 다른 녹지 축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원화성 주변에는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수원화성 주변에는 조경을 하고 풀밭으로 가꾸야 하고, 수원화성 가운데를 흐르는 수원천은 굉장히 중요한 녹지 축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잘 살려야 한다.

이런 지리적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환경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빗물을 모으는 사업을 먼저 시행했다. 수원은 물이 부족해서 물을 잘 모으고 활용해야 하는데, 물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가 빗물이다. 우리 지역과 같은 자연조건에서는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없으니 인위적으로 잘 모아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저수지와 레인시티 사업도 매우 의미가 있다.

환경수도의 가장 큰 과제는 탄소중립

최근 들어 심각한 기후 위기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미션이 생겼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실천이 필수이고 국가 차원에서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2030년으로 목표를 앞당긴 곳도 있다. 우리 시도 환경수도를 완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우리 시는 대기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수원은 분지형이라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 큰 강이 흐르면 공기 흐름이 좋은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다. 서울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은 바로 한강이 있다는 점이다. 강을 따라서 바람길의 통로가 뚫려 있다. 우리는 서울보다 대기오염 배출원은 적지만 분지라서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 예전 자료를 보면 수원의 오존 빈도 수위가 제일 높게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우리는 사통팔달 교통의 도시라서 통과하는 교통이 많다. 1번 국도가 수원 시내를 관통하고, 동서 축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이동량이 꽤 많은 편이다.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니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유해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시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잘 이어져 있어서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 관점에서 보면 불리하다.

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일할 때 도시는 대중교통을 기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큰 교통의 축은 기간철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대중교통과 연결하는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1인용 전동이동수단)가 되어야 하고, 시내에서는 기간철도망과 연결되는 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환경수도를 만들려면 트램을 꼭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트램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램 도입은 아쉽게도 좌초됐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행했고 제일 과감하게 많은 수를 바꿨다.

지금은 수소버스가 새롭게 등장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인구 밀집 도시에 수소충전소인 수소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게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전기충전소는 곳곳에 소량으로 설치하면 되는데, 수소는 대형 저장고가 필요하고 이 저장고에서 나오는 수소스테이션이 굉장히 큰 규모로 필요하다. 이때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한데 수소스테이션이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은 수소버스가 적어서 수량 확보도 되질 않으니 설치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아토피특성화학교(남창초)
1주년기념(2015.05.13.)

는 수소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목표와 관점을 잘 세웠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시행할 사람이다. 녹색 감수성을 키워 줄 수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환경교육도 추진했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환경부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을 전문으로 전시하고 교육하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에너지 등을 교육하는 칠보 생태환경 체험교육관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만들었다. 이것은 시민 환경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 수원청개구리와 칠보치마 복원사업 등 생태계 보전사업도 벌였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도 마련했다.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도 만들었다. 아토피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어서 병원 기능이 아니라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토피 환자들이 황토방에서 쉴 수 있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그러나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유는 아니다. 또, 남창초등학교를 아토피 특성화학교로 만들기도 했다.

이런 자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환경수도를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사업 중심이 아니라 이런 자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도시 전체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거래

환경수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로 모든 도시와 산업,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배출량 이상으로 감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에서 탄소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이다. 모든 게 석유 중심으로 이미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의 큰 발생원인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는 최근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등장했지만, 그 전까지는 경유차를 줄이는 수준의 정책이었다. 휘발유도 역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건물의 난방에서도 탄소를 배출한다.

이처럼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2020년 10월 국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최근 들어서야 이런 정책이 도입됐다. 내가 시장으로 취임하던 2010년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큰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이클레이 활동을 하면서 도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등록부(cCR, carbon climate registry),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같은 사업을 우리 시에 도입했다. 이런 프로그램의 일부라도 우리 도시에서 먼저 추진하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런 사업은 누군가 이해해 주거나 알아주는 일은 아니었지만 잘 시행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시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2020년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 가운데 힘들고 황당한 일도 있었다. 몇 년 전 환경부에서 몇

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에너지와 상하수도, 폐기물 등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몇 가지 분야의 탄소 배출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탄소세를 물리는 정책이었다. 탄소를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이 정책에 매우 불리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 총량에 대해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는 일부만을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시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주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수원시는 쓰레기 배출량의 원단위(Intensity, 어떤 제품 또는 용역, 단위를 산출하는 데 투입된 재화의 단위)가 가장 적은 도시이고 다른 도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이 수치를 넘어서면 무조건 배출권의 탄소세를 물렸다. 우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환경수도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서 여러 분야에서 기준치를 낮춰 놓은 상태였다.

또, 전국의 기초지자체 226개와 광역지자체 17개까지 전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임의대로 뽑은 지자체 40여 곳에 대해서만 배출권 정량을 정해 놓았다. 이것을 초과하면 무조건 돈을 물리고 감축하면 인센티브로 다른 지자체에 팔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런데 원단위로 가장 많이 절약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배출권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수원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탄소 배출량도 늘 수밖에 없다. 그것을 원단위로 계산해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줄인 것을 기준으로 하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환경수도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우리 시가 탄소세를 제일 많이 부담하

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이런 식의 일괄적 일처리는 늘 답답했다.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줄여 가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환경수도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

환경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다. 세계적인 환경수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브라질의库里치바 같은 도시는 유명한 환경도시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원래부터 시민들이 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유한 게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환경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포기하고 에너지 공급률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주민들의 자각이 일어났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가 필요 없는 자전거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이용, 도시의 공공건물에 태양광 같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앞장서서 도입하고 추진했다. 그것을 시민 속에서 의제화시키고 주민들이 열심히 실천했다.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보봉(Vauban) 지구 같은 친환경 생태주거 단지를 만들고 친환경 생활방식을 도시에 적극 받아들였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환경도시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나 계기들이 있었다. 우리 시에서는 예전에 일어났던 수원천 복개

반대 운동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집중시킨 환경적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환경수도를 만들 계기는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시는 환경과 문화재적 가치가 같이 공유되어 있다. 또,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도 있었다. 이런 주제들이 수원을 환경수도로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덕분에 숲과 공원 같은 자연환경은 좀 더 충실하게 가꿀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계기를 결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은 트램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을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꾸고 싶었다. 아마도 트램이 도입되었으면 환경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찾는 데 굉장히 유의미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시내 핵심지역을 이동할 때는 굳이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몰아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수원을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남은 과제들도 많이 있다. 민선 8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수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원천 살리기의 목표는 자연하천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윗광교, 아랫광교를 흘러 광교저수지를 지나 영화동, 북수동, 남수동, 팔달로 등 도심을 가로질러 황구지천으로 흘러간다. 우리 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수원천은 시내 중심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원천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1991년부터 복개공사를 추진했다. 1991~1994년 매교부터 지동교(790m)까지 1단계 복개공사를 끝냈고, 이어서 1995~1996년 지동교부터 매향교(480m)를 덮는 2단계 복개공사를 한창 추진하고 있었다.

1995년에는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내가 활동하고 있던 시민단체는 당시에 시장 후보로 나온 세 사람에게 수원천을 복개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묻는 후보토론회를 열어서 수원방송에서 중계하기로 했다. 수원시장에 출마한 후보는 여당 이호선 후보, 야당 고재정 후보, 무소속 심재덕 후보였다.



수원천 복원현장에서(2012.04.26.)

심재덕 후보는 여당의 후보끼리 싸우다가 경선이 안 되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런데 이분은 개발 주체 중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문화원 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수원천을 복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분은 환경을 생각한 건 아니고 복개 구간에 남수문이 있는데 이것을 덮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수원문화원장은 남수문을 복원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라서 수원천 복개 반대 운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나는 1994년에 수원환경운동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1995년에는 수원천 복개 반대 시민단체를 꾸려서 사무국장을 맡았다. 장안대 박천우 교수가 시민운동 본부장을 맡고 나는 사무국장이 되고, 문화재 분야는 한신대 유봉학 교수가 앞장섰다. 이렇게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생태와 문화재 복원을 같이 내걸어 열심히 활동했다.

당시 수원시장으로 출마한 세 후보 중에 고재정 후보(야당)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서 반대 입장이었고, 이호선 후보(여당)는 복개를 추진한다고 했고, 심재덕 후보(무소속)는 복개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선거의 승리는 심재덕 후보였다. 1995년 7월 심 시장께서 취임했는데, 어떤 일인지 복개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을 찾아가서 왜 계속 추진하느냐, 약속이 틀리지 않냐, 선거 때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심 시장께서는 자신이 추진한 게 아니라 이전 관선 시장이 이미 계약해서 발주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전임 시장이 계약해 놓은 것을 후임 시장이 파기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원천 옆에 무허가 판자촌 같았던 상가들을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하천의 양측을 막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는 12%가량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면서 시위와 캠페

인을 열심히 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격렬해졌다. 그러자 어느 방송사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다. 1991년에 처음 수원천 복개공사를 할 때는 92%가 가까운 시민들이 찬성했는데, 몇 년이 지나 다시 찬반 격론이 붙으니 찬성 33%, 반대 44%가량으로 여론이 역전되었다. 수원천과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복개 공사를 주장했지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은 자연을 살려야지 하천을 덮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문화재와 깊이 관련 있는 수원천을 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식 있는 사람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시장을 고발한 까닭

나는 피를 내어 심 시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세계적인 문화재인 수원화성의 성곽이 수원천을 지나는데 복개 공사를 하면 수원화성의 가장 중요한 보물 중 하나인 남수문의 터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문화재위원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문화재청에 수원시장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청원도 했었다.

그러자 심 시장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 찾아갔더니 느닷없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맙다고 했다. 심 시장께서는 복개공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게 오히려 잘 되었다고 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당사자가 고맙다고 하니 상황은 묘하게 되었다. 사실 시장은 고발되어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되었다.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수원시로 공문이 하나 내려왔다. 공문은 남수문 터를 복개하면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공문이 오니 심 시장은 중앙부처에 이 사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수원천 복개 반대를 위해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고 찬반 토론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사실 이것은 수원시장에게 행정 행위를 변경할 주요 요인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받으니 매우 중요한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수원천 상류 구간인 광고저수지 아래에서부터 영화동까지 자연하천 조성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처럼 수원천도 자연하천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내가 주장했다. 그러자 심 시장께서는 타협안을 냈다. 일단 수원천 복개 예정지 양옆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기둥을 박아 놓은 상태인데, 가운데에 있는 기둥은 빼내고 양옆에 박은 기둥은 어차피 제방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이곳에 날개를 달아서 하천의 반은 덮어서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 반은 남겨 두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이렇게 애매한 중재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하천 옆에 이런 식의 큰 도로를 내면 안 되고, 특히 날개를 달아서 일부 구간을 덮으면 하천 생태계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강짜를 부렸다. 결국 심 시장께서 그 강짜를 다 받아들여 주셨다. 도로 위에 날개를 다는 것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인 1996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했다. 그때 유네

스코에서 파견된 조사관인 니말데 실바(Nimal De. Silva, 스리랑카 건축가, 문화재 전문가) 교수가 자문관으로 조사하러 다. 그래서 심 시장께 시민토론회를 요청했다. 수원천이 복개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남수문을 영원히 멸실시켜 수원화성은 세계적인 문화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어서 좋은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복개공사를 다 중지시키고 자연하천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지동교부터 매향교까지 480m가 덮이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 1996년에 이런 사실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개되는 하천을 막아낸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당시 심재덕 시장과의 추억이 하나 있다. 나와 심 시장은 1단계 복개공사 구간을 같이 걸었다. 심 시장께 “복개공사를 하면 하천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직접 보시지요. 하천 구간을 한번 걸어 봅시다.”라고 제안해서 여러 번을 같이 걸었다. 수원천 복개 구간은 컴컴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위험했다. 큰 장화를 신고 랜턴을 들고 걸어갔다. 곳곳에 물길에 깊이 빠지는 위험한 구간도 있다. 그런 것을 직접 보면서 경험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천에 복개공사를 해서 덮고 감추면 영원히 썩은 하천이 되지만 이곳을 열어 놓으면 오염된 구간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가꾸게 된다. 그리고 닫아 놓으면 어딘가에서 비밀스럽게 각종 오폐수를 버리곤 한다. 이런 현장을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다. 복개 구간을 걷다 보면 어디에는 폐유 같은 걸 막 쏟아놓고, 작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오폐수를 쏟아내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천 위를 덮으면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물고기가 사는 생태하천을 만든다

그 후 우리는 수원이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 내가 활동하던 수원 환경운동센터는 지역의 환경단체이지만 이런 시민운동의 성과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다. 당시 나는 지방의제 운동을 전국화시키는 일도 하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강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전국의 강을 무척 많이 다녔다. 이때 ‘강 살리기 콘테스트 전국대회’를 열었는데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 살리기 운동은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벌였는데, 수원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문화재와 결합하니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자연만 지키자고 해서 는 절대로 쉽지 않다. 수원천 복개 구간에 있는 영동시장은 수원에서 방귀 좀 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는 엄청난 일이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해 준 심 시장은 역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수원천 2단계 복개공사를 막아냈지만, 이미 복개된 1단계 공사 구간의 문제도 남아 있었다. 내가 2006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1단계 복개 구간(790m)을 철거하는 게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선거에서 지고 김용서 시장이 당선되었다. 김 시장은 1단계 공사를 추진하던 시절에는 복개 공사를 찬성했는데, 이후에 복개 구간을 철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에 1단계 복개 구간의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기공 행사를 열었다.

그 후 2010년 내가 수원시장에 취임하고 보니 이 공사는 서울의 청계천 모델이었다. 청계천은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정원성만 강조하여 콘크리트를 깔고 대리석으로 덮는 방식이었다. 하천에는 물길이 있고 그 옆에는



남수문 복원 기념행사(2012.06.09.)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고수부지 개념의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홍수가 나면 물이 차오르는 공간이다. 이곳을 전부 대리석으로 덮는 계획이었다. 청계천은 그렇게 복개공사를 했는데 수원천도 그 모델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내가 시장이 되자마자 환경수도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길게 누운 어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사는 자연하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천에 흙탕물이 흐르더라도 모래와 자갈이 있고 수초가 자란다면 물고기가 살 수 있다. 물고기가 사는 하천을 만들어야지 하천 주변을 대리석으로 다 덮은 어항을 만들면 안 된다. 서둘러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를 변경하여 대리석을 뜯어내게 했다. 그랬더니 공사비가 몇십억 원이나 절약됐다. 그러나 대리석

을 모두 뜯어내진 못하고 지동교 아래 구간의 일부에는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 그곳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얹혀 있어서 남겨 두기로 했다.

지금 수원천에는 물이 좀 탁해도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처럼 수원천은 생태하천을 만드는 개념이 들어 있다. 이 공사의 시작은 김용서 시장이 했고, 중간에 설계를 바꿔서 완성은 내가 추진했다. 수원천 1단계 복개공사는 1991년 시작해서 2009년에 철거했으니 18년이나 걸렸다. 18년 만에 복개공사를 하느라고 돈 들이고 걷어내느라고 또 아까운 돈을 들인 것이다. 이렇게 도시개발은 겨우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복원한 남수문

이후에는 남수문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남수문 사업에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세운 후에 홍수가 나서 화홍문과 남수문 전체가 몇 차례나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화홍문은 복원했는데 남수문은 복원하지 못했다. 그건 까닭이 있었다.

화홍문은 수문이 7개 있고, 수문의 넓이도 좀 더 넓다. 물이 아주 잘 빠지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흘러간다. 그런데 남수문은 수문이 9개지만 좁고, 더구나 물의 양이 많은 하류 구간에 있다. 그래서 복원 사업을 진행할 때 화홍문은 그대로 복원하더라도 남수문은 옛 모습 그대로 살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물길에 굉장히 위험했다. 남수문 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내가 그 일을 환기시켜 대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바이패스(bypass, 홍수가 났을 때 물의 일부가 나뉘어 흐르도록 하여 안전도를 높인 통로) 수로이다. 남수문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이 넘칠 때는 수문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남수문 밑으로도 물길이 흘러가게 설계했다. 하천에 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물길 통로의 폭과 규모, 강도 등을 예측하여 100년 만에 한 번 닥치는 강우 강도나, 50년 강도나를 측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했다. 이처럼 남수문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지만 현대기술인 바이패스 수로를 접목하여 큰비가 내렸을 때도 굳건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복원했다. 이 복원공사에서 물고기가 이동하는 어도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웠다. 물고기는 자신의 습성에 맞는 어도가 아니면 근처에 오질 않아서 몇 번이나 실험을 했다. 남수문이 생기면서 물길이 막히게 되니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어도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이 어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생태적이어야 하고, 물고기가 선호하는 집과 길을 만들어야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원천에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 전부를 활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곳곳에 내 의견이 스며 있고 반영된 부분도 많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만큼이나 그곳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천의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없애는 설계를 다시 바꿀 때 제 집무실에서 날마다 밤늦게까지 전문가들과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는 수시로 수원천에 나갔다.

수원천은 우리 시의 상징 사업이고, 수원천이 사는 것이 수원이 사는 길이고, 수원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이해할까? 그래도 누군가는 수원천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아, 이때 이런 갈등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또 이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시민농장, 당수동에서 왜 탑동으로 옮겼을까?

우리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특히 수원은 영농과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어떻게든 장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공원의 일부분을 일궈서 자투리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땅을 일구려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는 어렵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어느 신문사 주최로 우리 시의 땅에서 꽃 축제를 열면서 입장료를 받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기사였다.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 알아보니 당수동에 소재한 10만 평이나 되는 국유지였다. 국유지에 매년 얼마씩 돈을 내고 신문사가 꽃 축제를 하고 입장료를 받고 행사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당수동을 찾아가 보니 그 10만 평이 너무 좋았다. 이곳을 국가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시민농장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탑동시민농장 전경

이 국유지에는 큰 나무도 있고 옛날에 농장을 관리하던 허름한 건물도 몇 채 있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엉망이라 도로부터 정비해야 했고, 이 땅을 빌리는 데 연간 5억~6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이곳을 도시농부들의 시민농장으로 만들어 여러 해 동안 정말 재미있게 일했다. 도시농부 5천~6천 명이 넘게 참여했고 어느 해에는 7천 명이 넘기도 했다. 농장을 분양받은 한 가구당 가족 3명이 함께 온다고 가정하면 2만 명이 넘게 농장에 올 수도 있는데, 시민농장이 워낙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혼잡하지 않았다.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아예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예산 500억 원을 준비했다. 10만 평 땅을 사들여서 시민농장을 제대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땅을 사려고 추진하니 땅값이 600억~700억 원으로 뛰었고, 더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국가 땅이라서 기획재정부가 담당하지만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민농장을 잘 가꾸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국가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농장을 쓰지 못하게 됐다. 2016년 이 땅이 아파트 단지를 짓는 당수지구로 결정되어 택지개발로 국가에서 밀고 들어오니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시민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내년부터 문을 닫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수동 농장을 접는 데 따른 안타까운 소회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민농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이 됐다. 그다음에는 옛 서울대 농대 부지를 사려고 했다. 당수동 농장을 사려고 준비했던 500억 원으로 사서 잘 꾸민 뒤 개방하려고 생각했는데, 별안간 경기도가 치고 들어왔다. 경기도가 소유하던 경인교대 부지와 서울대 농대 부지 일부를 교환해서 그곳은 경기도의 소유가 됐다.

새로운 터전, 탑동농장

결국 다른 대안을 찾다가 예전에 서울대 농대 뒤 축산시험장이 있던 탑동농장을 어렵게 구했다. 그런데 당수동 농장은 10만 평에 5억~6억 원에 빌렸는데, 탑동농장은 3만 7천 평에 20억~22억 원이나 되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났다. 탑동농장은 서울대 농대의 농장이었는데 농대가 관악캠퍼스로 옮겨 가고, 이 땅은 국립대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재산평가 기준을 살펴봤다. 이 땅에 돼지사육장, 곡물저장소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이 낡은 건물을 모두 재산가치가 있다고 포함시킨 것이다. 아무런 쓸모없는 건물을 재산으로 치다니 기가 막혔다. 더구나 국가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여태까지 10년 넘게 그냥 놀리고 있던 땅인데, 막상 빌리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즐겁게 가꾸는 시민농장으로 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에서는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탑동농장의 관리권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가지고 있었다. 이 공사의 본부장이 “시장님의 뜻을 너무 잘 알겠어요. 이 땅을 쓸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왔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인정된 낡은 건물에 대해 설명하니 “우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낡아서 안 쓰는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라고 했다.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낡은 건물이니 자산공사의 비용으로 철거한 뒤 우리 시에 임대해 주겠다고 했다. 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분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남겨 둘 건물과 철거할 건물을 살펴봤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헐기로 했다. 그래서 6억~7억 원가량 임대료를 낮췄다. 꼭 필요한 건물 몇 개만 남겨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푸른지대창작센터이다. 작가들은 이곳에서 작품활동을 한 결과물을 모아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입주작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 센터에는 1년씩 작가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작품활동마저 어려울 것 같아서 원하는 분들은 1년 더 사용하게 하라고 했다.

낡은 건물로 남아 있던 돼지우리 사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창작센터로 만들고, 창고는 큰 전시관으로 꾸미고 울타리도 만드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 이렇게 농장을 정비하는 예산도 20억 원가량으로 꽤 들었다. 당수동 시민농장에는 5천~6천 명 이상의 도시농부들이 참여했는데, 탑동 농장은 평수가 줄어들어서 2천~2천 5백 가구가 채소와 화초를 열심히 가꾸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새로운 농장을 꾸몄다. 도시농장은 많은 시민들이 작물을 탐 흘려 가꾸면서 보람을 느끼고, 초록식물이 자라는 모습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 도시도 푸르게 가꾸는 것이어서 적극 지원하고 싶었다.

시민농장의 교훈

당수동 시민농장과 탑동 시민농장에선 두 가지 공무원의 모습을 보았다. 갑질 공무원과 정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해법을 찾는 공무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유형을 봤다. 한 사람은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조직 안에서는 찍혀서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분의 노력으로

농장을 가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어 있던 그 땅은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즐겨 찾으면서 활성화되고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당수동 농장에서는 국가의 횡포를 보았고, 그다음에 탑동 시민농장에서는 공무원의 갑질과 참 공무원을 만났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국가 운영 체계에서는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느낀 큰 벽이기도 했다.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을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저렇게 국가기관에서 철저히 막아야 할까?

당수동 시민농장이 폐쇄될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농장에 가서 시민의 행복을 빼앗지 말라고 테모를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당수동 시민농장에 투자해 놓은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손실은 없었지만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다.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울며불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탑동 농장은 투자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푸른지대창작센터만 해도 20억 원가량이 들었다. 리모델링과 주변 정리 작업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50억 원 이상이 들었다. 만약 탑동 농장을 또다시 뺏어간다면 내가 단식농성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농장을 시민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말이다. 국가는 시민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외치면서 말이다. 앞으로 어렵게 일군 이 탑동농장을 잘 가꾸고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탑동 농장에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다. 바로 서둔야학이다. 탑동농장 끝부분인 서울대 수목원 뒤쪽에 낡은 건물 두 동이 있다. 이곳이 1970년대부터 서울대 농

대생들이 야학을 하던 건물이다. 숲 외진 곳에 있는 조그만 슬레이트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야학은 1980년대까지 운영했다. 나는 시내 장안문 앞 목조건물에 있던 화홍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서둔야학의 졸업생들과 교사들은 야학의 간판을 걸고 공부하던 곳이라 이 건물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탐동농장을 꾸미면서 서둔야학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 “이곳에서 당신들이 살리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살리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는 보존시켰고 조출한 행사도 열었다.

서울대 농대 앞에는 터키 주둔군들이 일구던 학교도 있다. 그 학교의 흔적은 없어졌지만 터가 있고, 그 원형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보존해야 될 건물이 있다. 건물 앞에 예전에 터키 주둔군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너무 흐려지고 많이 망가졌다고 한다. 터키 대사관에서 우리 시로 연락이 와서 다시 싹 정비를 해 준 적도 있다. 양카라공원 가기 전 입구 쪽에 있는 곳인데, 6.25전쟁 때 빔어진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자 아이의 은인인 터키 병사를 찾는 이야기가 있는데 TV에 방영된 적도 있다. 이 땅을 우리 시에서 사들이려고 하니 100억 원이 나 되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은 방법이 없는데 이곳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서둔야학

산수화, 끝내 이루어야 할 큰 꿈!

오래전부터 수원, 오산, 화성(줄여서 산수화)의 3개 시 통합 추진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수원은 오랫동안 행정력이 훈련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나 시의 면적이 넓지 않고 대부분의 땅이 개발되어서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화성은 별안간 20만 명에서 9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급성장해서 행정력이 그만큼 못 따라갈 정도이고, 면적도 매우 광활하여 전 지역을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전에는 전원형 도시였는데 최근 들어서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 4분의 3 이상이 동탄과 봉담 신도시 쪽으로 몰려들었다. 화성시는 기형적으로 큰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오산 · 화성시장과 함께

도시가 된 경우라면, 오산은 자급자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조그만 규모의 도시이다.

이처럼 각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완결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3개 시 통합만큼 시너지가 큰 게 없다. 그 건 누구나 생각해도 답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3개 시는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아주 절실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그러나 통합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이유는 이 세 도시 안에 있는 정치력과 공무원들의 성향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다. 수원이 커지면 광역시로 승격되어 독립한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세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회 요소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역 통합 요구는 산수화뿐 아니라 안양, 의왕, 과천, 군포에서도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들 시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행정구역이 갈리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의 시 경계 조정도 쉽게 할 수가 없다. 또, 택시를 타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달렸지만 도시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서 요금이 달라지니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3개 시가 통합되면 수원시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은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다른 시에서 무슨 피해를 보겠나? 화성에는 수원 이름이 붙은 대학이 여럿 있다. 화성이라고 붙이지 않는 것은 수원이란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수원의 브랜드를 얻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시민들에게도 나은 점이 늘어난다.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강제로 통합을 추진할 수는 없

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방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투표 좌절되다

3개 시 통합은 민선 5기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때 마침 지역통합의 불이 일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체제 개편을 중심 국정과제로 정했다. 이때 마산과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했는데 이것은 주민투표도 없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통합을 추진했는데, 청주와 청원, 그리고 전주와 완주였다. 이때 당연히 우리 수원과 오산, 화성도 통합했어야 했다.

처음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역 유권자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서 신청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붙인다는 기준을 정했다. 수원, 오산, 화성의 시민들이 나서서 역광장 등에서 서명받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 서명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자료를 올리게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투표를 붙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청주와 청원, 전주와 완주가 통합추진할 때도 이렇게 진행했다.

우리도 열심히 서명을 받았는데, 시민들 2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2 이상이 서명했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효표가 많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그 후에는 시민들에게 전화 설문 조사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를 붙이겠다고 했다. 그때 수원 60%가량, 오산 70%가량, 화성 40%가량으로 나온 바람에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

주민투표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3개 시의 통합 논의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주민투표를 한 청주와 청원은 통합이 통과됐고, 전주와 완주는 완주가 반대해서 통합이 무산됐다. 완주시는 전주시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서 당연히 통합해야 유리한데 아쉽게도 무산됐다. 나는 이것도 두고두고 잘못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주민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분들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려서 여론이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당연히 통합되어야 할 전주와 완주는 무산됐고 수원, 오산, 화성은 주민투표에 올라가지도 못한 결과가 됐다. 이 일이 무산되어서 나는 속이 너무나 상했다. 그때 전화 설문조사 50%를 넘지 못해서 주민투표까지 추진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두고두고 정말 아쉬움으로 남았다.

언젠가 통합의 그날은 온다!

옛날부터 수원과 오산, 화성의 거점은 수원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화성과 오산 학생들은 수원의 학교를 다녔고, 결혼식을 할 때도 수원 시내로 와서 했다. 동탄은 행정구역이 화성이지만 화성 시내보다는 오산이 훨씬 더 가깝고 수원도 매우 가깝다. 동탄은 새로 생긴 신도시라서 동탄 사람들은 화성 시민이라는 아이덴티티(identity, 주체성, 독자성, 동일성)도 별로 없는 편이다.

이처럼 도시는 생활권 단위로 형성되는 게 좋다. 생활권은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2019.05.28.)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다. 이 모든 관점으로 볼 때 수원, 오산, 화성은 각기 부족한 부분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안양, 의왕, 과천, 군포의 4개 도시를 통합하려는 것은 도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 3개 시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처럼 수원은 경기 남부 여러 도시들의 거점이 되는 곳인데, 최근에는 화성과 용인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커졌을 때 기회 요인을 같이 나누는 게 훨씬 좋다. 용인은 땅이 워낙 넓고 도시도 커져서 우리와는 별개라 하더라도 수원, 오산, 화성은 하나이다. 용인과 수원은 유역(流域, 강물이 흐르는 언저리)이 다르지만 산수화는 유역도 같다. 하나의 생활권과 유역권을 쓰기 때문에 통합의 유용성이 훨씬 크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발목이 잡혀서 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잃고 있다. 산수화 세 도시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게 중앙정부이다. 큰 그림 속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짜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큰 그림은 그리지 않고 오히려 통제만 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 기형으로 변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건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이다. 기득권을 놓을 수 없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 말이다. 기업은 미래를 보고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 인수합병)를 결정하지만 행정은 한번 나눠놓으면 좀처럼 쉽지 않다.

도시마다 통합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수원은 가장 합당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출 수 있기 때문에 3개 시 통합이 되면 지금 휘휘 날고 있는 중국 상해와 맞먹는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다

큰 그림으로 그려서 서해안으로 진출하고,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아직은 산수화 통합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행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수원과 오산, 화성의 통합 논의만 떼어내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현재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별다른 행정 방법이 없다. 3개 시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각각의 시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경기도가 찬성할 리도 없다. 나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통합이 되고 단체장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통합 추진을 나설 수 있게 말이다.

산수화 통합은 어려워졌지만 2022년 1월부터 수원은 특례시로 승격했다. 특례시가 되면 첫 번째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 주민들의 복지가 많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의 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게 많아서 특례시로 승격하기 전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계속 싸우기도 했다. 세 번째는 보다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게 되니 훨씬 더 행정이 원활해지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우리 도시의 문제라면 **배짱을 가지고
버텨야** 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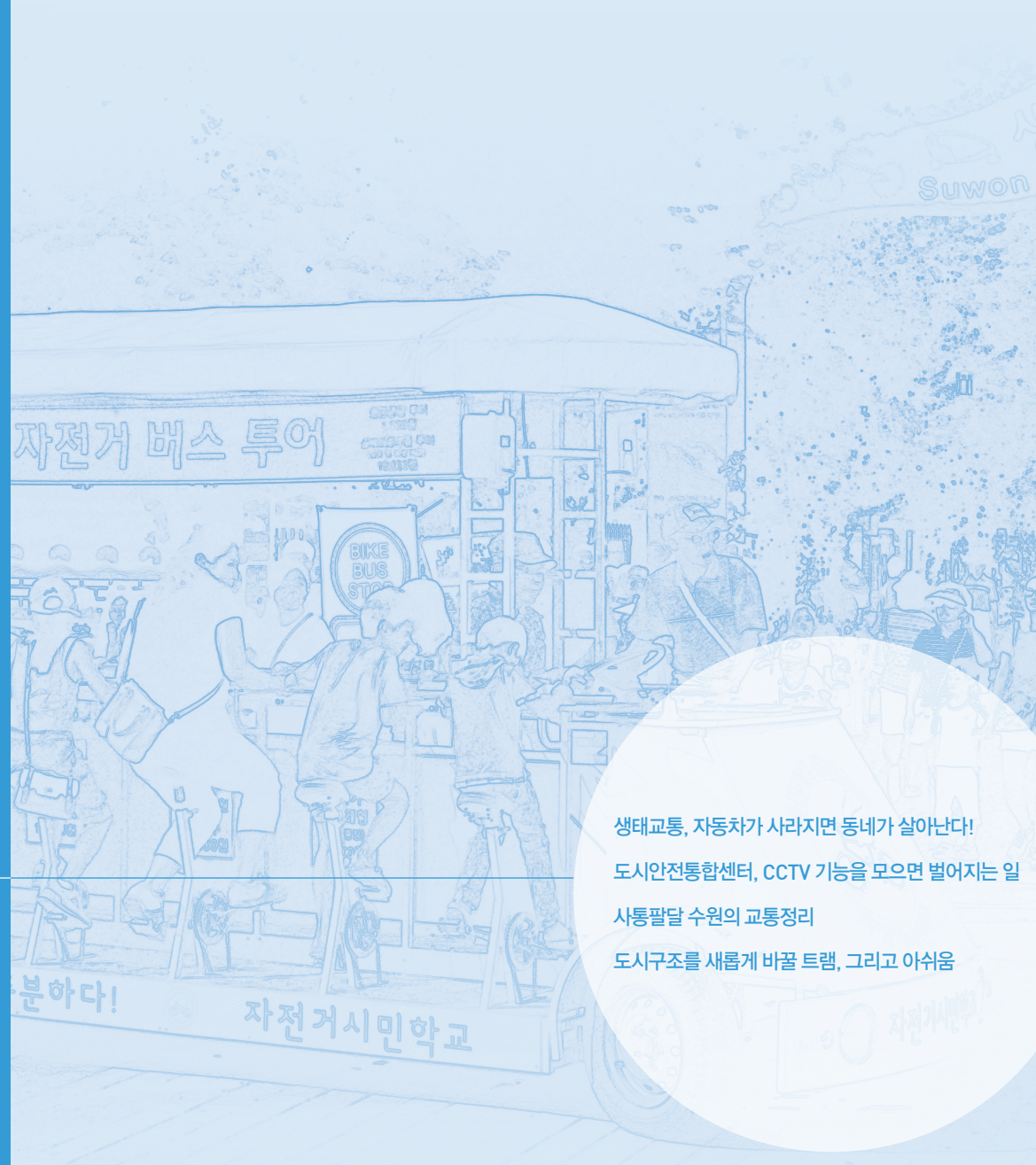
10년과 100년,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엄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V

교통



생태교통, 자동차가 사라지면 동네가 살아난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기능을 모으면 벌어지는 일

사통팔달 수원의 교통정리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트램, 그리고 아쉬움



생태교통 수원 2013 개막식

생태교통, 자동차가 사라지면 동네가 살아난다!

2013년 8월 말, 큰 행사를 앞두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심한 열이었다. 아주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심한 오한까지 와서 침대가 들썩일 정도로 덜덜 떨 떨어졌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담당 의사가 처음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이런저런 약을 써 보다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장이 된 전문의가 다시 진료를 하더니 급성맹장염이라며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일모레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지만 급히 복강경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 후 하루 만에 병원에서 나와서 수술 부위를 움켜쥔 채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시민들에게 수술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니 어찌겠는가? 행사장에서도 얼굴이 파랗게 변해서는 겨우 앉아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친환경 이동 수단을 타고 퍼레이드까지 해야 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행사 개막식에서는 힘차게 개

막연설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목소리마저 잘 나오지 않았다. 힘없는 개막 연설이라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내 건강 상태가 위태위태했다. 그래도 시장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행사장을 곳곳하게 지켜야 했다. 이 행사는 바로 세계 최초로 행궁동에서 열렸던 '생태교통 페스티벌 (생태교통 수원 2013)'이다.

차 없는 거리를 꿈꾸다

유럽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거리를 살린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쿠리치바의 '꽃의 거리'가 있다. 쿠리치바의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 시장이 그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시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자 도로를 막고 아이들 그림대회를 그 거리에서 열었다. 아이들이 거리를 점령한 가운데 차를 막고 공사를 시작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건축가 출신의 이 시장은 거리를 살리는 방법은 '차를 없애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작은 동네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걷는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펴는 곳이 있고, 골목 하나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도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열기도 하고, 상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시장을 열고 예술가들이 공연을 열어서 들쭉날쭉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 이걸 어떻게 구현해

야 할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내 생각에는 북문(장안문)에서 남문(팔달문)까지 차를 막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수원의 중심부를 걷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만들면 수원화성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늘 상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얼마나 저항이 심할까? 당장 수많은 상점과 회사 등에서는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니 시민들의 항의는 당연할 것이다.

2011년 창원시에서 생태교통총회가 열렸는데 나는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의 글로벌 집행위원으로 참석했다. 창원 시내의 거리 모양이 방사형 평지이고 도로가 반듯하게 난 계획도시라서 교통 대안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당시 박완수 창원시장은 자전거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1회 생태교통 연맹 총회'라는 국제행사를 창원으로 유치했다.

이 행사에서 이클레이 짐머만 사무총장이 내게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불쑥 제안했다. 일정한 구역의 한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생활하는 도전을 수원시에서 맡아 달라고 했다. 짐머만 사무총장은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인지를 잘 알지만 내가 환경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시장이라서 사업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믿고 제안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북문에서 남문까지 차 없는 거리 사업을 늘 상상하고 있었지만 한 동네에서,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자동차를 멈추는 행사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되었다. 미리 의논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고, 총회가 끝나기 전에 답을 해야 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민고민하다가 총회 마지막에 결국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

버렸다. 이제야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승낙은 실수였다. 새로운 생태교통 시범사업인 '제1회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이렇게 시작됐다.

자동차 없이 한 달 살아보기

세계 최초로 시도한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없이 한 달 살아보기'였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된 미래사회에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생활하는지를 미리 보여 주고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미세먼지 같은 도시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체험해보는 실험적인 국제행사였다. 행사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고, 행사 지역은 행궁동(행정동)의 일부인 신평동과 장안동으로 정해졌다.

어렵게 행사를 승낙한 후에도 고민은 만만찮았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은 1,500대나 되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슈퍼와 식당 같은 상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차량, 심지어 많은 차들이 드나드는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2년 전부터 가가호호 행사 안내를 하고 차 없는 거리 사전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중요한 행사이지만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사업하는 주민들에게는 한 달 동안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행사가 아니라 마을을 함께 살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지역은 수원화성 안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낡고 어두웠던 거리를 화사하게 바꾸는 선물을 함께 주기로 했다. 도시재



행궁동생태교통특화거리

생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하수관거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울퉁불퉁 낡고 깨진 골목길의 보도블록을 깔끔하게 새로 깔고, 가로등도 바꾸고 거리에 나무를 심는 등 환경정비를 시작했다. 거리의 간판도 깔끔하고 통일성 있게 바꾸고, 담장도 바꾸고 화단도 화사하게 꾸몄다. 그리고 행사를 여는 한 달 동안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버스정류장이나 병원, 시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동네를 살릴 기회를 줄 테니 나를 믿고 생태교통 행사를 함께해 보자고 설득했다. 찬성하는 주민들도 계셨지만 몇몇 분들은 동네에서 악덕시장 물러가라고 시위하고 시청으로 주민들이 몰려오는 일이 2년 동안 계속 벌어졌다. 걷고 싶은 길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주민들이 드러누워서 며칠씩 공사를 멈추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했다. 행사일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반대는 격렬해졌고 1,500대나 되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지정 주차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국제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성공적으로 추진될까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행사 바로 전날인 8월 31일 밤 12시 30분, 동네에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순간 나는 굉장히 울컥했다. 퇴근시간이 되고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이 되자 동네 골목에 있던 모든 자동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채 행렬을 이루고 지정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국제행사는 어찌 됐든 잘 치러야 한다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신 것이다.

행궁광장 옆 공터(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자리)엔 거대한 행사용 천막인 파빌리온을 설치했다. 한 쪽에는 생태교통 전시관을 꾸미고 다른 한 쪽엔

너른 회의장을 만들어 생태교통 세계총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등 날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행궁광장과 동네 안에서는 자전거 버스와 자전거 택시, 세그웨이(segway, 두 바퀴로 달리는 전동 이륜 평행차) 같은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들이 거리를 누볐고, 행사장 앞에는 트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또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거리공연과 음악회, 먹거리 체험, 벼룩시장 등 날마다 축제가 벌어졌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무려 백만 명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었다. 매우 어렵고 만만찮은 행사였지만 멋지게 성공했다. 그 후 생태교통 페스티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와 대만 제2의 도시인 카오슝 등으로 이어졌다.

행사 그 후

행사를 준비할 때 내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었다. 행사 준비 기간에 시위가 매우 격렬했고 행사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는 불안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했다. “한 달 동안의 행사가 끝나면 시 주최로 차 없는 거리를 강제로 하는 일은 없다. 대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사 이후에 열린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행사를 열고, 생태교통 행사를 열었던 중심 도로의 자동차는 30km로 속도제한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결의를 했다.

이후에도 행궁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이곳에 주민들이 실거주 목적인 한옥을 지으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 채당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구옥을 사서 수리하면 8,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절대 한옥촌을 만

들지는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옥에서 사람들이 실제 살면서 가정집과 가게가 어우러지는 자연스런 동네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집을 조선시대처럼 일제히 한옥으로 바꾸어 인위적인 관광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양옥집과 한옥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을 행궁동에서 진행했지만 시에서 주최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왔고, 나도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방문했다. 뜻있는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마을을 스스로 지키고 가꿀 수 있게 적극 돕고 싶었다.

생태교통 행사 때 신평동과 장안동을 알게 된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오고 가게를 열기 시작하면서 골목엔 점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행리단길’이라는 별칭이 생겼고 수원 대표적 걷고 싶은 길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이 작은 동네에 카페 100개가 넘는 정도가 되었다.

동네가 살아나는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원주민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태교통 행사 이후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라고 길을 살리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가게들이 들어오고 사업주도 여러 번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반갑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지만 지금은 상인들끼리도 참여하게 다투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런 새로운 문제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훈훈한 인심이 있고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동네로 거듭나면 좋겠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기능을 모으면 벌어지는 일

내가 처음 수원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광고신도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종합관제센터를 만드는 일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방법과 교통관제, 재난재해 등 우리 시에 설치된 CCTV 종류가 대여섯 가지가 넘는데 이것을 각 기능별, 기관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첨단시스템을 왜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 무렵 오원춘 사건과 박춘풍 사건 등 안타까운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 보안용 CCTV가 300개 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강력사건을 대처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하기로 새로운 방침을 정하면서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CCTV를 각각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범지대에 설치한 CCTV로 산불감시도 하고 교통관제도 하는 등 여러 용도로 같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일 것이라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 시연

고 판단됐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하던 CCTV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현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체 CCTV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교통흐름을 관찰하는 교통상황실, 민원 안내를 하는 휴먼콜센터가 있다. 이 중 우리 시의 교통흐름을 보는 교통상황실은 당시 중부경찰서에 있었다. 이것을 광고에 있는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옮기고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CCTV 기능도 모았다. 300개가량이었던 CCTV가 지금은 1만 개가 넘게 설치되면서 우리 시는 단위 면적당 CCTV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 물론 CCTV가 대폭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이니 말이다.

CCTV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총 38명이 4개조로 나뉘어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관찰한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할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1~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CCTV 모니터링은 위탁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분들이 맡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임금을 대폭 상향하고,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범죄가 의심되거나 수상한 모습을 포착하면 추가로 수당을 주기로 했더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수상한 장면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CCTV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남부경찰서에도 종합상황실이 있긴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시의 CCTV통합관제센터이다. CCTV가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

다. 어느 골목길에서 신고자가 112로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 신호시스템을 통해 CCTV통합관제센터의 전체화면에 위치가 뜨게 만들었다.

위치가 뜨면 주변에 있는 통로의 CCTV도 동시에 같은 화면에 보이게 된다. 주변 현장에 나가 있는 순찰차에도 위치가 전송되면서 그 지점을 향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피해자나 범인이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면 CCTV의 화면도 따라가며 추적한다.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CCTV 화면이 계속 이동하면서 주변을 비추는 것이다. 이 상황이 모두 순찰차에 전송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에서 범인을 잡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처음 만들었다.

남부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있던 경찰도 우리 시의 CCTV통합관제센터에 함께 배치했다. 수원시와 남부경찰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다른 경찰서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다. 다른 경찰서의 상황실에도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우리 시에는 경찰서가 모두 3곳 있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모두 연결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만들자, 다른 도시에서도 이 모델을 참고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CCTV 관제와 지역방위가 만났을 때

우리 향토사단인 경기남부권 51사단장이 이 시스템을 매우 흥미롭게 봤다고 했다. 수원시장, 51사단장, 경찰서장 등이 주관하는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일 년

에 몇 차례씩 회의를 하는데, 군부대가 군 작전이나 방위, 안전 관리를 할 때 우리 시의 CCTV와 연결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다. 군부대가 하는 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

51사단의 중대 규모가 수원시를 방위하는데, 그 중대 본부의 시스템과 우리 시의 CCTV가 같이 관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작동되게 했다. 이렇게 도시안전통합센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경찰서와 군부대, 그리고 소방서까지 함께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 있는 CCTV를 경찰서와 통합하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이어서 군부대와 통합 방위 관련 시스템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시험해보고 그때마다 행사도 열고 시연도 같이 했다.

이것이 사단에서 소위 대박을 쳤다고 했다. 사단장이 이 일로 승진하자, 다른 사단에서도 각 지자체와 CCTV를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갔다. 그 일로 인해 수원시는 당시 국민안전처로부터 '2016년 민방위 업무평가 최우수 대통령상'도 받았다. 이런 통합 시스템 관련 사업을 우리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제안하면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파생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로도 연결할 수 있다.

이상 행동을 감지하여 AI 시스템으로 범죄 발생 전에 범인을 색출할 수도 있고, 범죄가 의심되는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거나 성폭력, 데이트폭력, 소매치기 같은 범죄행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행동 유형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전에 입력되어 유사한 모습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학습이 되는 시스템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가 갖추고 있는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

어느 도시든 이런 시스템과 재정을 갖춘 곳이라면 이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제는 영화관보다는 넷플릭스(netflix) 하나로 세계 곳곳을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듯이 말이다. 물론 넷플릭스 같은 대중문화 사업은 돈이 되니 누군가는 추진하는데, 공공의 도시 시스템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시도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더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개발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는 교통상황실은 수원에 있는 모든 도로의 교통량과 속도, 도로 사정을 한꺼번에 두루 살펴보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여러 갈래로 사업이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개발이다.

이것은 우리 시의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만들어낸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그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정도라면 앰불런스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주고 연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직



삼지공원과 방범용 CCTV

원이 놀라운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기본적인 설계는 이런 방식이다. 만약 내가 호매실에서 아주대병원으로 급히 가야 할 일이 발생하여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구급차를 타고 호매실에서 아주대병원까지 가려면 교통신호를 적어도 열댓 개 이상을 만나게 된다. 한 번 걸리면 보통 2~3분씩 도로에서 멈춰있어야 하니 적어도 15~20분을 신호대기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소중한 골든타임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도로 위에서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직원은 이렇게 구상했다고 했다. 우리 수원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가 12km 안팎이다. 끝과 끝이라고 해도 웬만한 곳은 10km가량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구급차가 환자를 신고 달려가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도착지로 찍으면 가장 빠른 길이 내비게이션으로 뜬다. 그리고 GPS로 추적하여 그 노선에 해당되는 119구급차의 현재 위치가 나오고, 이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할 때 교통 신호등을 자동으로 초록색 신호로 바뀌어서 계속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로의 교통신호가 계속 직진으로 바뀌면서 신호대기에 걸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 대략 10분가량이면 우리 시의 어느 응급실이나 달려갈 수 있고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개발한 직원이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최)’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놀랍게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면서 우리 시가 상금 1억을 받았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직원을 시장 집무실로 초대해서 칭찬했다. 이런 일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직접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데 정말 놀라운 성과

를 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일부 종합병원이 아니라 모든 병원과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 구급차뿐 아니라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일상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도로 교통에 혼잡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나 화재진압 등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경상도 쪽에서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쓴다고 들었다. 소방차에 앱을 설치해서 차량이 달려가는 방향을 관제센터에서 포착하여 추적하면서 신호대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신호를 열어 주는 방식인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여 많이 보급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소방차 운전자가 직접 신호를 뚫으면서 달려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우리가 개발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외에도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통팔달 수원의 교통정리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하고 있던 지하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는 것이었다. 수인선과 분당선은 인천과 수원, 그리고 분당을 거쳐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전철 노선이다. 이중 수인선과 분당선을 지하로 연결하는 것은 온전히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계획에는 수인선과 분당선이 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 시민들의 이동이 불편해져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을 거쳐서 분당, 그리고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되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시 분당선은 수원역까지 오는 지하철이었지만 수인선은 지상철이라서 연결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지하철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설할 때 양쪽의 레일을 연결하여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수인선이 지상철로 계획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수인선은 인천에서 선적하고 하선하는 여러 가지 화물을 화물열차에 싣고 달리다가 경부선 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었다. 그래서 거대한 화물 때문에 지



수원역 환승센터

하화 노선으로 연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지하화 건설로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 시가 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화물열차 노선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연결하기로 했다. 수인선이 인천에서 달려오다가 화성시 쪽에서 경부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화물이 이동하는 노선을 따로 만들면 화물열차가 지하로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2013년 이 미션을 당시 박래현 교통행정과장에게 줬더니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설득을 잘했다. 그래서 화물선은 인천에서 오다가 수원 오기 전에 방향을 틀어서 경부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따로 만들고, 수원에서는 지하로 이어지는 일직선 노선을 만들었다. 그 지하화 공사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하는 데 당시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상당히 협조해 줬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인이었다. 그리고 지하화되는 전철 구간의 지상은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꾸밀 수 있게 한다는 협약의 조건을 붙였는데 김 이사장께서 정말 고맙게도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은인이 될 정도로 좋은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과정 속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최초 협약 때 1,122억 원을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했는데, 추가로 455억 원을 부담하라며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로 불편한 건 우리 시민들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시켜야 했다. 할 수 없이 우리 시가 455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2020년 9월 12일 수인선을 개통했다. 현재 공사 비용에 대한 차액분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꾸미는 사업도 곧 조성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수인선을 연결하는 직선 통로를 만들 때 지하역사에서 동

편과 서편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찰구로 들어갔다 나와야 이동 가능하고 이동통로의 폭도 너무 좁고 위험하다.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많이 했지만 구조적으로 지하 이동통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상으로 올라와서 넘어가야 한다. 그나마 최대한 보완하여 이용자는 자유롭게 지하를 이동할 수 있게 했지만,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양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계되지 못했다.

수원역 환승센터와 과선교

2010년 내가 취임할 무렵 수원역은 매우 복잡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다. 그 교통혼잡 상태에서 대규모의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계획이 허가가 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원시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축 허가가 승인되고 다음 단계인 경기도 건축 심의를 받는 단계를 추진 중이었는데, 일단 중단시켰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교통량과 AK플라자 건물을 증축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반대편에 남아 있는 부지에 KCC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늘여날 수 있는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 대책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보류시켜 놓았다. 그 후 1년 동안 용역조사를 새로 해서 나온 결과는 서수원 쪽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과선교를 연장시키고, 자동차들이 회차하여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 대략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이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일부를 기업들이 분담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교통개선 비용을 고려해서 총 비용의 40% 수준인 700억 원가량을 기업 3곳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KCC, 롯데, AK 등 3개 기업이 함께 610억 원을 내서, 이를 과선교 확장 공사로 분담하도록 했다. 그리고 분담금이 들어올 때까지 사업 허가를 보류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류하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이미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서수원 발전에 호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수원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 분들이 시장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나는 허가를 보류한다고 할 때 배짱이 있었다. 결국은 기업들이 동의할 거라고 확신했다.

지금도 철도와 대중교통이 만나는 환승역 전국 1위는 수원역이다. 이 좋은 자리를 기업들이 그냥 놓칠 리가 없다. 한참 동안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기업 3곳의 분담금이 모였다. 610억 원을 받자마자 나는 이 공사를 시에서 하지 않고 기업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시에서 공사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각종 심사와 설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안에 시공 능력을 가진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과선교 확장 공사는 시의 예산 부담없이 빠른 시간 안에 개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다. 롯데몰이 개점하기 전에 과선교 공사를 마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서 토론회를 열고 롯데몰 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투표 결과 89%가 롯데몰의 개점 시기를 과선교 개통 이후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대형쇼핑몰이 지역



과선교 개통

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기 마련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덕분에 우리 시는 수원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환승센터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2017년 5월에 수원역 환승센터도 완공됐다. 총 750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와 도비를 받고 KCC에서 100억 원, 롯데에서 56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 이렇게 환승센터를 대규모로 지은 것은 우리가 최초였다. 또, 이곳은 최초로 경부선 철도에 본역이 붙어 있다.

환승센터를 만드니 접근하기가 수월해져서 백화점에도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에 환승센터를 개통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90%는 편해지고 10%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몇 해가 지나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수원역 주변의 교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되어서 이동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새로운 교통망을 연결하다

우리 시의 철도교통계획으로는 분당선, 수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왔고 신수원선 연결과 GTX-C 노선, 수원발 KTX가 확정됐다. 이 중에 수원에서 분당의 오리역 구간은 2013년 11월 30일 개통됐고, 수원역에서 인천까지 수인선은 2020년 6월 12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신분당선 분당 정자역에서 광교까지는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이어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으로 가는 신수원선은 현재 설계 중이다. 또, 현재 KTX가 상·하행 하루 8번 정

차하고 있고, 이 노선은 경부선 일반철도를 타고 가다 대전에서 고속철도 선로를 타는데 수서에서 오는 SRT 고속철도 선로를 평택 지제역에서 올라타게 하는 공사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운행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수원역에서 KTX가 상·하행 1일 34회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오게 된다. 이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싸우기도 했다. 교통은 지역의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 말이다.

가장 행운인 사업은 GTX-C 노선이었다. 여러 도시에서 GTX 노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작전을 벌였지만 우리는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했다. GTX 노선을 추진할 때 행운은 나와 최기주 교수(아주대학교,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와 인연이 큰 도움이 됐다. 최 교수와는 오랜 인연이 있었는데 이분이 좋은 힌트를 줬다. 수원시에 GTX 노선이 없는데 GTX 노선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용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당초 계획은 양주에서 금정까지 오게 되어 있었는데 최 교수가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니, 많은 이용자가 있는 수원역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쉽게 통과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 GTX-C 노선이 생겼다. 다른 지역은 GTX 노선이 하나 생기면 온 동네에 난리가 나곤 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얻은 결과라서 나는 자랑도 하지 않았다. 최 교수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셨다. 정말 고마운 분이다. 지하철이 새로 건설되면 노선 이름을 짓는 게 고민인 경우도 있었다.

새로 생긴 지하철 노선의 공식 이름이 인덕원동탄선으로 결정됐는데, 이 이름이 아주 맘에 들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는 신수원선이라고 주장했다. 대개 지하철 이름은 시점과 종점으로 이름 붙이곤 한다. 그럼 신분당선이 아니라 ‘호매실 - 용인’, ‘동탄 - 호매실’,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또, 분당선은 뭐냐? 시점과 종점의 이름을 붙인 게 전혀 아니죠.

어쨌든 수인선과 분당선을 지하철로 연결한 것은 아주 좋은 성과이고, 우리 수원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새롭게 들어선 것도 매우 좋은 성과였다. 하지만 지하철과 트램을 연결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쉽다. 트램까지 건설되면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움이 남았다.

시장이 한 도시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 도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도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는 늘 배짱을 가지고 있었다. 내 문제라면 쉽게 포기하고 양보도 하겠지만 우리 도시의 문제라면 배짱을 가지고 버텨야 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시의 10년과 100년, 이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으로서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 시와 시민들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내가 모든 일을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시를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장이 오시면 좋겠다.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트램, 그리고 아쉬움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트램은 우리 수원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복잡한 수원역에서부터 남문(팔달문)까지 수없이 내달리는 버스와 자동차로 거리가 혼탁한데, 이런 교통체증으로 거리가 복잡하지 않고 환경수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면 대중교통인 트램으로 바뀌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2006년 수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때부터 나는 우리 시에 트램을 제일 먼저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2010년에 당선되어 취임하고 주요 사업으로 트램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연구하고 법제화하는 전문가인 곽재우 박사는 의왕의 철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정자공원 테니스장에 갔다가 테니스 동호인들을 만났는데 트램을 연구한다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다. 그 후로 유럽의 트램 연구를 하기 위해 곽 박사와 시청 직원들이 같이 출장 가서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일본의 여러 도시에도 트램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 트램을 도입해서 도시를 되살린 곳은 도야마시이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서 트램과 대중교통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도야마 시장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친한파라서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트램은 전철 같은 광역교통망과 연계할 뿐 아니라 친환경 도시의 내부 교통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버스와 자동차를 도심에서 점점 밀려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 생태교통 페스티벌' 때 실제 트램을 행궁광장에 가져다 놓고 시민들이 직접 타보고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등 '트램 1호 최초의 도시'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런데, 트램 관련 법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 트램이 도로를 달리려면 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쓰게 되는데, 자동차보다 먼저 교통신호를 받는 등 우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 트램 기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트램이 들어가기 위한 제반 사업 방식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등 매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트램 3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는 우리 시의 김영진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다. 2018년 내가 3선 수원시장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시가 앞장서서 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김영진 의원과 함께 트램에 관련된 기본 3가지 법인 일명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법 제정을 추진할 정도로 의욕이 강했다. 그 후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시범사업에 공모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했다.

땅 위를 달리는 전철이라고 하는 트램은 지하에 건설하는 비용보다 매우 저렴하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트램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기 때



생태교통 트램

문에 그러잖아도 복잡한 도심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좋아하질 않는다. 트램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이 들어서면 이런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추진한다는 명분을 얻는 것이 필요했다. 또, 재정투자 심사도 통과해야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외에는 통과할 방법이 없었다.

환경수도와 가장 어울리는 트램

트램의 노선은 수원역부터 팔달문과 장안문 거쳐서 장안구청 뒤까지로 정하고, 장안구청 근처 북부순환로 옆 구간을 트램 정거장 예정지로 설계했다. 그 사이에 수인선과 분당선, 경부선이 모두 만나는 수원역에서 다시 신수원선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호매실까지 노선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 트램 1호선이 생기면 2호선은 순환선을 만들 수 있고, 3호선은 영통과 동탄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고, 광고 가는 노선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트램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미래 교통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했다.

이렇게 트램 3법이 만들어진 이후 2018년 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의 첫 번째 트램에 대한 시범 차원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다. 우리 시도 국가 시범사업에 당연히 지원했다. 지자체 8곳이 도전했는데 그중 3곳이 1차로 통과됐다. 2차 관문은 철도연구원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수원과 성남, 부산까지 3곳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가급적 시장이 발표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직접 참여했다. 성남시장도 직접 발표하고 부산시는 담당국장이 참여하면서 경쟁은 치열했다. 그런데 발표

후 국가 시범사업의 결과는 너무 황당했다. 부산시(영도)를 먼저 선정해 놓고 성남시는 우선순위 협상자가 되었고, 우리 시는 차선 협상자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장 먼저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지역은 아무런 저항없는 곳이 아니라 대표적인 혼잡한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현재 교통이 가장 혼잡하고 저항도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의미 있다. 우리 시의 구도심은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이라서 이곳에 트램이 들어서려면 온갖 민원이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트램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어디에든 트램이 들어서지 못할 곳이 없다. 이처럼 트램은 한국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트램 1호 첫 번째 시범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로 결정되었어야 했다. 교통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정책은 엉뚱하게 결정되고 말았다. 나는 정말 아쉬웠다.

환경수도를 구상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트램이었다. 남문부터 북문까지 교통이 가장 복잡한 구간을 차츰차츰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는 불편하게 만들고 이후에는 트램만 통과하게 만든 뒤 걷기 편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구상을 했다. 트램을 설치하면 이런 시도가 촉발되는 것이다. 이처럼 트램은 새로운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신도시들도 트램을 놓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지 도시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다. 복잡한 구도심에 트램이 들어서는 것이 큰 상징성이 있다.

시민들이 준비해온 것을 보여 주는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도 시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순 없을까?

염태영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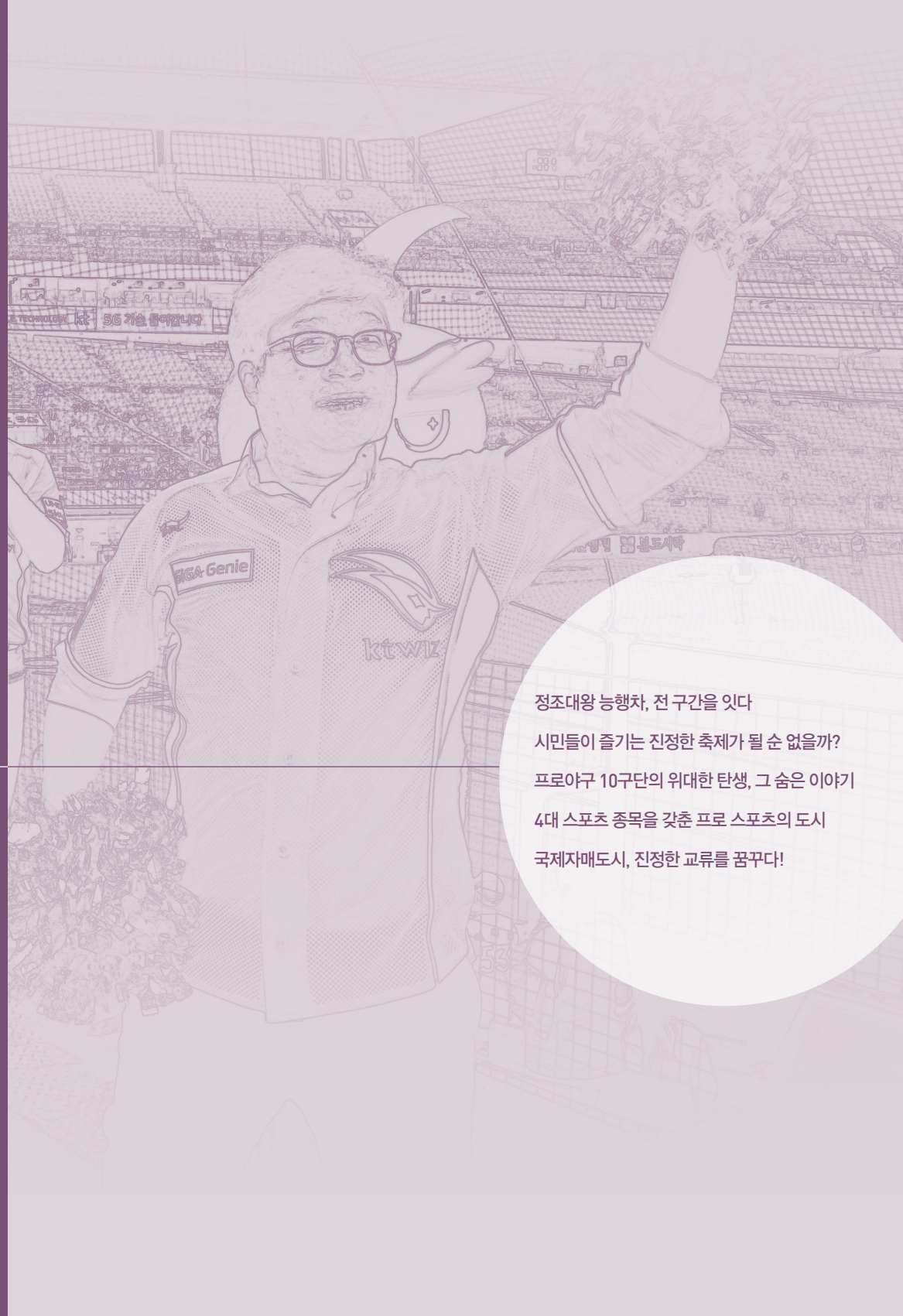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VI

문화 · 스포츠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잇다

시민들이 즐기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순 없을까?

프로야구 10구단의 위대한 탄생, 그 숨은 이야기

4대 스포츠 종목을 갖춘 프로 스포츠의 도시

국제자매도시, 진정한 교류를 꿈꾸다!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잇다

해마다 여는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유명한 가을 축제이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본래 한양 창덕궁부터 용릉까지 길게 이어지는 대향연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만 여니 아쉬움이 컸다. 역사와 의미가 있는 행사라서 전 구간을 꼭 복원하고 싶었고, 220년 전 창덕궁에서 시작한 출궁 의식부터 용릉을 제향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전 구간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이듬해 무렵에 내가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복원을 제안했다. 당신이 서울시장이고 내가 수원시장인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이 소중한 때에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복원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박 시장이 “어우, 좋습

니다. 꼭 그래야 될 것입니다.”라며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그 후 한동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다. “시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행사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했다. 반대하는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유로 서울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굉장히 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도로 구간을 옛날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걸어가는 행사인데, 행렬의 앞뒤 구간 전체를 차량 통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경비도 제법 들고, 특히 조선시대처럼 사람과 말이 한강 도강을 하려면 안전 문제도 있고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세 번째는 수원시 행사인데 서울시가 예산을 써 가면서 도와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또 일 년이 지나 2014년 민선 6기 재선된 후였다. “시장님, 그래도 꼭 우리가 시장으로 있을 때 해야 될 게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논의합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울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 아마도 서울시의 담당부서에서 반대가 심하니 나름대로 명분과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공동 연구를 의뢰한 것 같았다.

2015년 서울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2015년 8월 공동 개최하는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공동 제안을 했다. 그리고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 되는 2016년에 공동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능행차 한강을 건너다

드디어 2016년 수원시와 서울시의 공동 개최로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 행사를 열게 됐다. 창덕궁-시흥행궁 터-화성행궁-연무대 이르는 구간(47.6km)을 최초로 공동 재현했다.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오시는 길은 두 가지 갈래 길이 있는데, 과천 남태령을 넘는 길과 시흥길이 있다. 1795년 을묘년 행차를 기준으로 보면 시흥행궁에서 하룻밤 묵었던 것 같다.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흥행궁은 서울시 금천구에 속한다.

당시 차성수 금천구청장도 정조대왕 능행차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시흥에서 유(留)했던 기록도 있으니 정조대왕 능행차 퍼레이드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 시절의 복장과 물품 같은 것을 수원시에서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몇 차례 빌려준 적이 있다. 그리고 수원시와 서울시에서 공동 개최를 하니 능행차 구간에 속하는 구청과 시청도 참여하자고 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종로구와 동작구, 금천구 등이 함께했고 경기도는 안양시, 의왕시가 참여했다.

2016년 첫해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고, 군부대에서 도강 도강을 도와주었다. 공병부대가 배들을 띄워서 연결하고 그 위를 철판으로 덮고 마대 같은 것을 깔아서 부교인 배다리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한강의 북쪽에서 노량진까지 한 번에 건넌을 텐데, 우리는 한강 전체 도강이 아니라 노들섬까지만 건너기로 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의 운영 시스템으로는 한강을 며칠 동안 막아 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

도 하다. 사람들뿐 아니라 말들도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 위에 뜬 다리가 출렁거리면 말들이 놀라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역사적인 도강 행사를 위해 서울시장, 수원시장, 구청장 두 분(동작구청, 용산구청)까지 이렇게 4명이 함께 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연출했다. 노들섬에서는 몇 가지 퍼포먼스를 열고 한성판윤이 정조대왕에게 고하는 행사도 열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강을 건너온 그 위치에서 다시 출발해서 시흥행궁까지 걸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 날 안양과 의왕을 거쳐서 수원까지 걸어왔다.

2016년 첫 재현행사에는 많은 방송사 기자들이 와서 열띤 취재를 했다. 을묘년 능행차는 3천 명이 넘는 대규모 퍼레이드였는데,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행렬이 10km가량 길게 이어진다. 실제 10km 행렬이 지나간다면 몇 시간 동안 시내 교통은 난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1천 명 안팎으로 진행했고 말도 168필가량으로 줄였다. 문제는 서울시 구간에서는 능행차를 정말 재미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수원은 해마다 가을에 수원화성문화제를 열면서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정조대왕 능행차가 들어오면 정말 흥이 나는 행사가 되는데, 서울시 구간에서는 행사 홍보가 제대로 되질 않아 구경하는 사람도 적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행사에 교통체증이 심해지니 짜증만 나는 일이 되었다. 아스팔트 길을 걸으니 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속 변을 보곤 했다. 그 사이에서 조선시대 복장과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걷는다는 건 즐겁지 않고 고욕이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서울에서는 이런 행사의 경험이 없어서 말들이 힘들고 불편해 하면서 보폭이 빨라졌다. 말이 먼저 들어오고 사람들은 나중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원래는 능행차 행렬에 말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걸어야 하는데, 말들

이 앞서서 먼저 들어오고 지친 병사들이 걸어오면서 재미없어 했다. 그렇게 능행차 행렬이 서울을 지나 안양 만안교와 의왕시청을 거쳐서 수원에 이르러서는 지지대고개를 지나 화성행궁과 팔달문을 거쳐서 연무대에서 마무리를 했다.

우리나라 유일한 거리 퍼레이드 축제

그다음 해인 2017년 행사에서는 이렇게 진행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화성시까지 MOU를 체결하고 창덕궁에서 연무대, 용릉까지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59.2km)을 재현했다. 이후에 2018년에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참여하여 11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성대한 행사를 열었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의 행사는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행사 구간을 대폭 축소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

2019년에는 서울시가 이 행사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시의 문제 제기는 을묘년 재현 행사가 계속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예기치 못한 일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봤을 때 이 행사의 시기를 본래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을묘원행이 1795년 윤 2월에 열렸으니 양력으로는 4월 초 무렵이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고종도 맞지 않은 행사인데 왜 우리가 10월 수원화성문화제 시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냐는 것이었다.

이 의견을 내가 거부하기가 참 어려웠다. 같이 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연이어 행사를 축소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거 좋다. 그럼 우리는 수원화성문

화제 때 우리 구간만 약식으로 하되, 전 구간을 제대로 복원하는 건 그 행사 하나만을 별도로 추진합시다.”라고 했다. 2020년까지는 10월에 그대로 진행하고 2021년부터는 4월에 열기로 논의했다. 만약 4월에 정조대왕 능행차를 열게 되면 관련된 부대 행사를 함께 열어야 할 것이다. 꽃 피는 봄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정조 임금 시절에 격쟁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관련 행사를 열어서 제대로만 재현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논의가 진전되다가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서울시와 더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행사지만 정조대왕 시절에는 왕권에 대한 권위를 보여 줘서 제압하는 효과와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효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왕이 가지고 있는 효성까지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큰 행사였다. 더구나 이 8일간의 행차에 관한 모든 기록을 세세히 남겼으니 정조대왕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행사는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리 퍼레이드 축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행사를 넘어 국가가 추진하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

통닭 천 마리를 튀긴 역사적인 날

많은 시민들이 행사를 함께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사람들을 동별로 동원하고 각 구간별로 나눠서 능행차를 기다리게 했다. 서너 시간 전부터 거리의 정해진 구간에 나와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떡과 김밥도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능행차 행렬이 등장하면 손뼉 치고 사진도 찍었



정조대왕 능행차(장안문 수원유수 정조맞이)

다. 이때는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절대 동원하지 말자고 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즐기게 하기 위해 주변 기관들에게 행사 홍보를 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 행사를 즐긴다면 우리 역사에 대한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 퍼레이드를 같이 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정조대왕 능행차에 이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퍼레이드를 함께 했다. 이 퍼레이드가 흥이 날 수 있게 맨 앞에서 농악대 수백 명이 신명나는 연주를 하고, 뒤를 이어서 시민들이 기발하고 재밌는 분장을 하고 즐거운 이벤트를 열면서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이벤트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 이전보다 서너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즐겼다.

2017년에도 역시 정조대왕 능행차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시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시민들로 구성된 50여 개 팀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고, 라틴 음악의 리듬을 즐기면서 걷기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걷고, 각 동별 모임에서 나온 사람들까지 모두 어우러져서 즐겼다. 시민 퍼레이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상을 주기도 했다. 이런 행렬을 보려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행궁광장으로 나왔다. 이때는 동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인파가 엄청났다.

이때 가장 유명한 일화는 매향통닭집이었다. 매향통닭은 40~50년 된 가게로 우리 수원에서 제일 오래된 곳인데, 사장님의 평생소원은 하루에 닭 1천 마리를 튀기는 것이었다고 했다. 평상시에는 하루 300마리를 팔면 정말 많은 것이었는데,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가 있었던 그날은 닭을 천 마리 넘게 튀겼다고 한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사적 고증도 중요하지만 옛날 그대로 재현한다고 즐거운 축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요즘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아와 오도리(阿波おどり)와 아오모리시의 네부타 마츠리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축제는 모두 카니발이다. 유명한 축제는 거의 거리 퍼레이드이고, 이 퍼레이드에는 비트가 있는 타악기 중심의 리듬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 리듬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감각이 마취되어 흥에 빠져들게 한다. 그런 음악이 계속 퍼레이드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율동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 동작을 쉽게 따라 하면서 같이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배워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조대왕 능행차에 그런 요소를 중간중간 넣는 것이다.

옛날에도 정조대왕 능행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흥을 돋우면서 걸었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남사당패가 뒤따르면서 흥을 돋웠을 것이고, 옛장수는 따라가면서 엿을 팔았을 게다. 행렬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농담도 던지면서 다양한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다채롭게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이 마치 열차려를 받듯이 차렷 자세로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가 없다. 왕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역사적 고증을 되살린 정조대왕 능행차가 이제 우리 수원의 행사를 넘어서 더욱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거리 축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즐기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순 없을까?

유럽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서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들의 축제는 들쭉날쭉 정말 흥겨웠다. 시민들이 축제를 직접 준비해서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다들 너무 신나게 즐겼다. 특히 일본의 도시축제는 모든 상가가 축제를 여는 데 필요한 돈을 자발적으로 모았다. 각자 돈을 낸 금액만큼 거리마다 표시를 해 주거나 어떤 곳에는 기록이 따로 적혀 있기도 했다. 또, 축제에 썼던 소품 같은 것을 커뮤니티센터에 전시하기도 한다. 이 센터에 시민들이 모여 일 년 내내 축제를 기획하기도 한다.

일본 도시들이 축제를 열 때는 그 지역의 상공인들, 즉 가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축제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기획한다. 또,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기도 하고, 상인연합회가 주최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행사에 필요한 돈을 직접 내는 것이다. 일본의 축제 비용에서 지자체 예산은 30~40%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적은 곳은 10%를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 즐기고, 관광객들은 행사 티켓을 사서 보는 것이다.

일본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혼슈 아오모리에서 여는 네부타 마쓰리(青森ねぶた祭)는 일본 최대의 등(燈) 축제이다. 일본 전설에 나오는 신들을 표현한 대형 가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등불을 켜고 퍼레이드를 벌였다. 축제의 규모가 엄청나고 볼 거리도 정말 많았다. 등 축제가 열리면 길가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북해도 근처에서 나는 조개를 구워 먹거나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퍼레이드 행렬을 기다린다. 행사 티켓을 사서 거리에 나와 하루종일 즐기기도 한다.

엄청나게 큰 신들이 등장하는 퍼레이드는 볼거리가 엄청나다. 밤이 되면 큰 북을



일본지역 거리축제 벤치마킹

울리면서 일본 전통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퍼레이드에는 상가들과 조합, 그 지역사회에 있는 회사들, 유치원연합회, 이런 곳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즐겼다.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 년 동안 이 축제를 준비했고 흥이 나서 정말 신나게 즐긴다. 어린아이들도 작은 등을 하나씩 들고 줄줄 쫓아다니며 즐기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이 퍼레이드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운데, 아주 질서 있게 진행했다. 아오모리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즐기는 축제는 준비하는 마음과 즐기는 마음이 정말 달랐다.

축제일까, 족쇄일까?

우리 수원의 축제는 어떨까? 우리 시의 축제는 행사를 치른다는 느낌을 받은 한 다. 행사 담당자들은 여러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지만, 정작 시민들은 축제 현장에 동원되어서 하루 종일 나가 앉아 있기만 했다. 우리 문화는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축제의 자발성과 신명나는 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 또, 우리는 행사 예산의 100%를 시에서 내고 기획사가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을 시민들이 나와서 지켜보는 소극적인 형태이다. 그렇게 몇 회를 진행하고 나니 해마다 똑같은 퍼레이드라서 시민들은 흥미가 없어지곤 한다.

예전에 나도 수원화성문화제 퍼레이드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1996년 심재덕 시장 시절에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시민축제를

여는 행사 취지는 매우 훌륭했지만 시민들이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소감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축제가 아니라 족쇄 같았다. 재미도 별로 없고 억지로 하는 행사나 사업 같은 느낌이었다.

당시 정조대왕 능행차를 시연하는데 시민들이 조선시대 복장을 사 입고 나와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기획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가 되질 않으니 시민단체에 참여를 권유하거나 설득했다. YMCA, YWCA, 흥사단, 새마을단체 등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마다 부탁 겸 할당량이 정해지고, 단체 대표들이 행사 담당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수원천 복개 반대 운동을 이끈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이었는데, 이때 심 시장을 고발했다가 철회했던 사건으로 인연이 있었다. 우리 단체도 한 구간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청의 행사 담당자가 그림 한 장씩을 나눠 줬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긴 퍼레이드를 한 구간씩 잘라서 단체별로 맡을 수 있게 그려 놓은 도면이었다.

첫해에 우리는 회원 수가 적어서 가장 적은 구간을 달라고 했더니 14명을 배정해 줬다. 당시 조선시대 한복 한 벌이 20만 원이라서 14명이면 280만 원이었다. 우리 단체에서 이 돈을 내면 능행차에 필요한 장군과 군사, 포졸 등 조선시대 복장과 소품을 배정받는 것이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 지지대고개에 모여서 행사에 필요한 옷을 받아 차려입고, 수염도 그려 주는 등 간단한 분장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말 타는 장군과 마부 역할을 맡고, 또 어떤 이는 칼과 곤장 등을 들고 행진했다.

나는 장군 역할을 맡아서 말을 탔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을 타본 적이나 있었겠나? 말 위에 올라타면 실제 마부가 이끌어 주는 대로 말이 움직였다. 처음 말 위에 올라타니 굉장히 높았고, 말이 얌전하게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행진

을 하니 깜짝깜짝 놀라서 뛰기도 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말을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여태까지 정조대왕 능행차를 하면서 사고가 없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다. 어쨌든 다들 이렇게 조선시대 옷을 입고 분장을 하니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족쇄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같이 모여서 행사의 의미도 잘 모른 채 한복을 입고 피약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터벅터벅 걸었다.

정조대왕 능행차에 처음 참가했던 그해에는 호기심이 생겨서 다들 함께했지만 하루를 겪어 보니 다시는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의 수가 모자라니 시민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참여시키기도 했다. 심재덕 시장은 깊은 뜻이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조대왕 시절의 모습을 재연하려고 한 것인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참여자들과 할당량을 받은 시민단체에게는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 같았다. 이 퍼레이드가 끝나면 바로 옷을 겹쳐서 세탁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시민들에게 입혔다.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다.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열었고 또다시 시민단체에게 참여 요청이 왔지만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들 안 한다고 절레절레 손사래를 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모두들 약속이나 다른 일정이 있다며 회피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시민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시민들은 행진하면서 흥겨울 게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힘만 들었으니까. 첫째 14명 배정받은 인원이 다음 해엔 줄어서 10명이 되고, 그다음 해엔 7명이 되고..., 그런데도 수원시에서는 계속 요청하니 7명이라도 나가야 하는데 다들 안 하겠다고 하니 결국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연 무예공연 '야조' (2019.10.06)

동원식 축제의 한계

정조대왕 능행차는 관광의 유래이자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관광(觀光)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빛을 본다’는 뜻인데, 조선시대의 빛은 바로 임금을 뜻한다. 그 시절에는 재미난 볼거리가 없었고 축제도 없었다. 마을축제라고 하면 오월 단오제 같은 게 있었고 광대들이 벌이는 놀이판 정도가 있었다. 가을걷이를 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을에서 같이 먹고 즐기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임금이 한양에서부터 긴 행렬을 이루어 행차를 하고, 형형색색 옷을 입은 군사와 궁녀 등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능행차는 어마어마한 볼거리였다. 그 길이가 무려 10km나 되었다고 한다. 임금과 높은 벼슬을 가진 정승들은 말을 타고, 중전을 비롯한 궁궐의 여인들이 탄 가마도 이어지니 대단한 볼거리였다. 임금의 능행차 소식이 전해지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고 한다. 왕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으니 말이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여러 날을 걸어서 보러 왔던 것이 그 시절 최대의 관광이자 축제였다.

그러나 요즘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축제가 되기는 어렵다. 지금은 텔레비전과 영화 등 볼거리가 너무나 많고, 눈길을 끌기 위한 더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수원시장 취임 후 수원화성문화제를 살펴보니 우리 도시의 역사와 상징성을 가진 축제의 주제는 매우 좋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든 구조였다.

전문기획사가 군인들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서 한복을 입혀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즐거울 리가 없었다. 다들 찌푸린 표정으로

터벅터벅 걷기만 했다. 이 퍼레이드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관객들이 있어야 하니 각 구간을 나눠서 동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배치시켰다. 시민들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거리로 나와서 다양하게 준비해 온 먹을거리를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민축제의 모습은 아니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의 조건은 뭘까?

처음 시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지역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유명한 축제를 보러 갔다.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퍼레이드를 바꿔 보려고 노력했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 수원문화재단을 만들고 시민들이 추진하는 시민축제 기구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준비 회의를 하기도 했다. 그 다음 해에는 처음부터 시민추진 기구를 시민들이 구성하고, 시민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기도 했다. 축제를 위해 시민들이 낸 돈을 다 명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 문화예술 단체들이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전통행사를 재연하는 것이니 본래의 모습 그대로 진행하고, 시민 퍼레이드는 그 뒤를 이어서 별도의 퍼레이드로 진행했더니 그게 훨씬 더 재밌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심사위원들도 있어서 퍼레이드를 잘한 팀에게는 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자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주제와 수준도 확 달라졌다.

이 퍼레이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팀은 남미의 레게머리를 하고 춤추고 타악기를 두드리는 팀이었다. 젊은이들 수십 명이 남미의 레게머리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북과 독특한 타악기를 치면서 행진을 했다. 신나는 리듬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살렸는데, 특히 북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런 요소를 더욱 잘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시민참여 축제가 수원화성문화제 행사의 절정인 야조로 연결되어 진행하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사흘 밤낮으로 우리 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지만 그중에서 내가 공들이고 크게 기대한 것은 역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는 퍼레이드였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몇 해를 신나게 준비하고 잘 진행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아쉽게도 2년째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전통을 재연하는 의미가 커서 학술적, 문화적 유형을 보존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지금처럼 능행차 뒤에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적 요소를 넣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 같다. 그러나 퍼레이드 축제가 박제화되면 재미없는 행사가 되고 만다. 시민들이 준비해 온 것을 보여 주는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즐기는 행사가 돼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 돼야 하고, 행사에 필요한 돈도 시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일본의 축제처럼 10만 원을 낸 사람은 10만 원 크기의 구역을 정해 주고, 50만 원, 100만 원을 낸 사람 역시 그만큼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맘껏 즐기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행사처럼 돈을 낸 만큼 거리에 등을 달아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리에는 연등축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이 낸 돈의 표시가 나면 서로 다 같이 기

분 좋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즐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행사를 열고, 우리 시는 행사에 필요한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고 힘껏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민축제가 성장하면 좋겠다.

해외의 다양한 축제

지역축제가 발달하려면 시민사회가 발달해야 하고, 시민사회가 공동체 단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쌓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적다. 대부분의 도시 발전은 행정이 기획해서 집행하고 시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형태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공동체를 형성해 온 경험이 드물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봐야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인 것이다. 시골에는 옛날부터 공동체가 있었지만 축제까지는 아니고 명절과 단오, 정월대보름 같은 마을 행사가 있었다. 더구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도시 단위의 문화나 축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경험을 해 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 축제 경험을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서초구에서는 서리풀 축제를 연다. 이 축제를 열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법원사거리까지 길을 통제하고 며칠 동안 밤마다 엄청난 음악제를 즐긴다.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와서 팝 축제를 즐기는데, 이것은 거리를 막고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 이 축제에도 시민들이 참가할 뿐이지 주최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축제는 독특하다. 유럽은 국가 단위가 있어도 오랫동안 국경과 국가 단위가 너무 자주 바뀌면서 도시 단위로 어우러지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도시 단

위의 자발적인 축제가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그 가운데를 흐르는 템스강 운하에서 조정대회를 여는데, 양쪽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축포를 쏘고 열띤 응원을 하면서 그 자체가 축제가 되고 있다. 또, 유럽의 가장 큰 축제는 매주 열리는 축구 경기이다. 축구 경기가 열리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면서 도시가 들썩거린다.

영국에는 도시의 특색을 잘 살려서 만든 대표적인 축제인 에든버러 축제도 있다. 에든버러는 북동쪽 외곽의 작은 도시이지만 다양한 마임과 연극, 행위미술 같은 예술로 축제를 연다. 이곳에 가면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고 관객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도 하고 평도 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게 양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함께 어울린다. 이것이 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가 되었다.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쌓이면서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에든버러 축제를 가보려고 하고, 참가해 본 이에게는 아주 이색적인 경험이 되곤 했다.

독일에는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10월제)라는 맥주 축제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맥주 가게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광장에는 임시로 만든 가판을 몇백 미터에 걸쳐 길게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맥주가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맥주를 마셨다. 소시지를 구워 먹기도 하고 옆에서는 버스킹(Street Performance, 거리 공연)도 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놀다가 귀가를 하고 그다음 날 또 나와서 좌판을 짹 깔고 논다. 거리에서 다양한 맥주 맛을 보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맘껏 즐긴다.

우리 수원에서도 남문에서 북문까지 길을 막고 좌판을 만들어 놓고 맥주 축제를 열면 대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런 게 새로운 축제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젠 축제의 형태도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프로야구 10구단의 위대한 탄생, 그 숨은 이야기

우리 시의 프로 스포츠에 대해 얘기하자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의 전체적인 수준과 선수들의 저변을 보면 8개 구단이 경쟁하는 것도 경기력이 저하되기 십상이어서 팀의 수가 과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좀 있다. 2011년 창원의 엔씨소프트 구단주가 야구를 좋아해서 창원을 기반으로 9구단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9구단을 창단하고 나니 대한야구협회는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늘 경기가 열려서 붐업(boom up)해야 하는데 구단의 수가 홀수라서 한 팀이 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9구단 창단 이후 10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구단주들은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10구단을 만들 수 있는 팀은 누구일까 따져 보면, 우선 전국의 도 상황으로 보면 전북에는 프로구단이 있었다 없어졌으니 후보 지역이 되고, 그다음 강원도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홍보

에는 프로구단이 없지만 거리 문제와 인구수를 봤을 때 과연 팬들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결국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서울은 프로구단이 두 팀이나 있고 인천도 있지만 경기도 팀이 없었다. 경기도에 프로구단을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냐, 경기 남부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인구가 집중된 경기 남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경기 남부라면 수원,

용인, 성남 등의 거점 도시가 후보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도시는 우리 수원이고, 10구단이 만들어진다면 수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야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프로야구 유치에 관심이 있었다. 경기도의 도시 중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수원에 야구장이 있고, 예전에 이곳을 현대자동차팀이 사용했으니 가장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 도시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다. 어느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원이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는 축구의 도시라서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 드렸다.

그 후 우리 시의 기관장 모임이나 스포츠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는 프로야구팀까지는 필요 없고 프로축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지금 프로야구가 대세인데 그걸 왜 안 하나고 다들 필적 뛰었다.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에 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해당 부서에 프로야구 10구단을 수원시가 유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 보자고 했다. 결과는 90% 이상이 유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본 후 김문수 도지사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렸다. 우리 시가 프로야구 유치전을 벌일 때 도지사께서 같이 힘써 주시고, 야구장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하셨다. 이 약속은 나중에 잘 지켜 주셨다. 2차례 야구장 증축공사에 총 470억 원을 집행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30%, 경기도 17%, 나머지 53%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충당했다.

뜨거웠던 유치전

드디어 2011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을 시작했다. 우리와 함께 손잡을 구단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을 설계한 세 분이 있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표 국회의원, 남경필 국회의원이었다. 기업은 CJ와 신세계, 농협, KT가 우리의 1차 대상이었다. 당시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는 CJ와 함께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CJ는 엔터테인먼트 중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CJ와 신세계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은 건 농협과 KT였다. 농협은 관심은 가졌지만 과연 이걸 해야 맞는가 하는 고민을 했고, KT는 예전에 유치전을 준비한 적이 있지만 이사들과 노조에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KT 이석채 회장께서 유치를 해 보겠다고 적극 나섰다. 예전에 실패한 선례가 있어서 외부에 미리 알려지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해서 2013년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까지 비밀에 부쳤다. 2011년 말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KT와 손잡는 것으로 협의가 됐지만 끝까지 비밀로 했더니, 수원이 누구와 파트너를 할 것인가로 온갖 설왕설래가 많았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요구를 끝까지 지켜 줬고, 그때 김진표 의원과 이석채 회장께서 잘 아는 사이라 역할을 잘해 주셨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유치전을 함께 뛰어 주셨다.

유치전이 한창일 때 가장 히트친 작품이 있었다. 2012년 말에 한국시리즈가 서울의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는데 이 경기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때 허구연 해설위원이 수원시민들이 야구장에 와서 수원시 10구단 유치 응원을 해 보라는 힌트를 주셨다.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시민들과 함께 한국시리즈 응원 겸 10구단 유치 홍보를 하러 옷을 맞춰 입고 현수막과 응원도구 등을 챙겨서 잠실야구장으로 갔다.

그날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경기장에 오셨다. 4회 말에 카메라가 두 분을 비추는 키스타임이 있었다. 별안간 대통령 부부께 카메라를 비추니 키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자 허구연 해설위원은 대통령 부부가 오셔서 수원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키스로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다.

프로야구 유치를 위해 우리와 경쟁하는 팀은 전라북도였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명운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었다. 전북은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을 배출한 곳이다. 김봉연, 김성환, 조계현 선수까지 유명한 선수들이 즐비하고, 군산 상고뿐만 아니라 전주고 등 야구를 잘하는 학교도 여러 곳이 있다. 전북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건설회사인 부영과 손을 잡았다. 부영은 프로야구 발전기금을 내놓고 연일 다양한 홍보작전을 벌이니 부영의 주가도 올라갔다. 유치전도 전북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반전의 묘미와 히트카드

KT는 위상이 다른 공기업인데 우리가 이대로 질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반전의 묘미를 만들기로 했다. 내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마지막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경기도지사를 만나 몇 가지 요청을 했다.

“첫 번째,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은 돐구장이니, 지금 수원시가 만든 이 야구장에서 만석이 계속되면 4만 석이 넘는 규모의 돐구장으로 증축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시가 각 도시

마다 갖고 있는 독립리그 실업야구팀 연고를 만들어서 야구 저변을 활성화시키시다.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상대팀은 전북도지사가 오시니 우리도 도지사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날 발표는 내가 다 할 테니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만 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나와 KT 이석채 회장이 10구단 유치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상대방은 전북도지사와 부영 회장께서 하기로 했다.

더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다. KT 회장과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히든카드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야구발전기금이었다. 창원 엔씨소프트가 9구단으로 결정될 때는 야구발전기금 20억 원을 적어 냈다. 당시에는 창원시 혼자서 추진하는 상황이라 경쟁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는 수원과 전북의 경쟁이 세게 붙어서 유치 기업이 야구발전기금을 얼마나 적어 내느냐가 마지막 관건이었다. 마지막에 내가 이석채 회장에게 이렇게 말씀 드렸다.

“회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적은 금액을 적어서 지게 되면 회장님은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 회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렵게 결정했다. 내게도 미리 언질을 주지 않고 발표 현장에서 알려 주셨다. 금액은 무려 200억 원이었다. 당시 우리 쪽에서는 전북과 손잡은 부영이 300억 원가량을 쓸 거라고 예상했다. 이 상황에서 KT가 이기려면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 차이가 있으니 적어도 200억 원을 제시하면 경쟁력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여러 조건도 많이 개선해 놓았으니 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두 기업에서 적

어낸 야구발전기금을 공개하자 결과는 의외였다. 부영은 80억 원을 적어 냈다. 그러자 전북의 야구팬들은 부영이 과연 10구단을 유치할 생각이 있었느냐고 항의했다.

2013년 1월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날, 우리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에서 이겼다. 투표결과는 더블스코어까지 나올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10번째 프로야구 구단인 kt위즈(wiz)가 탄생하게 되었다.

약속을 지킨 유일한 자치단체장

우리가 승리한 것은 또 다른 원인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프로 스포츠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실제 산업으로서 경쟁은 되지 않고 있다. 프로 스포츠는 지역의 산업이 되어야 하지만 야구팬들에게서 나오는 수익구조는 그리 크지 않다. 수도권인 경기 남부 지역에는 900만 명의 잠재적 팬들이 있지만 전주시의 인구는 65만 명가량이다. 전북의 인구를 전부 다 합해도 181만 명가량이라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가 없다. 야구팬들의 수 역시 10배 이상 차이가 날 테니 말이다.

선수들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선수들의 집이 대개 수도권에 있고 출퇴근을 해야 한다. 홈경기가 전주나 광주에서 열리면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은 이게 참 비극이다. 한국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프로팀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게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의 또 다른 비화이기도 하다.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이 프로야구 40년사를 정리한 《그라운드에는 패배를 모른다》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을 나에게도 보내 주셨다. 책 내용을 보면 프로야구



수원ktwiz 응원

10구단을 유치할 때 허구연 해설위원이 도와줬던 애기와 그때 당시 수원시가 했던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야구 10구단이 태동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야기가 잘 담겨 있다. 그중에 나에 대한 얘기도 있다. 허구연 해설위원이 만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자신이 한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시장, 언행이 100% 일치한 유일한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열심히 도와준 허구연 해설위원의 평가라서 더욱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다. 2021년 11월 18일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kt위즈가 정규 시즌 우승에 이어서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까지 했다. 한국 프로야구의 막내 구단이 큰일을 해냈다. 최단기간에 최강팀으로 올라선 kt위즈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정말 기적 같고 마법 같은 순간이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의향서를 내던 때가 생각나고, 2013년 10구단인 kt위즈 창단과 2015년 첫 정규 시즌에 진출했을 때의 가슴 벅찼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 후 3년 동안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구단과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며 일어서고 야구팬들이 한결같이 응원했던 장면들도 생각났다. 프로야구의 승리뿐 아니라 축구와 배구, 농구 등 우리 시 연고의 모든 프로 스포츠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스포츠의 그랜드 슬램(grand slam)을 달성하고, 우리 수원이 스포츠의 메카도시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4대 스포츠 종목을 갖춘 프로 스포츠의 도시

우리 시의 스포츠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며 건강관리도 하는 생활 스포츠가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누려야 될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 된 프로스포츠가 있는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프로선수들의 경기를 즐기고 응원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이자 아이덴티티(identity, 동일함)를 만들어 간다. 미국은 대표적인 것이 프로야구이고, 유럽은 프로축구이다. 프로경기가 열리면 그 도시 전체가 들썩인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니 스타 선수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한국은 아직 프로 스포츠가 어떤 분야든지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외국은 프로구단이 수익이 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인데, 우리는 기업에서 지

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도시의 예산으로 스포츠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만들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느냐는 순전히 그 지역의 역량이고 기본 인프라의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생활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생활 스포츠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지역 내에 국민스포츠클럽, 국민생활체육센터 등 시설을 열심히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영통 청명산 앞 영통체육문화센터와 광고 웰빙타운에 있는 광고웰빙국민체육센터 같은 국민체육시설이다. 가까운 곳에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여러 곳에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배드민턴과 탁구는 어느 정도 운동 시설을 마련했고 실내 테니스도 할 수 있게 했다.

가장 아쉬운 것은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면적이 넓지 않아서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우리 시가 탑동에 사놓은 땅을 임시 야구장으로 쓸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그전에는 SK의 땅을 빌려서 야구장과 축구장을 임시로 조성해서 쓴 적도 있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데 7~8할이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었다. 요즘엔 미세먼지 위협 때문에 학교와 아이들도 실내체육관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해서 강당과 체육관을 꾸준히 지었고, 교육청과 매칭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학교 체육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 스포츠 인프라를 꾸준히 만들고 그것을 계속 지원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축구장과 야구

장이 많이 없어져서 더욱 많이 확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한계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학교 단위수가 적은 다른 지자체는 금세 지원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다. 또, 신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면적이 큰 학교는 실내체육관을 기본으로 짓도록 계획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는 꾸준히 실내체육관 수를 확충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의 학교 강당과 체육관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수원에 '수원 스포츠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서수원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위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넣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스포츠 종합타운을 만들려고 했다. 만약에 수원, 오산, 화성이 통합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조금만 나가면 넓은 땅이 너무나 많으니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화성시와 협력하여 화성 지역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만들고,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 같은 시설도 지어서 수원과 화성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다. 우리시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 스포츠 시설의 한계가 내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학교 스포츠 활성화의 어려움

학교 스포츠는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하는 좋은 산실이 되어 왔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선뜻 내켜 하질 않았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가 잘 안 되고 있다. 예전에는 체력장 시험이 있었는데, 예비고사 시절에는 340점 만점에 320점은 시험을 보고 20점은 체력장 점수였다. 체력장은 8종목에 각각 25점으로 총 200점이 만점인데, 180점을 넘으면 1급이 되어서 20점 만점을 받고, 그다음 점수는 19점이 되는 방식이었다. 8종목 중에 오래달리기(1,000m)가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면 만점이었다. 어느 해인가 체력장 시험의 오래달리기를 무리하게 하다가 학생들 몇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체력장 시험을 아예 없앴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시험 보기 위해서 별안간 운동을 하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시험과목에서 운동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런 사고는 일상으로 늘 일어나는 위험요소가 아니라 학교 체육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기초체력을 다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분히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갑자기 시험만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요즘 아이들은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줄넘기나 축구, 권투까지도 학원에서 배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학원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자치교육이 되면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수영 과정이 학교교육 안에 들어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존수영은 오산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우리 아이들

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도 바로 시행했다. 오산은 단일 공동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수영장 한두 개로도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학교와 학생 수는 많은데 수영장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 시에서 지원했다.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중에 정기적으로 수영장에서 교육(8~10회)을 받는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도 지원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가 만든 유치 작전

역사적으로 우리 수원은 정조대왕 시절부터 상무(尙武, 무예를 중히 여기고 숭상함)의 도시로 일컬을 만큼 무과의 급내가 많았고 이런 무예 도시의 위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또, 프로 스포츠에서 스타성 있는 선수들뿐 아니라 올림픽 메달 획득처럼 국위를 선양했던 스포츠 선수들도 꾸준히 배출했다. 축구의 박지성 선수는 수원 출신이고, 차범근 감독은 화성 출신이지만 당시에는 수원이 배경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감독도



하셨다. 야구 유한준 선수, 농구 하승진 선수, 배구 김연경 선수, 테니스 정현 선수, 탁구 신유빈 선수, 체조 여서정 선수 등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내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프로축구가 대세였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전통의 명가였다. 투자도 많이 하고 우승도 많이 하고, K리그뿐만 아니라 FA컵, 아시안컵 등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남녀 배구팀도 있는데 여자 배구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남자 배구의 한국전력 빅스톰이 있다. 남자 배구는 오래전부터 잘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반면에 여자 배구는 간간히 우승을 계속 했다. 2013년 kt위즈 야구단을 창단해서 2015년부터 경기를 시작했고 2021년에는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까지 놀라운 성과를 냈다. 2020년에는 프로농구인 KT 소닉붐을 유치해서 2021년 10월 10일 홈 개막경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 수원은 서울시 다음으로 4대 스포츠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프로 스포츠의 도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은 어떻게 프로 스포츠의 도시가 되었을까? kt위즈가 우리 시에 온 것처럼 정치적 약속이라도 나에게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서 천금같이 지키려고 했다. kt위즈를 유치할 때 ‘수원 kt위즈 파크’라는 야구장 이름의 권한을 준 것, 매점 운영권과 관리권을 준 것, 이런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1차 보완공사를 통해서 2만 255석 야구장을 만들고, 2차 증설 공사까지 해서 2만 2천 35석 규모로 야구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켰는데 다른 시에서는 보통 유치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했다. 우리는 두 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 우리 시가 kt위즈를 유치하고 시민들이 야구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킨 것이다. 다른 지자체가 그렇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가 서수원에 칠보체육관을 짓고 농구단을 유치하는데

프로구단이 서로 오려고 했다. KT 소닉붐 농구팀이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기게 된 것은 우리 시가 약속을 지켜온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오게 되었다. 2001년에 삼성 썬더스 농구팀이 수원에 있다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고 나서 20년 동안 비어 있었다. 농구팀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서수원 칠보체육관을 지을 때 내가 농구 전용 경기장으로 짓도록 추진했고, 이번에 농구팀을 유치한 것이다.

농구팀을 유치할 때도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기면 야구장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걸 해 주겠다고 했다. 경기장 이름(네이밍)의 권한을 주고, 매점 등의 관리권도 주는 대신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칠보체육관에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시간이 있다.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큰 보수공사는 우리 시의 시설 개선 충당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했고, 세세한 보수는 농구팀의 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스포츠 덕분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에 경기장 이름의 권한을 구단 쪽에 주었더니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라고 이름 지었다.



팬들의 성지가 된 경기장을 꿈꾸며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자 꼭 해야 될 것은 월드컵 구장이었다. 언제까지 월드컵 구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kt위즈파크처럼 삼성 구단이 운동장을 직접 관리하게 하면 좋겠다. 스포츠 메카이자 축구의 도시답게 구단에서 이곳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 누 구장이 있는데, 그곳은 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지이다. 축구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유니폼을 사고 다양하게 벌어지는 축구 이벤트에도 참여한다. 경기가 없는 평일에는 비어 있어도 관광객이나 축구팬들이 경기장을 둘러보는 게 관광상품으로 있다고 한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홈구장이니 삼성 구단이 직접 맡아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수원월드컵경기장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경기도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광역 행정은 그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처음에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다른 구장과 달리 사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내가 부이사장이라서 취임 후 그 문제를 알고 이것은 다른 곳의 조건과 맞춰야 한다고 해서 상당 부분 낮춰줬다. 구단에게 돈을 더 받는 것보다 구단의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게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내가 가진 소신은 프로 스포츠는 산업이라서 우리 시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잘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구단이 직접 하고 성적을 잘 내는 것으로 팬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관여하지 않고 전문영역에 맡

기는 것이 낫다. 지금 수원FC는 좋은 성적으로 꽃 피우고 있다.

논란이 컸던 여자 축구단

수원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 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여자 축구단을 우리 시가 운영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다. 전임 시장께서 수원축구협회장 출신이라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 남자 축구는 수원에서 계속 길러지는 선수들이 있다. 수원고, 수원공고, 매탄고, 삼일공고 같은 축구의 명가가 있었다. 전국 제패를 했던 전통의 명가가 수원공고라면 현재 축구 명가는 매탄고이다. 삼일공고는 한 대회를 세 번이나 싹쓸이 우승한 적도 있다. 이처럼 수원은 축구 잘하는 도시로 유명했고, 고등학교에서 실업팀 선수들을 많이 길러냈다.

그런데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veto,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았다. 여자팀은 우리 지역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중·고와 대학팀까지 하나도 없었다. 전임 시장께서 남녀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여자 축구단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창단하고 일 년에 2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내가 취임하니 수원시의회에서는 여자 축구단을 왜 없애지 않느냐고 계속 지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더 이상 여자 축구단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 경기도 내의 자치단체가 체육계에 쓰는 예산이 엄청나게 컸다.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해마다 우승하자 수원을 따라잡아야 한다며 성남과 용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

다. 시청 소속 팀을 30여 개씩 창단하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세 도시의 경쟁이 뜨거웠다.

내가 처음 취임한 2010년에 우리 시의 예산을 살펴보니 2,60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재정문제가 생기자 시청 소속 팀들을 하나둘 없애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다. 여자 축구단 선수들은 직업 선수들인데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여자 축구단을 포함한 실업팀 선수들 전체를 보면서 몇 년 계획을 잡고 일정한 성적을 못 내거나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는 종목은 점차 줄여 가기로 했다.

혁명은 가능해도 개혁은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딱 자르는 혁명이 아니라 천천히 개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미리 선수들에게 예고하고 매년 2~3개씩 줄여갔다. 선수들을 하나하나 떠나 보내는 게 참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성적도 내지 못하고 선수들도 줄고 경쟁력도 없는 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수원시청 소속 30개 팀을 점차 줄여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절반인 15개로 줄였다.

2011년 무렵에도 여자 축구단은 계속 없애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구단을 없애면 선수들이 갈 데가 없으니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공고를 했다. 그해 말 시즌이 끝나면 여자 선수들은 팀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해야 하니 각자 살길을 찾으라는 예고를 한 것이다. 그러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팬들이 들고일어났다. 축구팬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난리가 났다. 수원시장이 경기장에 유니폼을 입고 와서 응원까지 하더니 별안간 야구를 유치하면서 축구를 도태시킨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여자 축구 선수들의 살길을 찾게 해 주려고 했던 결정이었다. 결국은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렵지 않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의 편지였다. 여자 축구단의 유지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라 이사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팬들은 수원시장을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이런 논란이 생기자 여자 축구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의회는 한마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여자 축구단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지만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니 시의회는 그 논쟁에서 쏙 빠져 버렸다. 그 전에는 내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항전 같은 경기에 가면 축구팬들이 좋아했는데, 이후에는 축구를 어지럽히고 여자 축구단을 없애는 염 시장은 물러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나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대해서는 유감이 전혀 없다. 수원을 축구의 명가로 만들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다. 여자 축구단 문제로 논란이 한창일 때도 나와 구단은 끊임없이 소통했다. 지금도 나는 블루윙즈 구단에 경기장 관리권과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면 좋겠다.

그 일 이후로 여자 축구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단은 6개가량으로 매우 적다. 그나마 시청에서 팀을 유지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지난번에 여자 축구단이 우승해서 내가 행가래를 받기도 했다. 나는 실업 쪽에서 여자 축구단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 여자 축구단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적극 돕고 싶은데 결국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치고 프로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스포츠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제자매도시, 진정한 교류를 꿈꾸다!

우리는 꽤 여러 곳의 세계도시와 국제자매도시를 맺고 있다. 제일 먼저 자매도시가 된 곳은 일본 아사히카와인데, 벌써 30년이나 됐다. 중국의 지난시(제남)도 있고, 아시아권에서 인도네시아 반둥과 캄보디아 시엠립, 베트남의 하이즈영도 있다. 또, 우리와 우호도시를 맺은 곳도 있는데, 일본의 후쿠이와 중국의 항저우, 홍콩 옆에 있는 주하이(珠海)가 있다.

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이런 정도의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주의 타운즈빌과 일본의 도시를 제외하면 선진국이라 할 만한 도시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선진국과 자매도시가 되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배울 것이 있는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싶었다.

일본의 사이타마는 우경화된 도시이지만 국제자매도시를 맺었는데, 5개 도시가 통합되어서 140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통합시가 되고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사례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축구의 도시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제자매도시가 되었다. 한 도시에 프로축구 1부 리그의 2개 팀이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본래는 프로축구팀이 하나씩 있었는데, 두 도시가 통합하면서 2개 팀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와 축구의 도시라는 인연을 가지고 교류를 시작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내가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하여 국제자매도시를 만들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의 환경수도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 시를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앞선 사례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푸르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다. 푸르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호도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한다.



국제자매도시 거리조형물

이처럼 부지런히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수를 늘려갔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것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의 도시와 국제자매도시를 맺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도시 중에는 산호세와 교류를 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요구조건이 많아서 실망만 많이 하고 결국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1년 10월에서야 피닉스와 자매도시를 맺게 되었다.

피닉스는 생각지 않았다가 추진된 경우인데, 미국의 영사관과 대사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성사되었다. 피닉스는 산호세처럼 여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흔쾌히 국제자매도시가 되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피닉스는 인구 1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라서 우리와 실질적인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과 교류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다.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국제자매도시

내가 인상 깊게 본 도시는 선진국의 도시도 있지만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페즈이다. 옛날에 모로코의 수도였고, 메디나라고 하는 오래되고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어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메디나는 아랍권의 독특한 전통시장으로, 커다란 토기에 푸른색과 붉은색 등 염료가 담겨 있는 가죽 염색장이 유명하다. 미로처럼 나 있는 골목이 수백 km나 얹혀 있는데, 아마 그 골목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오래된 도시의 전통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참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도시이다. 페즈는 저에게 오랫동안 영감이 되는 도시로 남아 있다.

그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곳은 터키 알로바이다. 알로바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 터키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의료인을 파견했던 인연이 있다. 내가 한국전 참전용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무척 감동스러워 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시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환경수도로 유명한 브라질库里치바도 국제자매도시로 만들었다. 그런데库里치바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자매도시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내가库里치바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나지도 못했다. 예전에库里치바를 생태도시로 만든 유명한 레르네르 시장은 한국에 왔을 때 두어 번 만날 정도로 인연이 있는데, 현직 시장은 내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심했다.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맺으면 두 도시의 시장들이 서로 방문하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오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도시의 시민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 서로 오가는 교류가 많아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그래도 우리 시와 성격이 비슷하고 의미 있는 곳이라면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와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이다. 클루지나포카는 역사가 있는 오래된 도시이자 루마니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는 노동자의 도시로, 《어머니》라는 책을 쓴 막심 고리키 작가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막심 고리키시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막심 고리키 작가의 탄생 행사가 열릴 때 내가 가서 자료를 주고 인터뷰도 했다. 그때 《어머니》란 작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도시의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와 그분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호주의 타운즈빌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 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중요한 인연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타운즈빌의 학생들이 수원으로 유학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타운즈빌에 연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자매 도시에도 우리 시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분들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데, 이때 그분들이 머물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마련한 숙소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해외도시를 지원하다

우리 시는 해외 지원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화장실협회를 통해서 공중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몽골에는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수원시민의 숲을 가꾸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세계화장실협회는 2007년 11월에 심재덕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이 협회는 심 의원의 목숨을 담보로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 된 후 3년째 되던 해였다. 2008년 5월이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데, 2007년 봄에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해에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 사업을 다시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셨다. 암 투병을 숨긴 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화장실협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셨다.

2007년 11월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땐 너무 늦었었다. 2008년에 결국 국회의원 출마를 다시 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암치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에 돌아가셨다. 그 이후 2009년 8월 조영이 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활동해 주셨다.

내가 2010년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세계화장실협회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협회에서 제안하셨다. 그래서 2014년부터 내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 되어 심재덕 회장 시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추진했던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되살려서 지원했다. 세계화장실협회는 유엔(UN)의 기구로 등록되어 있고,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일 년에 3~4곳씩 공중화장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터키 알로바와 캄보디아 씨엠립, 몽골에도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다.

몽골 ‘수원시민의 숲’은 당시 국제NGO단체인 푸른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제진수 과장(현재 시민소통기획관)이 제안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나는 수원시가 직접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고 그 단체가 많은 시민들과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휴먼몽골사업단’이 만들어지고 몽골에 가서 꾸준히 나무를 심었는데 참 열심히 잘해 줬다. 휴먼몽골사업단은 시민들과 함께 묘목을 심고 물을 주고, 몽골 유목민들이 숲을 가꿀 수 있게 지원하는 조림사업을 십 년 동안 묵묵히 진행했다. 그리고 십 년이 지나서 수원시민의 숲은 몽골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행사까지 했다.

십 년 만에 마무리한 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은 에르덴숨 지역에 탄광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몽골 사람이 개발 욕심을 내고 있어서 더 이상 조림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결국 조림지는 유지 관리만 하고 더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10년 동안이나 숲을 열심히 가꿨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수원시민의 숲에 나무를 열심히 심고 유지 관리를 꾸준히 해서 몽골 초원에 무성하게 우거진 숲을 상상했다. 그리고, 한 두 세대가 흐른 뒤에 우리 후손들이 찾아가서 수원시민들이 가꾼 숲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꿈을 꿔다. 이런 의미를 남기고 싶었는데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았다.

그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추진한 곳은 우리 수원이다. 캄보디아 수원마을도 있고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도 꾸준히 진행했다. 덕분에 감동적인 일도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국제자매도시에 편지를 썼더니 고맙게도 마스크를 보내 줬다. 중국의 세 도시에서는 모두 보내 주었고 캄보디아에서도 보내 주는 등 5개 도시에서 기꺼이 마스크를 보내 주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마스크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보답했다.

이처럼 국제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관계를 맺어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맺은 도시들과 서로 든든한 힘이 되고 좋은 영감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몽골 수원시민의 숲 식목행사(2012.05.22.)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

민선 5~7기 수원시정에 대한 단상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들어가며

12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12년 세월은 강산이 서너 번은 바뀔 만한 시간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수원의 시장은 단 한 명 염태영이었다. 2010년 처음 당선된 이래 2014년에는 59.43%를 득표하여 60%대에 육박했고 2018년 선거에서는 무려 66.99%를 차지해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다. 지역 구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든 수도권에서 이 정도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14년 득표율은 당시 높은 지명도를 자랑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록한 55.1%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세 번의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염태영 시장의 12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3번 당선된 것은 물론이고 선거를 치를수록 득표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갔음은 다수 시민들이 염태영 시정을 지지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염태영이 3선을 한 이 시간은 지방자치제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던 시기였을까. 공교롭게도 2010년 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 비슷한 경력과 성향을 가진 시장들이 다수 당선되었다. 고양시의 최성 시장과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부천의 김만수 시장 그리고 인천의 송영길 시장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염태영 시장을 포함해 다섯 명의 시장들은 모두 소위 말하는 586세대에 해당된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는 세대적 특성을 가진 이들은 무엇보다 1980년대 격렬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대학생활동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80년대 치열한 저항운동을 통해 1987년 6월항쟁이 가능했고 그 현실적 결과가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재의 공화정이다. 정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던 헌법이 1987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87년 체제의 지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87년 체제는 역사적 결과물이다. 좁게는 1980년 광주항쟁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운동의 힘과 군사독재 정권 사이의 힘의 균형이 만들어낸 질서이자 넓게 보면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화, 정치적 격변, 사회문화적 변동의 집적으로 만들어진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개념으로 압축되곤 한다. 산업화가 1960년대 이래 군부세력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핵심 아젠다였다면 민주화는 보수야당을 비롯해 학생, 재야, 비판적 지식인들의 슬로건이었다. 군부와 보수진영도 복잡했지만 민주화운동 진영은 더욱 복잡다기한 구성을 보여 주었다. 마

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급진 이념에 경도된 세력부터 보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흐름까지 스펙트럼이 넓고도 복잡하였다. 그럼에도 모두가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가치가 민주주의였다. 서로 다른 해석을 했음에도 모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87년 체제는 곧 이러한 여러 세력들의 복잡다기한 세력균형의 구체적 표현이었고 싫든 좋든 오늘날 한국 정치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집중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완성일 수는 없었다. 권력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의 원론적 의미가 치자와 피치자의 동등성, 동질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치란 곧 인민의 자기통치를 의미하고 민주주의가 도달해야 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광주항쟁과 비민주적 군사정권의 장기독재는 저항운동의 급진화로 연결되었고 1980년대는 비제도적 급진 변혁운동이 크게 활성화된다. 87년 체제는 이러한 급진변혁운동이 제도적 실천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80년대에 성장한 운동가들이 대거 시민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 여성, 소수자 등 여러 가치와 지향으로 나뉘는 시민사회운동은 지방자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운동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활동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 영역과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행정과 운동이 결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하여 2010년 당선된 586세대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전 민선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과 김용서는 모두 보

수 성향이었던 반면 염태영은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성장한 진보 성향이였다. 사회운동 출신으로 염태영 시장은 거버넌스 창출에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썼다.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의 시장으로 관료주의의 두터운 보호막에 대한 유혹이 만만치 않았을 것임에도 염태영은 시민자치의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압박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거대한 행정제도의 구축이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국면이 겹쳐지면서 거버넌스가 현대 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맥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로 끝난다면 그것은 행정의 자치이지 시민의 자치일 수는 없다. 자치의 경험은 일천하고 오랫동안 중앙집중화된 삶을 살아온 한국의 실정에서 주민들의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치의 문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분명하다. 이 문제는 민선 5~7기 전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수원의 복지와 환경문제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복지 무풍지대와 다름없었다. 이른바 산업화 과정은 모든 가용 자원을 경제개발에 쏟아붓는 방식이었고 각자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살벌한 정글을 만들어냈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무상급식을 계기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위기를 만들어내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에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두의 과제이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오랫동안 환경운동에 매진해 온 시민운동가 출신이

기에 이 문제는 12년 시정을 살펴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2. 민선 5~7기의 역사성

2010년 치러진 민선 5기 지방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의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586세대'라 불리는 인물들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염태영 시장도 여기에 속한다. 586세대는 단지 특정 연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하나의 집합적 세대로 묶어 주는 결정적 조건은 광주항쟁 이후 1980년대의 격렬한 사회운동의 경험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점에 접하게 된 5·18의 참상은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뛰어들거나 최소한 우호적 입장을 가지게 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비민주성은 당시 대학가에서 공분의 대상이었다. 막 성년의 삶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사회의식에 눈뜨고 격렬한 운동을 경험하게 된 이 세대는 오랫동안 사회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다.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이 동원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거의 모든 금기를 넘어서 버린 1980년대 운동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시민사회론이 유행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1980년대의 급진성은 찾기 힘들어졌다. 흔히 87년 체제로 불리는 질서가 구축된 것이며 염태영 시장의 삶도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연루된다.

민선 5~7기의 수원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으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으로 시정을 주도한 염태영 시장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

년을 전후로 한 시기 한국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정을 이끈 염태영 시장의 간략한 이력을 들여다보자. 염태영은 1960년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당시 화성군 일왕면 울전리)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매산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를 졸업하는 등 줄곧 수원에서 학창생활을 해 수원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철도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누이와 함께 두 동생을 돌보며 학교를 다녔다. 1980년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하던 해에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 야학 교사, 기독교 청년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대학 졸업 후 두 동생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지기 위해 미원그룹(現 대상그룹)에 입사하였다가 삼성건설(現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이직하였다. 1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경영 노하우를 익혔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인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여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수원천 복개 2단계 공사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자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았다. 국내 최초로 수원천이 복개되는 것을 막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단위 환경단체의 정책자문 및 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는 한편 민·관 협력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가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사무국장,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2000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설립하여 사무처장 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제4기 민선 수원시장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

나,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김용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상이 수원시장이 되기 전까지 염태영 시장의 간략한 이력이다. 그의 삶에 큰 전기가 된 것은 대학 입학이었다.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야학 교사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의식에 눈을 뜬다. 기독교 청년운동을 통해서 종교와 사회운동의 결합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시기 학생운동 경험은 평생 가는 정치적, 사회적 자산이 된다.

학생운동을 했음에도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 10여 년 근무하였다. 이 경험 역시 염태영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을 꼽자면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일 것이다. 애초 정치권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대기업들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의 실력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기업 생활을 통해 염태영은 한국의 실력집단이 어디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생생한 체험을 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염태영을 시장으로 만든 결정적 조건은 시민운동이다. 1994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염태영은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 시기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가 결성되어 사회운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였다.

시민운동은 1980년대 운동과의 단절과 연속의 관계에 있었지만 전자의 측면이 더 컸다. 경실련을 만든 서경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민청학련 시기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서경석은 1980년대 말 미국 유학을 통해 기존 운동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다. 그가 만든 경실련은 초창기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조직이었고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중산층 등의 상당한 지지기반을 확

보하였다. 시민운동은 1980년대 운동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 방식으로 체제 내 개혁을 도모한다. 이러한 위상을 갖고 있었기에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세력 간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질 수 있다. 염태영도 시민운동을 출발해 자연스럽게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당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의 시민운동은 지역 행정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쉽다. 19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시민운동세력들이 지역 행정과 정치에 좀 더 쉽게 결합할 수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 정치기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기존의 자치의회나 시장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대부분 관변 조직이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았다.

염태영 시장의 시정은 인근 지역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검토를 통해 그 함의가 뚜렷해질 수 있다. 예컨대 인근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양시도 시민운동 출신의 최성이 시장에 당선되었다. 같은 586세대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삶이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명 시장은 매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다. 소년공으로 중고등학교 6년 대신 공장에서 6년을 보냈다. 대학 입학 이후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사회문제에도 눈을 떴으나 학생운동 대신 사법고시에 집중해 졸업과 함께 1986년 최종 합격한다. 합격 후 판검사를 마다하고 경기도 이천에 사무소를 차리고 노동자 권익옹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성남시로 옮겨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다.

최성 시장은 대학 졸업 후 1989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상임연구원으로

시작해 아태평화재단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제15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16대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고양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세 사람의 행보는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모두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눈을 뜨고 이것이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세 사람 모두 1980년대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는 새로운 사회의식과 실천의지로 무장한 다수의 시민운동가를 배출하였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기존의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을 통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1980년대로부터 기원한 민주노동당·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정당운동 대신 해방 공간의 한국민주당(한민당)으로부터 연원하는 보수 정당을 선택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세 사람 모두 1980년대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급진적 변혁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것이 노동운동 대신 시민운동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은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 주류 운동권의 행보와도 구분된다.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등 전대협 의장단 출신들은 운동의 명망성에 기반해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학생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염태영도 운동의 명망성을 얻을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시민운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자산을 구축한 경우였다. 통상적으로 4·19 이래 운동권 출신의 정치입문과는 구분되는 이러한 경로는 1990년대 변화된 정세 속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정치에 본격 뛰어든 지역이 서울 인근의 급속하게 성장 중인 위성

도시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염태영과 이재명은 확실한 연고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최성의 경우는 별다른 연고가 없던 지역이었다. 어쨌든 수원과 성남 그리고 고양시는 서울의 인구 성장이 정체하면서 그 인구 압력을 대신 소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러 개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중산층의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수도권의 초거대 도시화와 축적체제의 포스트포디즘적 변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사회문화적 전환기였다. 1990년대는 1980년대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향상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극도로 내향적이고 사사화(私事化)된 주거형태로서 중산층의 경제적 성취의 물질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한 아파트는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보수화에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했다.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라는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²⁾

염태영 스스로도 자신을 비롯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정치에 진출해 본격적인 자치단체들의 정책경연이 펼쳐진 게 2010년이라고 본다. 그 직접적 영향은 김상곤 교육감이 촉발시킨 무상급식의 사회문제화였다. 이를 계기로 2010년도에 혁신적 의식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장들이 대거 출현하는데, 이들은 이전 자치단체장들하고 10년 이상 젊은 세대이자 기득권세력이 아닌 운동가 출신이었다고 규정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으로 든 것은 돈 없이도

1) 김백영, 「1990년대 수도권 형성과 한국 도시성의 전환」, 『사회와역사』 127집, 2020, 241쪽.

2) 김백영, 「1990년대 수도권 형성과 한국 도시성의 전환」, 『사회와역사』 127집, 2020, 247쪽.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여였다.³⁾

중산층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신도시의 젊은 세대들의 정치성향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또 정세에 따라 유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위에서 확인되듯이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 짙다고 보인다. 한국 자본주의가 일정한 성숙 단계에 들어간 1990년대 전후하여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성장하고 감수성을 익힌 세대들로 과거 권위주의시대 농촌적 배경을 가진 세대들과는 매우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들이 대거 유권자로 등장한 선거로 새로운 변화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3. 민선 5~7기의 거버넌스와 주민자치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오랫동안 축적된 권위주의적 정치 및 행정 양상이 쉽사리 바뀔 수는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는 풍토,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나 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이를 실행하는 풍조 등이 한국의 일반적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색이 헌법상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의 유권자로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존재였다. 권위주의시대 행정의 핵심 목표는 효율성이었다. 특히 산업행정을 주축으로 한 개발연대의 행정은

3)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염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국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동원체제를 방불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의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된 염태영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2014년 재선 이후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치와 구별되는 지역자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지방행정의 모든 문제의 블랙홀은 중앙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중앙의 무소불위 권한을 성숙된 사회에 분리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스스로 정리한 12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자.

염태영은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면서 수원시가 청령도 꼴찌, 부채 1위의 2등 도시였다고 회고하였다. 무엇보다 큰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계획이 없고 철학도 없는 도시라는 판단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먼저 도시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음을 술회하였다. 큰 그림의 첫 번째는 줄여서 산수화로 부른 수원, 오산, 화성의 통합이었다. 이어 컨벤션센터 건립, 군 공항 이전을 끝냈다. 산수화는 실패했지만 뒤의 두 가지는 성공했다는 것이 스스로의 평가였다.

민선 6기의 과제는 자존심 회복을 위한 밑그림에 채색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민선 5기에 시작한 생태교통 추진을 통해 환경수도를 만들고자 했으며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복원을 통해 문화 정체성 회복에 노력했음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 광역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원문화재단, 국제교류센터, 수원도시공사 설립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되었다. 민선 7기의 성과는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선 5기

4) 「수원시장 염태영」, 『서울행정학회 포럼』 2014년 3호, 27~28쪽.

부터 추진해 왔던 수원특례시를 완성한 것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방자치법 통과,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재정분권 확충, 복지대타협 등을 이루어냈음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⁵⁾

이상의 성과는 휴먼시티와 시민참여로 압축 가능하다. 이는 12년간의 시정을 총괄하면서 간행한 책의 도입 제목이 ‘휴먼·시민참여’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약진으로 특징되는데 엽태영 시장도 수원의 시민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 및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이전까지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이란 대부분 관변단체 활동을 의미하거나 단순 봉사 또는 친목단체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시민운동은 환경, 여성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부정부패, 불공정 등의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운동의 동력이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했다. 비정부기구(NGO)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운동은 정치권력이나 국가 행정기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적 실천을 도모했던 것이다.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한 시민운동을 전개한 경험은 단지 개인 차원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즉 일회적 운동과 실천으로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연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번 구축된 거버넌스는 경로의존성에 따라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된다. 거버넌스는 논란이 많은 용어이며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이 통치의 주체이자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서 시민 자체가 주권을 갖는 존재권력이고 협력과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주목된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주민 자치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풀뿌리 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점이다.⁶⁾

“1945년 해방이 되고 정부가 꾸려지는 1948년부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까지 40년 가까이 그렇게 해 왔어요. 일종의 거버먼트(government)라고 하는 행정의 영역은 통치라는 개념이었죠. 시민은 관리와 계도의 대상이었어요. 이때는 시민이라는 의식이 없었고 동네 주민이라고 했고, 국민이라는 개념만 있었죠. 1980~1990년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도 이때 등장했어요. 그 이전에는 민중이나, 부르주아나 그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의식의 주체인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⁷⁾

엽태영은 행정과 통치를 넘어 거버넌스 구축에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인용문에 보이듯이 그는 1980~1990년대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 개념을 도출해

5) 「여는 글」, 「엽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참조.

6) 오수길 외,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2017, 15~18쪽.

7)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엽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내고 이에 근거한 운동과 거버넌스를 구상하였다. 1990년대 초 시민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엽태영은 시민단체가 주요 사회이슈에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경유착 같은 경제 비리나 노동자들의 권리와 소외된 사람들, 환경오염 문제 등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자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0년대 초반에 마을 만들기 운동이 새로운 갈래로 등장했음이 강조된다. 엽태영 시장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음을 밝혔다.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지방의제21을 만들어 행정조직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가 기획하고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모델이 곧 초기 거버넌스였다고 설명한다.⁸⁾

여기서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1990년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할 때 일본을 참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근대 이후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주요한 참조점이었다.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적 근대화를 달성했고 2차대전을 통해 궤멸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신속한 전후 복구와 부흥을 통해 손꼽히는 경제강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에 돌입한 한국에게도 가장 손쉬운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도 한국 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준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로는 한국 민주화운동에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도 했으며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보이듯이 시민사회운동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도 했다. 일본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부터 중앙집중화된 대규모 운동

으로부터 지역의 소규모 시민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전국적 이슈를 내걸고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대중운동이 지역의 현안이나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새롭게 활성화된 시민사회운동에 상당한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슷하지만 똑같은 방식은 않은 방식으로 사회운동도 한일 간의 상호 참조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것은 한일 간 사회적 변화의 시간대가 겹치면서 갈라졌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일본은 전후 부흥을 통해 고도성장을 거듭했고 1970년대 무렵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된다. 버블 경제가 터지기 전까지 일본 자본주의는 미국을 제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중산층에 기반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국도 시차를 두고 일본 자본주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고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 발전의 배경을 이룬다고 하겠다.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에 기반해 엽태영은 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에 착수한다. 그 대표적인 틀이 좋은시정위원회였다.

“민선 5기 엽태영 경기 수원시장의 소통 행정에 꽃을 피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4시 인계동 이비스 호텔에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으로, 앞으로 본위원회(20명), 일자리 전문위원회(12명), 도시재생전문위원회(12명), 환경수도전문위원회(12명), 시민참여전문위원회(12명), 여성복지전문위원회(12명) 등 본위원회와 5개 전문위

8) 『엽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원회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⁹⁾

좋은시정위원회는 소통 행정의 꽃을 피울 틀로 여겨졌고 각계 전문가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었다. 시민운동가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까지 망라한 위원회의 면면은 수원을 대표하는 인적 구성을 보여 준다.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등으로 나누어진 전문위원회는 민선 5기 시정 방향을 압축한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전문위원회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위원회는 2021년 말까지 정책 78건을 발굴하거나 개발했고 그 중에 53건이 시정에 도입됐을 정도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좋은시정위원회는 지식인과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었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는 없었다. 즉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이 컸다고 보이며 시민들의 일상적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였다. 그래서 민선 5기 중요한 시민참여사업이자 핵심사업 중 하나로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었다. ‘마을르네상스’로 명명된 이 사업은 2011년 3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 발족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사업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시민운동이 행정력과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써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이기도 할 것이다. 공모형식으로 진행된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 54개를 11년간 총 1,273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모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87억여 원으로, 수원시청은 지역 곳곳에서 마을환경 개선,

9) 『뉴스시스』 2011년 2월 16일.

이웃 주민과의 교류, 참여의식 변화, 주민리더 발굴 및 육성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 본인도 최근 들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인정할 정도로 사업의 지속성과 활력이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도시의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농촌 마을과 비교해 도시 마을은 응집력과 결속력이 쉽게 형성되기 힘든 구조적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마을은 노동과 일상이 공간적,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관혼상제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일상생활이 거의 모두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이루어진다. 농촌 마을은 일종의 소우주처럼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온전하게 감싸고 있었던 셈이다. 옆집의 손가락과 젓가락 개수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엮인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 마을은 노동과 거주가 분리되어 있고 일상의 삶도 개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도시의 일반적 삶이다. 직장인의 경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삶의 대부분이 마을 밖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코로나 방역을 통해 확인되듯이 철저한 통제와 사회적 격리 속에서 각종 통신망을 통한 거래로 기본적 일상을 영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개별화는 그 정도가 고도화되었다.

노동과 일상에서 큰 연계가 없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취미, 종교 생활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마을 단위의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조차 찾기 힘들다. 이러한 생활조건은 화폐경제의 고도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농촌 마을의 경우 1970년대까지도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필요한 노동력과 서비스 등은 마을 주민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었고 경조사조차 현물로 오고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돈만 있다고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인심을 잃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을생활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도시는 개인의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화폐를 통해 구득 가능한 조건을 제공한다. 화폐만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거주공간이 어디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거의 무의미해진다. 황금만능주의는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거부하기 힘든 생존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존전략이 일반화된 조건에서 도시 마을의 주민들이 개인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게다가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임차방법인 전세제도는 주기적 이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짧으면 2년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조건에서 거주공간의 공동체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시골 마을의 경우 공간적 통합과 함께 집성촌의 형태로 혈연적 관계도 긴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촌 마을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정권 차원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추진했음에도 마을을 구할 수는 없었다. 심지어 수많은 농민들이 동원되어 운동에 헌신한 경우도 많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의 흔적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수원의 마을 르네상스사업이 한때 활발했다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조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화폐 취득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추구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거주공간의 환경 개선, 퇴근 이후 또는 주말을 이용한 마을 가꾸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거주공간에 특별한 애

착을 가질 수 있는 장기 거주자, 부동산 소유자,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한 사업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도시 거주공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역사가 보여 주듯 행정력과 주민들의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수원을 포함한 한국 사회가 어떠한 도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시장의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민선 5기가 끝나갈 무렵인 2014년 염태영은 수원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참여와 소통을 꼽으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염태영은 참여가 120만 수원시민 모두의 참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참여와 공공선에 대한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역시 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참여의 사례로 마을 만들기, 마을기획단, 도시기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법정, 500인 원탁토론, 시민창안제 등 10여 가지를 언급하며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0개 이상의 셀 조직이 형성되었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주체적 노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였다.¹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염태영 시장이 주민참여를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갖춘 주체적 참여’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120만 수원시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

10) 「수원시장 염태영」, 『서울행정학회 포럼』 3호, 2014, 28~29쪽.

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 가능한 사람이 참여의 주체가 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물론 120만 시민이 모두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갖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매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공공선에 대한 헌신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국 공공선이 참여를 제한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조율이 가능함을 강조했고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모두 자유주의의 기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롤즈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요컨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적 이익과 분리된 공적 이익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은 어떻게 성립가능한가. 사실상 공공성이란 텅 빈 기표에 가깝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공선이란 보장은 없다. 사회적 적대와 갈등으로 갈라진 사회에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공공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 멸사봉공이란 말이 회자되는 조건이란 곧 빙공영사(憑公營私)가 번성할 토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선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란 설명이 가능하다. 즉 특수이익의 일반 이익화가 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이해관계가 모두의 일반적 이익이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정치적 능력인 셈이다. 그렇다면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란 “공공선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춘 사람들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보상 없이도 쉽지 않은 정치적, 행정적 언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과거 시의원 자리를 지역사회 유지들이 독점했던 것과 유사하게 재산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자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민 배심원단 구성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 배심원단이 지역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력풀을 만들고, 갈등이나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결국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이 얼마만큼 시정에 비중 있게 검토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의사 프로세스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10%만 참여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원의 경우 1%의 참여도 안 된다는 진단이었다.¹¹⁾

시민참여의 저조는 거버넌스의 지속성에 큰 장애요인이었다.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보자. 과거 도시정책은 행정(공공), 전문가가 주체가 되고 시민참여가 배제되는 하향식이었다. 이런 도시정책에서 탈피해 협치(거버넌스)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으로 도입된 것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었다. 전국 최초로 2012년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이후 시민이 다양한 도시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통해 상수원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개점 등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시도는 아쉽게도 일회성 사업으로 그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러한 뜻을 공유하는

11)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염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행정 실천가가 없었던 점을 꼽았다.¹²⁾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의 2015년 주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과 ‘수원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이었다.¹³⁾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2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체는 ‘민관 협동개발(39%)’, 종사자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사자의견수렴선행(33%)’과 ‘여성종사자 자립계획 마련(27%)’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렇듯 시민계획단의 역할은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는 경향이 컸다. 시민계획단의 구상과 의견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정 실천가의 부족이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과의 협치는 기존의 행정제도가 움직이는 방식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행정조직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시민과의 협치는 절차와 과정도 번거롭고 여러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기에 업무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효율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행정 풍토에서 이러한 느리게 가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거버넌스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사회갈등으로 노사문제가 있다. 수원시에서는 이 문제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풀어 가고자 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勞), 기업(使), 시민(民), 지방정부(政) 대표자가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체계)를 위해 활동하는 사

회적 대화 협의체로 조직되었다. 2011년 최초로 구성되었지만 그 모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였다. 2001년엔 ‘경제발전수원시민협의회’로 개칭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2010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거 공식협의회로 창립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다. 수원 역시 그 영향 하에 있었지만 노사정에 ‘민’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민은 곧 시민을 의미하는데,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력을 거버넌스로 연결시키고자 한 시도로 이해된다. 노사정위원회는 독일 사례를 참조한 것인데 한국과 독일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그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독일은 강력한 산별노조를 배경으로 노사 공동결정제도가 작동해 노동자들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한국의 경우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였기에 정치적 부침이 클 수밖에 없었다. 즉 노사 동수로 구성된 독일과 달리 한국은 노사에 정부 그리고 수원에서는 시민대표까지 포함되어 노동 지분은 4분의 1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정부와 시민대표가 노동자에 우호적인 경우라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키워 왔다. 노사 간의 비대칭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함께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졌다. 결국 거버넌스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차원에서 모든 시민은 동등한 주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사회적 존재들이다. 노동자-시민과 자본가-시민이 동등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버넌스와 공

12)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염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13)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성매매집결지, 주변지역 연계 전면개발 필요”」, 『수원인터넷뉴스』, 2015년 10월 5일.

공성이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임은 염태영 시장도 잘 알고 있다. 특히 부동산 폭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해관계 집단들이 너무 세져”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¹⁴⁾ 거버넌스의 토대가 될 시민사회가 사적 이해관계로 나뉘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보다 종종 사법권력에 호소하는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의 경우에도 행궁동 생태교통 축제 등 여러 건으로 고발이 이루어져 감사원 감사와 검정의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일종의 정치의 사법화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었다.

거버넌스 구축이 쉽지 않은 일임은 고양시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고양시의 경우 2010년까지 지역 차원의 참여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에 2010년 최성 시장의 당선과 함께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메타 거버넌스 기구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시민단체와의 공동 목표가 희미해졌고 시장은 민관정 거버넌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보다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잠재적 혹은 가시적인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돌파하는 데 무력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즉 시민참여의 질적 제고에 힘쓰기보다 각종 위원회나 사업에 외부의 명망가나 기관을 끌어들이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였다. 게다가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대신 실무자 1인 체제

로 운영되어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창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주민들과 환경보호와 취수원 유지를 강조하는 환경단체 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을 시가 나서 대화를 유도하고 타협책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 일부를 해제하되 그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문제해결의 요체였다.

여기에 주민지원대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일반 지원사업과 함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주택개량 자금 지원,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전기료 및 의료비, 정보·통신비 지원, 고용창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된 것이 중요했다.¹⁶⁾ 당시 주민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광고주민들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이전, 용도변경에 대한 재산권 규제에 관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농업 행위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¹⁷⁾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결국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또 이것을 가능케 할 실질적 지원대책이 결합되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요컨대 대화를 통한 거버넌스 창출과

14)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염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1.

15) 오수길 외,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2017, 168~169쪽.

16) 최석환 외, 「광고상수원보호구역제도개선 및 주민지원방안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2018, 79쪽.

17) 최석환 외, 「광고상수원보호구역제도개선 및 주민지원방안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2018, 70쪽.

함께 실질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공사례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문제이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는 수원시의 해묵은 문제였다. 2015년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서도 한 번 다루어졌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본격적 해결의 출발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수원시는 첫 갈등진단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예측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였다. 크게 토지·건물 소유자, 업주 성매매 종사자, 지역주민,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해관계자로 구분되었다. 이에 2019년 3월 갈등관리 전문가 검토회의를 진행해 대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성매매 종사자 출구전략 마련 등을 제안했다.¹⁸⁾

이러한 의견을 기초로 1단계는 집결지 내 도로개설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2단계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3단계는 업종 전환, 지역 개발 등 3단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으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여기에 경찰도 적극 협력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결국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여성정책과, 팔달구 등 현장 실무자,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진다.¹⁹⁾

실제 수원시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언론홍보를 위해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와 주

요 이슈 선점을 위한 기획 보도”를 추진했고 수원 iTV를 통한 시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규합해 조직화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수원역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재개발 조합 등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연대’가 결성되었고, 2021년 4월 20일에는 수원시민행동,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함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요컨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연결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 2021년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하게 되었고 성매매업주와 주변 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진행한 시위도 해산하게 되어 최종 마무리를 짓게 된다. 이 활동을 주도한 것은 수원시 여성정책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경찰 등의 관료기구였다. 주민협의체에 참가한 한 인사는 “주민협의체에선 그저 여러 담당자 분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결과에 숟가락을 얹은 것뿐”이라고 평가했다.²⁰⁾ 요컨대 시청과 경찰서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전략하에 성매매집결지는 폐쇄되고 재개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발생하고 업주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마찰 없이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수원시정의 큰 성과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성매매라는 오래된 문제부터 도심 재개발 문제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성매매는 윤리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문제였고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의지만 있다면 행정과 사법 차원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지속된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

18) 수원시 여성정책과, 『올림-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2021, 126쪽.

19) 수원시 여성정책과, 『올림-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2021, 129쪽.

20) 수원시 여성정책과, 『올림-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2021, 173쪽.

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사람들은 구매자들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현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풀거든요. 자신의 찌꺼기를 우리한테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못하는 짓을 우리한테 와서 푸는 거죠.

지배욕이거나, 자기 능력의 확인, 과시욕 같은? 손님들은 30대 이상 유부남이 제일 많거든요. 이진 ‘성욕을 풀 데가 없어서’ 성매매한다는 말과는 맞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줘야 하는 거죠. 돈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꼭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착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너희들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어요.”²¹⁾

인용문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했던 종사자들의 말이다. 이들의 말이 성매매의 모든 측면을 보여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들의 언어는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에 어떤 진실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들의 말은 수원시 관문격인 역전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성매매업소가 유지되었는가에 의문에 일정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성매매도 수요와

21) 수원시 여성정책과, 『올림-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2021, 187쪽.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수요의 측면은 성매매집결지 해결과정에서 거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성매매의 목적은 단지 성적 욕구의 해소가 아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찌꺼기, 능력의 확인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는 사회적 현상에게 가깝다. 성매매는 생물학의 문제이기 이전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행정과 사법의 역능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거버넌스 창출능력이었다. 여론전을 기획 실천하고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우호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도로정비, CCTV 설치, 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성매매집결지를 일거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자치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행정과 사법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거버넌스를 ‘행정-협치’로 번역한 셈인데, 그렇다면 성매매집결지 해체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의 증대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업적’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행정-사법 당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오래된 골칫덩이를 해치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말을 보건대 문제의 해결이 새로운 문제의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회의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하락, 버려야 될 찌꺼기들의 양산 등은 성과 돈의 교환을 통해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이라 보인다. 물론 행정과 사법체계가 시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최소한 거버넌스가 행정의 필요에 따른 시민의 동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컨대 존재하는 성매매집결지를 척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장소가 필요 없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분명 성

공했지만 또 다른 과제를 던져 준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인문학사업이 주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정목표를 ‘휴먼시티’로 정하였다. 사람이 도시보다 먼저라는 의미이다. 염태영 시장은 특히 인문학을 통해 수원을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 목적을 경제 발전으로 사라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수원시 인문학사업은 2011년 5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1단계로 인문학 기반 조성사업이 2014년까지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2단계로 인문학 대중화사업이 2018년까지 7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2020년 3단계로 인문학의 생활화사업이 6개 분야 44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수원 인문기행 특구, 왕이 만든 도시 역사기행, 근대 역사기행, 문학기행 등이 추진되었다.²²⁾ 또한 이러한 인식하에 팔달구청 성 내 설치, 행궁동광장의 미술관, 행궁동에 한옥 메카 개념 적용 등을 구상하고 실천하였다.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시민 참여 현황은 2011년 30만 8,6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140만여 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투입예산은 1,880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2010년 8개였던 수원시립도서관은 민선 5~6기를 거치며 두 배 이상 늘었고 보유 장서 수(79.9% 증가)와 이용 시민 수(54.3% 증가)도 대폭 증가하였다.²³⁾

인문학 사업의 목적은 분명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른 폐해 극복과 공동체 복원이 핵심이었다. 즉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각자도생을 도모해야 되는 현

실에 대한 강렬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된다.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기적 본능의 과잉을 경계하며 이타적 본능과 연대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 능력주의로 포장된 야만의 경쟁 대신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될 수 있는 삶, 기능과 역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빛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인문학의 지평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휴먼시티와 인문도시 조성의 어울린다고 보기 힘든 정책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CCTV 설치사업이 있다. 과거 300개 정도에 불과했던 CCTV가 염태영 시장 재임을 거치면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수원은 단위면적당 CCTV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를 우려하면서도 염태영 시장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CCTV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며 경찰 신고 및 출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CCTV 화면이 뜨고 추적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부대와도 연결되어 군부대 통합방위 시스템의 일부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자동화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이 시스템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 가운데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AI 시스템으로 자동 모니터를 하여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사진에 담긴 범죄 유형도 자동으로 색출해낼 수 있고, 범법 차량까지도 다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만취해서 벤치에 누워 있는데 범죄자가 지갑을 뺏아 가는 장면이나 데이트 폭력 장면 등도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포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자동차들이 나란히 서 있는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문을 하나씩 열어 보

22) 「수원 인문기행특구」 지정, 2024년까지 연장, 『경기&뉴스』 2021년 8월 30일.

23) 「수원, 인문학을 품다 ①, ②」, 『오마이뉴스』 2014년 4월 24일.

고 가는 장면도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⁴⁾

이는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 수원시 인권조례를 만들고 전국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모습과 어색하게 연결된다. 본인 스스로도 CCTV 확대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안보와 질서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했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도 불사했던 숭한 역사적 선례들이 있다.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모순적이고 복잡한 관계는 여러 모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다. 국가의 행정·사법 권력 체계는 사실상 최고의 공권력이자 유일한 조직적 폭력이다. 그 힘이 너무 강력한 만큼 위험한 것이기에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위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어 왔다. CCTV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국가가 보유한 거의 모든 권력의 감시망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과의 결합은 그 효율성을 배가시킬 것이기에 더 큰 인권 침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공상과학 영화나 미래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린 영화나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상상을 초월한 감시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CCTV가 데이트 폭력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CCTV 촬영 하에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인권과 안전을 선택의 문제 또는 제로섬 관계로 만들 위험성이 다분하다. 자유와 인권을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공안의 논리가 득세할 위험성도 엿보인다. 더욱이 과학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우려된다.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를 너무도 손쉽게 이겨 버릴 정도로 인공지능의 위력은 벌써 인간을 초월해 버렸다. 과학기술과 테크

노크라트가 통치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술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단지 기술적 문제로 처리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염태영 시장은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 학생 개개인의 식성과 건강상태까지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경험을 얘기할 정도로 인권에 민감하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존중받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상당히 인상적인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맥가이버 차량과 같은 꿈꿈하고 구체적인 복지정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CCTV 확대 정책은 묘한 부조화를 이룬다. 개인별 맞춤형 급식과 복지정책이 무차별적 CCTV 확대와 결합된 양상은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농장주 인간을 몰아낸 동물들의 공동체가 어느덧 인간의 지배질서를 반복하게 됨을 우화적으로 그려낸다. 이른바 혁명에 대한 환멸을 잘 보여 주기에 미국 CIA가 나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에 노력했을 정도의 작품이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운동세력이 권력의 담당자가 된 이후 과거와 동일한 운동을 전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된 운동이 과거 권력으로 수렴되는 것만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근대 사회를 군주와 피치자 사이의 계약으로 설명한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국가를 리바이어던으로 지칭하였다. 그가 괴물에까지 비유한 국가 통치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바로 공포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가 되는 자연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묘사된 자연상태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괴물과 같은 국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자연상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폭력에 기댄 사회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직적 폭력을 국가에 독점시킴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몰아낼 수 있다는 근대적 기획이기도 하다. 나아가 근대 국가는 죽음을 불모로 한 폭력이자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이기

24)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도 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간의 삶을 관장하겠다는 국가의 기획은 그 권력의 방대한 확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서류화되어야 하며 행정 처리에 활용되어야 한다. 죽음을 부과하는 권력 이자 삶을 돌보는 생체권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푸코는 그 기초를 일망감시 체제(pan opticon)로 설명하였다. 공리주의자 벤담이 고안한 팬 옵티콘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차가운 계산법을 제시한다. 베버는 근대 관료제의 합리성을 강철 새장(iron cage)에 비유하였다. 안전하고 튼튼하지만 자유는 없다.

국가 행정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에 비례해 늘어난 국가권력은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로 견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권분립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고안되었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비판적 인식이 중요하다. 인문학의 비판정신은 이러한 맥락에서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문정신은 곧 비판정신이다. 거버넌스가 행정권력의 확장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로 한 감시체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비판정신이 필요하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가능해야만 한다.

인문도시와 관련해 염태영 시장 재직 시 수많은 문화 및 복지시설들이 건립되었다. 그런데 상당수 시설들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SK아트리움, SK 청솔노인복지관 등에서 보이듯이 대기업 명칭이 들어간 것들이다. 수원SK아트리움은 SK케미칼 공장 이전과 함께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 주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건립하게 되었고 현대산업개발은 권선구 아이파크아파트 건설을 통해 나온 이익을 시에 환원하는 형식으로 미술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였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기업의 사회 환원이란 차원에서 장려해야 된다고 주장하

였다.²⁵⁾ 기업 명칭이 들어간 문화시설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한 시민단체는 판다곰을 그려 놓고 미술관을 기업에 '판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사회 환원의 근거가 된 기업의 이윤이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주거나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를 투입해 기업을 지원해 준 셈이 된다. 애초 공장용지로 허가받아 공장을 가동해 충분히 이윤을 냈다면 다시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것이 맞다. 공공기관이 공장용지 가격으로 매입해 필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통해 재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장 가동을 통해 충분히 이윤을 확보했음에도 다시 용도 변경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논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은 토지사유제가 기본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이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공장용지는 공장 가동을 통해 이윤을 내는 것이 맞지 부동산 시세 차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령 현실적 여건상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명칭에 기업명을 넣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은 용도 변경 하나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본 상황이기에 무상 기부채납은 당연하며 시설의 명칭을 통해 보상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용도 변경 하나로 획득하게 된 이윤은 정당한 기업 활동의 결과라고 보기 힘들며 토지가격 상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관련 법률은 초과이윤의 환수를 보장하기도 했었다. 이

25) 『고백 :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러한 맥락에서 기업 명칭이 들어간 공공시설이란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대자본의 힘만 키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4. 민선 5~7기의 복지정책과 환경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복지이다. 돌진적 근대화, 압축성장 등으로 불리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모든 사회적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었기에 사회복지의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20세기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의 역사 속에서 21세기 복지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배태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한국 자본주의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고 21세기 들어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생산력의 폭발적 확충과 함께 부의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본격화했고 기존의 불평등 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이 그 과정을 주도했음은 일종의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2차대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복지가 크게 진전된다. 2차대전 자체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인 측면이 강했고 특히 1929년 대공황 이후 파멸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전후 냉전질서는 사회주의권의 급팽창을 기본 조건으로 했고 이에 맞서 자본주의 진영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1942년 발간된 영국의 베

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었다. 전쟁과 사회주의에 맞서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국민적 통합을 위해 영국 노동당 정권의 고심에 찬 대안이 곧 사회복지의 전면적 확대와 강화였다.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전후 자본주의 질서는 전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사회복지 확대의 물질 토대를 갖추게 된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팽창했고 급기야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 정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한다. 이러한 모순과 위기의 대안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팽창하게 된다. “사회 따위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로 대표되는 대처정권의 신자유주의는 레이거노믹스와 연계되어 신자유주의 흐름을 주도했는데, 한국 역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제2차 오일쇼크와 중화학 공업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겹쳐 1979년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 4월에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시책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원칙하에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매우 미약한 복지체제가 개발연대기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변변한 복지제도가 없었다.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었고 공무원 등 특수연금이 있어 체면치레는 했지만 보통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었다. 한국의 개발체제는 한 마디로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힘에 부쳐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었다. 사회복지 대신 한국에서는 가족복지가 대세였다.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고 모든 문제를 오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환위기를 만나게 된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의 아비규환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수습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역할을 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IMF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압박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IMF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수십 수백만의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한국 사회의 삶이 망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상징이 자살률의 폭증과 출생률의 극적 저하였다. 죽음에 내몰리는 삶 속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마저 사라져 갔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읊은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구처럼 악마의 뱀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뱀들에 깔려 깔려 나가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발버둥치는 삶이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되었다.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현재의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비극이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와중에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하게 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실 한국의 위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위기는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었고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 전반의 문제로부터 야기된 것이란 설명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기 파괴적 행보를 이어 왔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피케티에 따르면 1980~2018년 세계적 규모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코끼리 곡선

을 보여 준다. 이 곡선은 주로 신흥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하층의 완만한 상승, 부국 중위계급과 인민계급의 쇠퇴 그리고 상위 1%의 급성장으로 특징된다. 2018년 하위 50%의 소득은 12%인 반면 상위 1%의 소득은 무려 27%를 차지하였다. 하위와 중위 사이에는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중위와 상위 사이는 급격하게 벌어졌다.²⁶⁾

피케티가 분석한 시기는 바로 레이건과 대처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과정과 정확하게 겹쳐진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구적 확산의 결정적 조건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의 혁명적 분위기가 급속하게 쇠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질서 수용에도 결정적 조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이를 ‘역사의 종말’ 운운하며 절대적 변화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이었던 역사적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 세계를 횡행하였다. 대안이 사라진 마당에 현재의 절망이 미래의 희망처럼 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폭발적 성장은 노동자를 위시해 전체 임노동층의 실질임금을 크게 증대시켰고 이것이 1990년대 소비문화 확산의 물질적 기초였다.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외환위기라는 폭풍전야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1980년대의 혁명을 넘어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대안처럼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주지하듯이 사회주의 체제 몰락 10년이 채 안

26) 토마 피케티(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42~43쪽.

되어 외환위기가 터졌고 한국 자본주의의 좋았던 시대도 저물게 된다.

서구와 미국의 자본주의가 1~2차대전을 겪고 대공황을 거치며 침체화되는 내부 계급투쟁을 완화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집중적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한 반면, 한국은 이를 전면 배제하고 모든 자원을 생산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다시 피케티에 따르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체제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해 가능하였다. 개입의 유력한 수단은 세제였는데, 1932~1980년 사이 소득세율은 미국이 평균 81%, 영국은 무려 89%에 달하였다. 같은 시기 독일은 58%, 프랑스는 69%에 이르렀는데, 이를 통해 확보된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의 반동 이후 이 세율은 미국은 30~40%, 영국은 40~4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²⁷⁾

한국은 현재까지도 평균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 국가들 중 한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없다.

〈표 1〉 2019년 조세 부담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2020년판), e-나라지표에서 재인용

27) 토마 피케티(안준범 역),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48~49쪽.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주요 국가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 조세는 가장 민감한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기에 정권으로서도 큰 부담이 된다. 예컨대 1977년 부가가치세제의 전격 시행과 1979년 부마항쟁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생들의 시위에 시내 중소 상인들이 대거 합류하고 지지를 보낸 이유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와 조세 둘 다 포기하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조세 부담률이 낮더라도 여타 사회 안전장치가 튼실하다면 애기가 다를 수 있다. 즉 세금과 함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이 포함된 국민 부담률이 높다면 사회적 안전도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률과 연동되는 결과를 보여 준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민 부담률도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국가별 국민 부담률 변화

(단위: %)

국가별	1972	1980	1990	2000	2010	2019
한국	12.1	16.5	18.4	20.9	22.4	27.4
일본	19.9	24.5	28.2	25.8	26.5	—
캐나다	29.9	30.3	35.1	34.7	31.0	33.5
미국	24.5	25.6	26.0	28.3	23.5	24.5
덴마크	39.1	41.2	44.4	46.9	44.8	46.3
프랑스	33.6	39.5	41.2	43.4	42.1	45.4
독일	33.6	36.4	34.8	36.4	35.5	38.8
이탈리아	25.3	28.6	36.3	40.5	41.7	42.4
네덜란드	35.4	39.7	39.7	36.9	35.7	39.3
노르웨이	38.6	41.9	40.2	41.7	41.8	39.9
스웨덴	37.1	43.1	49.0	48.8	43.1	42.9
영국	31.6	33.4	32.9	32.8	32.1	33.0

출처: 국가통계포털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 모두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거대한 충격파가 개인에게 가하는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민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 2010년까지 38년간 겨우 10% 남짓 올라갔던 국민 부담률이 9년 만인 2019년까지 5%가 올라갔다. 9년간 5% 상승은 38년 간 상승분의 거의 네 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2020에는 다시 0.7%가 올라 28.0%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이 0.1% 오른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지만 여전히 평균인 33.5%와는 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8개국 가운데 덴마크(46.5%), 프랑스(45.4%), 이탈리아(42.9%) 등 선진국이 선두권을 차지했고, 3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5.5%), 터키(23.9%), 코스타리카(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 등 10개국이었다.²⁸⁾ 국민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민선 5기를 통해 경기도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 등장한 사람 중 복지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간의 관심을 끈 대표적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리낌 없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많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의 핵심은 각종 복지정책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나섰고,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각종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을

28) 『한겨레신문』 2021년 12월 6일.

이끌어내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대상이 된다. 또한 복지정책 시행이 가로막히면 시의회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하여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결국 재정문제이다. 재정 여력이 복지 확대의 관건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담당자들의 태도가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 아무리 재정 여건이 좋다 해도 정책 담당자들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거나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복지확충은 쉽지 않다. 한국 사회는 최근 복지문제에 관한 한 매우 급진적 인식 전환을 보여 주었다. 외환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진보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꾸준히 복지 확대를 내걸고 활동해 온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무상급식 논란과 급속한 확대 과정이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중요한 복지 의제가 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한국의 복지정책 역사에 획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인식의 전환은 복지재정의 확충을 가져오게 했으며 또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수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다. 2013년 154조 4,000억 원이었던 지방재정 지출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는 230조 7,000억 원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 수입 규모도 145조 4,000억 원에서 208조 4,000억 원으로 상승했지만 오히려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시기 통합 재정수입은 6.2% 증가한 데 비해 통합 재정지출은 7% 증가하여 적자 규모를 키우게 된다.²⁹⁾

29) 백정미,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 효율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9, 14쪽.

지방재정의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워낙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단시일 내에 해결된 전망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현재 8:2에서 6:4로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세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전해 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자체 수입보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79.5%에서 2019년 74.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

2018년 지방정부의 기능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지출이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9.0%, 환경보호 8.9%,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이 각각 7.0%, 2008년 18.9%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지출은 30%를 넘기게 되어 최대 지출항목이 되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이 59.1%를 차지해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렇게 지방재정에서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수원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은 2014년에 5,518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6.99%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에는 8,212억 원으로 40.53%를 차지하였다. 수원시의 전체 예산은 2014년 1조 9,616억 원에서 2018년 2조 7,292억 원으로 2014년 대비 7,675억 원이 증가하여 8.7%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³¹⁾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문제가 시정의 핵심과제로 등장하는 시점도 2010년을 전후해서이다.

30) 백정미,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 효율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9, 18~20쪽.

31) 백정미,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 효율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9, 31~41쪽.

2008년 김용서 시장의 시정방침으로 교육, 지역경제, 녹색환경, 나눔 복지, 문화관광 등이 제시되었는데, 2010년 역점 시책은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교육, 자연친화적 미래 환경도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행복도시, 세계인과 함께하는 문화 스포츠 도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대중교통, 열린 시정 등으로 복지가 누락되었다. 즉 상황에 따라 복지문제는 유동적으로 취급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이 2011년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캐치 프레이즈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었고 이는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사람 중심과 환경, 미래, 경제활력, 안정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보편적 복지, 차별 없는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로 정리된다.³²⁾ 2014년 시정 성과는 복지라는 키워드로 정리되었다. 즉 경제복지, 사회복지, 주거복지, 교통복지, 환경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광역복지 등 모든 영역의 시정이 복지 개념을 키워드로 재규정되었다.

2015년 시정계획 역시 안전, 고용, 복지, 미래, 교육문화, 시민주인, 교통 등으로 정리되었는데, 복지문제가 세 번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따라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정, 만성적인 청년 실업문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시정운영 방향 역시 경제, 복지, 미래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³³⁾

예산이나 시정방침을 보건대 2010년 민선 5기 이후 복지는 지방행정의 핵심 화

32) 수원시, 『2011 시정계획』, 2011.

33) 수원시, 『시정계획』, 각 연도 참조.

두가 된다. 여기에 휴먼시티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매우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돌보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넘쳐난다. 일명 ‘맥가이버 차량’으로 불리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자가 출동해 전기와 전자제품, 배관, 소규모 집수리, 보일러 수리, 도배 등 온갖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다자녀 휴먼주택 사업도 있다. 8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4자녀 가구 대상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대상 가구 상황에 맞는 주택을 물색해 수리한 다음 입주시켜 주는 사업이다.³⁴⁾

그럼에도 수원시의 복지정책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등 복지 관련 새로운 이슈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적 차원의 복지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작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전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킴으로써 복지문제를 한 차원 높여 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간 것은 차라리 부수적 효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이슈들은 애초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통해 제시된 것들이 태반이다. 무상급식이 그러했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환경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고민들이 정치와 행정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달리 보면 정치권이 사회운동이 힘들게 만들어낸 아젠다와 이

34)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슈를 선점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젠다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실현일 것이다.

게다가 수원시는 재정 여건이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나쁘지 않다. 2018년 기준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55.7%, 재정자주도는 65.9%로 50만 이상 유사도시 15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³⁵⁾ 수원의 경우 지방세 중 삼성전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매년 변동 폭이 크기에 상당한 불안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방재정의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활용해 좀 더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 개발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한국의 경우 어느 지자체가 정책 하나를 개발해 도입해 효과를 보면 곧바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간 전파 속도가 빠르고 넓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한국의 복지정책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이고 새롭게 창출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당장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곤란하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도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불과 몇 년 만에 사회적 상식이 될 정도로 복지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진 현실에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예산 집행에서 행사성 축제 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교육청의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포함할 경우 수원시는 행사·축제경비로 약 335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전체 예산의 0.48%로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2위를 기록한 화성에 비하더라도 1.9배나 높은

35) 백정미,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 효율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9, 43쪽.

수준이다.³⁶⁾ 이러한 상황은 휴먼도시, 인문도시 등을 내세운 염태영 시장의 시정방침과도 무관한 않아 보인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가 수원의 특이성을 살린 시정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행사와 축제는 일회성 성격이 짙기도 하고 시민들의 복지와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문화적 교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야 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생존과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면 애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는 단지 시혜가 아니다. 지자체가 돈이 많아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나누어 주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지방행정 당국은 당연히 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결국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행정당국의 정책 이상이기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담보해 주고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공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한 것이 현재의 한국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가 미국과 서구의 경험을 단순 반복한 것이 아니듯이 한국의 복지와 사회적 불평등문제도 여타 국가의 경험을 참고하되 단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 국가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을 보건대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과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말해 현재의 초저 출생률 문제만 보더라도 복지가 얼마나 화급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 준다. OECD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자살률도 그렇지만 출생률은 한국 사회의 생물학적 파업이라고 보일

정도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은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 보인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했다고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할 틈도 없이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면 도대체 산업화와 민주화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조차 삶을 접어 버리는 경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도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복지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개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염태영 시장의 오랜 화두임이 분명하다. 1990년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여러 환경문제를 이슈화하고 또 시민운동을 통해 정력적으로 실천해 왔다. 수원천 복개문제는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염태영 시장은 ‘환경시장’이라고도 불린다. 그 자신 환경운동가 출신이지만 재임기간 내내 ‘환경수도’를 수원시의 중점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민선 5기 초반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도시 선언을 한 이후 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³⁷⁾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그 노력들 중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2013년 9월 한 달간 수원화성 안 행궁동에서 자동차를 없앤 실험은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일회성 축제로 끝났고 지속적인 생태교통 정책은 미약하였다. 트램 도입이 후속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생태

36) 백정미, 「수원시 재정여건 변화와 재정 효율화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2019, 123쪽.

37) 「지난 11년간 상생과 동행으로 수원시정을 이끈 염태영 수원시장,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정 정책들, 인문학으로 발전시킨 수원의 정체성」, 『CNBNES』 2021년 6월 29일.

교통을 내세웠던 이 축제는 행궁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행궁동에서 진행한 생태교통 축제나 한옥 등 주택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카페 거리가 조성되는 등 행리단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살벌한 분위기마저 띠게 된다. 애초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자 추진했던 사업 결과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갈라놓은 꼴이 돼 버린 셈이었다.³⁸⁾

게다가 환경과 생태는 문화와 역사정책과 충돌하기도 했다. 구도심인 화성 성곽 내 지역은 방화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의 용도지구로 결정되었고 3층으로 고도가 제한되었다. 역사문화도시의 핵심지역으로서 문화재 복원, 공공공간 정비, 문화관광 등을 포함하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화성홍보관과 화성박물관, 주차장 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과정에는 거주권뿐만 아니라, 소음 매연 주택개량제한 등 주거환경의 질을 침해받았다. 2008년에는 오랫동안 규제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을 포함했던 화성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취소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행정과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³⁹⁾

나아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개발주의가 환경문제와 충돌할 위험성도 다

38)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39) 최지연, 「지역활성화 과정에서의 갈등 연구 - 행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2019, 22~23쪽.

분하였다. 염태영 시장은 스스로 가장 아쉬운 점으로 3개 시 통합 무산과 서수원 R&D센터 무산을 꼽았다. R&D센터가 들어왔으면 IT기업들이 입주하고 서수원 개발이 많이 빨라졌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왕송저수지부터 산업단지까지 전체가 개발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쾌적한 연구산업단지 거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었다. 이 외에 도시교통 구조를 버스에서 트램으로 바꾸는 것도 아쉬운 것 중의 하나였다. 그는 거리 경관을 바꿈으로써 도시와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⁴⁰⁾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서수원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을 위해 생태교통을 적극 고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발과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큰 거부감이 없는 모습을 통해 지방행정의 고충이 느껴지기도 한다. 즉 여전히 한국은 개발주의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으며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시장’을 내세운 12년간의 시정이 발전과 환경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대해 무언가 과감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의 공유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수원시의 공유사업은 ‘공유수원’이라는 수원시의 플랫폼에 전체 상황이 잘 나타난다. 물품(14개 항목), 공간(7개 항목), 교통(2개 항목), 지식 및 재능(7개 항목)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뉜 30가지의 공유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⁴¹⁾ 공유사업은 사적 소유권을 근간으로 성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 중요한 참조점을 제

40) 「민선 5~7기 12년, 4,3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염태영 시장 구술자료집), 2021.

41)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두 배 됩니다」, 『현장에서 들려 드립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22.

공하기에 최근 큰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수원시가 간행한 공유사업 안내 책자가 ‘소유에서 공유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는 사적 소유권의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적 소유권은 가히 신성불가침이다. 그 역사적 뿌리도 깊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농경지와 대지 등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근대 이후 사적 소유권이 본격 확립된 유럽과도 구분되는 특징이다. 메이지유신 이전까지 일본은 토지 영구매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무라(村)로 불리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토지소유가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영국의 근대를 상징하는 엔클로저 운동은 공유지의 사유지화를 통해 비로소 사적 소유권을 확립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당시 사유지가 된 과거 공유지에서 동물을 사냥하다 적발된 밀렵꾼에 대한 처벌은 사형까지 가능했는데, 이는 그만큼 사적 소유권의 사회적 확립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웅변해 준다.

한국의 근대법적 사적 소유권은 식민지시기 토지조사사업과 민법 시행을 통해 확립된다. 해방공간 격렬한 좌우대립 속에 사적 소유권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미군정과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남한의 기본적 소유제도는 사유재산제로 귀결된다. 특히 농지개혁과 적산불하는 수백만의 사적 소유권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사유재산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과 제도적 정비가 이후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기본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물론 국가 주도의 산업화시대에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적 소유권이 제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적 소유권은 개인 자유의 핵심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기서 사적 소유권의 폐해를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토지 국유화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노태우 정권이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고자 했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음은 분명하다. 재산 소유의 자유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파생시키는 문제는 사회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끌 정도로 위험하다. 최근의 부동산 위기만 보더라도 문제의 근저에 사적 소유권이 놓여 있다. 자연의 소유인 토지가 과연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수원시의 공유사업들은 분명 사적 소유권이 파생시키는 제반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지와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자전거와 장난감 같은 일상의 도구들은 물론이고 사무실과 같은 공간 심지어 재능과 지식 같은 무형의 인간능력까지 공유될 수 있다는 경험은 사적 소유권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사유를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된 세계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여겨지게 된 상황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만 공유가 소유와 대립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공유는 소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소유의 일종이다. 소유는 사유(私有), 공유(公有), 공유(共有), 국유(國有)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공유(共有)는 소유 주체가 복수인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사유 중에서도 공유가 가능하며 공유물은 마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유사업의 대부분은 공유가 아니라 공동이용에 가깝다. 예컨대 자전거 공유는 자전거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이용권을 분점할 뿐이다. ‘서호천의 친구들’이 추진한 공유 공간도 공유(共有)가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이용권을 확보한 것이다.⁴²⁾

공유는 확실히 사적 소유권이 파생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사업들은 이용권의 확산에 그치고 있으며 소유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유(公有)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여 자전거를 사유(私有)하기 힘든 개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북서부 선주민 부족사회 풍습 중 포틀래치(potlatch)가 있다. 더 많은 물질적 재화를 선물하고 소비하며 심지어 파괴하는 능력에 따라 사회적 위계와 위신이 결정되는 독특한 습속이다. 포틀래치 횃수와 규모에 따라 부족장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물질적 재화의 축적과 소유 대신 분배와 나눔이 정치의 기본이게 만든다. 포틀래치를 통해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답례를 해야만 한다. 포틀래치 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이러한 풍습은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 교환 대신 선물 교환이라는 전혀 다른 원리를 작동시킨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보자면 포틀래치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백인 권력 집단이 이 풍습을 금지한 것도 이해될 법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합리성은 경제논리에 기반한다. 합리적 생산과 소비란 최소 비용에 의한 최대 효과, 최대 이익을 의미한다. 공유사업의 대부분은 포틀래치의 비합리성 대신 공리주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건(상품)을 최대한 합리적으

로 사용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공공의 유휴공간을 이용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사업은 확실히 소유 대신 이용과 활용의 관점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그러나 공유사업이 공리주의의 한계를 돌파해 소유 자체를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5. 나오며

민선 5~7기 12년간 염태영 시장의 업적은 화려하다. 3연임 자체가 드문 사례로 그 자체로 큰 업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많은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냈다. 휴먼시티와 인문도시를 내걸고 진행된 수많은 사업들은 수원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음에 틀림없다. 미술관과 도서관이 대폭 늘어나 문화생활의 여건이 뛰어나게 개선되었고 정조 능행차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인권과 행정을 결합시켜 공공기관 건물 건축이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면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하였다.

맥가이버 차량과 다자녀 주거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 행정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복지는 시대적 화두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졌다. 복지와 함께 중심 화두였던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생태교통 축제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큼 성공적이었고 트램을 도입해 고질적인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광고상수원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42) 김희정, 「공유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전개과정과 의미-수원시 장안구 '서호천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모범적인 협치행정 사례를 만들어냈다. 또한 수원시의 오래된 문제였던 수원역 앞의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각고의 노력으로 해결해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12년간의 성과는 다대하였다. 물론 12년간의 성과가 오롯이 개인의 힘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개인의 성과이자 시대적 맥락에서 형성된 리더십의 개개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한국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의 경험이 시대적 화두와 잘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결과이자 거시적으로 보자면 세계사적 영향 속에서 나타난 업적이기도 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압력 속에 민선 5~7기의 역사적 궤적이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염태영 시장 개인의 성숙한 식견과 탁월한 행정 능력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유의 친화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1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요컨대 염태영 시장의 12년은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눈에 띄는 성과를 냈고 어느 시에 견주어 빠지지 않는 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없을 수 없다. 먼저 민선 5~7기는 과도적 성격이 짙었다. 즉 1960년대 이래 발전주의에 입각한 개발행정과 21세기 들어 뚜렷해진 복지·환경행정 사이의 이행기적 특성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개발행정과 복지·환경 행정이 서로 뒤섞여 복잡한 양상을 보여 준다.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가 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감수하면서 개발을 강행하는 정책이 뒤섞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거의 관습과 미래의 전망이 얹혀

있는 이러한 모습은 여타 분야에서도 눈에 띈다. 인권과 인문정신을 강조하면서도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시민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업 명칭을 문화 및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과거의 모든 관습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는 없겠지만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확고한 전망 속에 미래 지향적 시정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의제와 민선 5~7기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부동산 폭등이 있다. 주지하듯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부동산은 최근 들어 유례없이 폭등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좌절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민선 5~7기가 어떠한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했는지 알기 힘들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문제는 서울을 핵심으로 하기에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해 보기 힘들다. 수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폭등했고 그 여파는 지역 전체에 미치고 있다. 사실 부동산문제는 중앙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고 또 정책수단도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큰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혹자는 부동산문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기에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도 않고 또 효과를 보기도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은 전 세계적 문제이기에 특정 국가의 정책 개입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해도 정책 당국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 주거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 시장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해 시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거 안정화를 위한 인간의 시장 개입은 마땅히 필요하다. 공공성이란 사적 욕망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출된 가치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했다고 보인다.

행정은 시민들의 자율적 삶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의 개입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에 비유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시정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은 이것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자 가치이기에 때로는 사적 영역과 간단치 않은 긴장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또한 공공성 자체가 텅 빈 기표이기에 그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공공성은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치열한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100년 전 수원의 공공성과 2022년의 그것이 같을 수는 없다. 오늘날 수원의 공공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민은 결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확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와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의 창출 모두 시민의 정치적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층, 지역 토호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시정을 모색

한 것을 자랑스럽게 회고하였다. 흔히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거나 시민운동을 비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기존 기득권층과의 단절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것이 시장 개인의 결단이나 예외적 사례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활성화된 시민의 정치적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단절의 결단도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학 기획총서 3

염태영의 고백

휴먼시티 수원에서 있었던 일

구 술 염태영
면 담 유현희(수원시정연구원)
박경화(전 가톨릭대학교 인성교육센터 특강강사)
논 고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발 행 일 2022년 6월 1일
발 행 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수원학연구센터
편집 및 인쇄 이원디자인 031-256-2121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19-01
I S B N 979-11-6819-056-6 94060
979-11-6819-053-5 (세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